

인권정보자료실  
R1.1.21

# 인권하루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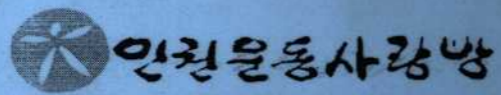
(제2367호 ~ 제2485호)

합본 21호

(2003년 7월 ~ 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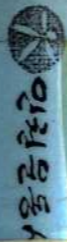
인권하루소식  
(제2367호 ~ 제2485호)

합본 21호  
(2003년 7월 ~ 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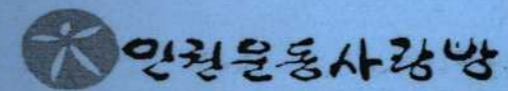


인권운동사랑방

110-522 서울시 종로구 명륜2가 8-29 3층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인권정보자료실  
R1.1.21



인권운동사랑방

# 인권하루소식

2003년 9월

(제2409호 ~ 제2425호)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3년 9월 2일(화)

제 2409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배경내

## “자본의 탐욕 막으려 칸쿤으로”

### 10일부터 WTO 5차 각료회의...반세계화 운동 총집결

초국적 자본의 지배를 거부하고 더 나은 세계를 향한 민중의 직접행동이 또다시 시작됐다.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멕시코 칸쿤에서 열리는 WTO 5차 각료회의를 저지하기 위한 세계 반세계화 운동진영의 움직임이 본격화된 가운데, 1일 국내 민중운동진영도 투쟁 계획을 밝혔다. 전국민중연대와 자유무역협정·WTO반대국민행동은 이날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5차 각료회의 저지를 위한 행동계획을 발표하고 1백여명의 '칸쿤 현지투쟁단'을 발족시켰다.

이들은 칸쿤에서 '멕시코스페이스', '우리세상은상품이아니다' 네트워크 등 국제사회운동단체들과 대규모 시위와 국제민중포럼을 열 계획이다. 또 △세계사회운동총회 △무역과 전쟁 포럼 △멕시코 자유무역반대행동네트워크와의 간담회에 이어, 전세계 동시다발로 개최될 '세계농민 공동행동의 날'과 '국제공동행동의 날' 집회에도 참가할 예정이다. 국내에서도 1일부터 오는 6일까지, 'WTO 반대, 5차 각료회의 저지를 위한 릴레이 캠페인'을 비롯, 6일과 9일에 WTO 반대 집회가 계획돼 있다.

기자회견에서 전국민중연대 오종렬 공동대표는 "세계를 지배하는 초국적 자본의 하위수단인 군사력이 전세계를 휩쓸고 있으며 이러한 초국적 자본의 탐욕과 이익에 의해 다스려지는 것이 우리의 절박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그럼에도 국가가 (이를 저지하기 위해) 나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칸쿤에 가는 것"이라고 현지투쟁의 이유를 밝혔다. 노동자의 힘 이종희 대표는 "현지투쟁단은 칸쿤에서 각료회의를 저지

하기 위한 투쟁을 전투적으로 벌일 것이며, 한편으로 (세계각국의 반세계화 운동세력과) 의견을 나누고 대안을 찾는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각료회의에서는 2001년 4차 각료회의부터 시작된 도하개발의제(DDA)에 따른 새로운 무역체제 출범을 위한 여러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그 첫 번째는 수출보조금과 국내보조(주곡수매제 등)의 감축 등을 목표로 하는 농업협정으로, 이는 대규모 농업자본과

경쟁하는 제3세계 농업의 몰락을 예고하고 있다. 공공서비스의 사유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서비스협정은 교육, 보건의료, 에너지, 상수도, 통신 등을 협상대상으로 삼고 있다. 세 번째 특혜에 의한 배타적 권리의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지적재산권협정은 식품, 의약품, 종자, 전통적 지식 등에 대한 민중의 접근권 박탈이 우려되는 협정이다.

더욱이 전세계적 투자와 금융거래의 자유화를 내용으로 하는 '투자자유화협정'(이른바 싱가포르 이슈 협상)의 체결 시도는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중진영은 "투자자유화협정이 단기이익을 찾아 떠도는 초국적 투기자본의 투전판으로 세계경제를 전락시킬 것"이라고 엄중 경고하고 있다. (고근예)

## “10년의 무게 던져버리고 낮은 곳으로”

### 다산인권센터 10주년 기념행사 열려

수원의 대표적 인권단체인 다산인권센터가 10주년을 맞았다. 지난 달 30일 수원청소년문화센터에서 열린 기념행사는 10년의 활동을 기록한 영상물 상영, 다산인권재단설립 설명회, 동성에 청소년 인권 문제를 다룬 연극, 축하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채워졌다.

다산인권센터는 지난 93년 '김철준·김동균 변호사 사무실' 부설 다산인권상담소로 시작해 노동문제, 공안관련 사건 상담과 법률구조를 맡아 왔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96년부터 노동권, 지역운동, 인권영화제, 인권교육 등 다양한 방면으로 활동을 확대시켰고, 2000년부터 '다산인권센터'로 이름을 바꿔 진보적 인권운동을 지향하는 운동단체로 거듭났다.

행사에 앞서 '지역인권운동단체의 어제와 내일'을 주제로 토론회도 열렸다. 이 자리에는 안산, 울산, 광주 등 각 지역 대표적 인권단체들이 참여해 의견을 나눴다. 재정문제와 관련해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준형 집행위원장이 "빛 남기지 않기"를 원칙으로 재정사업과 후원회비 확대 노력을 꾸준히 해오고 있지만 활동비는 3~40만원을 넘지 못한다"고 털어놓는 등 대부분의 단체가 어려움을 호소했다. 전 집행위원장은 또 "상반기 반전운동과 NEIS 반대로부터 촉발된 정보인권 수호운동에서 보듯 인권운동의 상실적인 전국망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연대사업에 대해 다산인권센터 송원찬 상임활동가는 "기존 서울 중심 인권운동이 법제도 개선 등에서 성과를 거뒀지만, 지역에 천착하는 인권운동이 부족하면 전체 인권운동도 발전할 수 없다"며 "다산인권센터는 지역 민중운동과 연대하여 경제특구 저지, 최저임금 투쟁을 벌였고 지역 환경권, (☞2면에 계속)

① 손상열의 인권이야기 ①

6자 회담 이후 짚어봐야 할 것

북한의 핵과 체제보장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6자 회담이 며칠전 막을 내렸다. 회담 결과를 두고 평가가 엇갈리고 있지만, 대체적 반응은 "아쉽지만, 긍정적인 계기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바람으로 요약되는 듯 하다. 공동합의문도 발표되지 못했고 다음 회의 일정도 잡지 못한 마당에, 이후 노력에 따라 '한반도 정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희망 섞인 관측을 내놓는 것이다.

이러한 관측을 내놓는 논자들은 "대화과 외교적 해결을 위한 추동력이 형성"되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문제에 대한 다자주의적 논의들이 마련된다면, 미국의 일방주의도 어느 정도 견제할 수 있고 한반도에서의 전쟁 가능성 또한 줄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기조연설에서 북한이 밝힌 '핵과 체제보장의 단계별 동시해결방식'도 긍정적인 요소로 이야기되고 있다. '선택포기-후체제보장' 또는 '선택체보장-후핵포기'라는 논점으로 대치해왔던 북한과 미국이 이러한 접근법에 따라 대치상태를 넘어 외교적 해결 경로를 강화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관측인 것이다.

그러나 희망 섞인 관측과는 별개로 짚어봐야 할 문제는 분명히 있다. 중국의 왕이 외교부 부부장이 토로하듯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미국의 태도가 최대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회담에서 미국은 북한의 단계별 해결방식에 상의있는 답변을 내놓기는커녕, 기존의 선택포기-후체제보장 입장을 되풀이했다. 최근 북한이 "6자 회담은 백해무익했다"라고 평가하는 대목도 미국의 이 같은 태도에서 기인한 것일 게다. 결국 "북한의 정권교체"를 공공연히 이야기하는 미국의 입장에 변화가 없는 한, 6자 회담 이후의 과정도 그리 밝을 수만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한편, 6자 회담을 통해 형성된 추동력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어진다 해도 그 과정이 한반도의 평화를 보증하기에는 무척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도 함께 가져야 한다. 무엇보다 다자주의적 논의들이 한반도 평화와 관련하여 의미가 있으려면, 적어도 참가국들의 적극적인 상호군축이 이후의 중요한 의제로 논의되어야 한다. 그러나 미국-일본-남한의 군비증강이 여전하며 이번 회담이 열리게 된 근본적인 동인이 각국의 경제적 이유에 있는 만큼, 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북핵문제가 일단락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전히 불안한 평화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더욱이 미국이 이번 회담의 성과로 "북핵문제에 대한 다자적 압력"을 들고 있는 만큼, 앞으로 다자적 논의들이 외형적으로 유지된다 하더라도 그 내용은 왜곡될 여지가 많을 것이다. 요컨대, 다자적 논의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긍정은 금물이라는 것이다.

더 나아가 안보라는 것이 항상 국가간의 문제로 정의되고, 그것의 해결주체 또한 국가로 설정되는 국가안보론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도 필요하다. 국가의 안전 혹은 국익이 아니라, 구체적인 인간 개개인의 인권으로 안전을 재정의하는 데서 출발해 대안적인 안보패러다임에 대해 상상하고 실천하는 일이야말로 '평화의 권리'에 있어 핵심이라는 생각이다. (손상열님은 평화인권연대 활동가입니다.)

주간인권흐름

(2003년 8월 25일 ~ 9월 1일)

1. 어린이·청소년도 반핵투쟁 나섰다  
부산 학생들이 등교거부 돌입...초등생 결석율 70% 육박(8.25)/ 초등학교 10곳 2~5일간 휴교, 위도선 전원 등교(8.26)/ 부산 위도지역 활성화층 존재 가능성 나타나...지질학자들과 반핵국민행동, 부지 선정 취소 주장(8.27)/ 정부와 '핵폐기장 백지화 대책위' 간 공동위원회 구성 등 배대로 한 공동선언문 채택 결렬(8.28)/ 돈으로 입막음 나선 '한수원', "부산 주민 자녀 고용...멸치 8만 포대 사주겠다"(8.28)/ 윤 교육부총리, "교육 중단 안된다"(8.30)/ 부산 등교거부사태 지속...당국 방침 따라 수업 강행(9.1)

2. 주5일과 맞바꾼 근로기준법 개악  
'주5일' 관련 근로기준법 개악안 법사위 통과(8.26)/ 기아차, 노동조건 후퇴없는 주5일근무제 합의(8.26)/ 경총 "주5일 법안 국회통과 땀 현대·기아차 단협 재협상해야"...각 사업장에 토요일 유급휴가 거부, 약정 휴가일 조정 등 10대 지침 내려보낼 것 밝혀(8.28)/ '주5일' 근기법 개악안 국회 본회의 통과...영세·비정규직노동자들 노동조건 악화 우려(8.29)/ 노동계, 국회 앞 결의대회서 근기법 개악 강력 규탄(8.29)/ 법제처, 개정 근기법 상 임금보전 규정 강제성 여부 논란과 관련 "임금 줄면 형사처벌, 민사상 강제 집행"(8.31)/ 고건 총리 '주5일제 담화'서 "임금보전 강력히 행정지도할 것" 밝혀(9.1)

3. '화물연대', 노 정부 노사정책 시험대  
정부, "화물차 경유세 보조금 중단" 화물연대 파업 강경 대응(8.25)/ 노 대통령, "화물연대 단호 대처" 지시...경찰, 부산 민주노총 사무실에 압수수색영장 발부받아 지도부 검거 나서(8.26)/ 화물노동자 복귀를 공방 이어져...화물연대 "영동 조합원 60명 복귀, 컨테이너 부문 조합원 복귀 없다", 업계는 시멘트 출하 '정상화' 선언(8.27)/ 경찰, 서울 민주노총 본부에 수색영장 발부받아 지도부 체포 나서(8.27)/ 50여개 사회단체, "경찰력 투입 반대, 정부의 성의 있는 대화 촉구" 기자회견 열어(8.28)/ 정부, "내년 '화물' 업무복귀명령제 도입"(8.29)/ 경찰, 화물연대 운송방해 차단 위해 전국 일제검거 나섰지만 검거실적 전무(8.30)/ 경찰, 민주노총 수색영장 연장 발표...화물연대, 주석 '물류대란' 경고(8.31)/ 화물연대, 서울, 부산서 총파업 승리 결의 대회 열고 "정부의 성실한 대화 촉구"(9.1)

(이면에서 이어짐) 반전 평화운동 등 주민과 함께 하는 지역인권운동을 시도해 왔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현황 공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한계와 과제를 짚어보고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인권운동의 새로운 형태를 모색해보는 토론까지 이어지지는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10년이라는 긴 역사의 무게를 의식해 높은 곳을 지향하기 보다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항상 낮은 곳에 시선을 두겠다"는 다산인권센터의 힘찬 발걸음이 기대된다. (장성준)

인권하루소식 창간 10주년 기획 '그때 그 사건' ⑤ 부랑인 수용시설 '양지마을' 사건

육지 위의 노예섬, '양지마을'은 진행형

5년 전인 1998년 7월 16일 아침, 인권운동사랑방등 인권단체 활동가들과 이성재 국회의원 등으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은 취재진과 함께 충남 연기군에 자리한 부랑인 수용시설 '양지마을'에 들이닥쳤다. 인권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인권유린, 비리 문제를 제보받아 긴급 현장조사에 들어갔던 것이다.

창살 잡고 울부짖던 그들

한 번 잡혀가면 '개미고개'라는 공동묘지로 주검이 되어 나올 때까지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없었던 그곳에서 400명이 넘는 '노예'들은 폭력에 시달리며 한달 1만원 안팎의 쉼돈을 월급이라고 받으며 강제노역에 시달리고 있었다. 원생들은 "지옥 같은 곳에서 나오겠다"며 "차라리 감옥으로 가는 게 낫다"고 창살을 잡고 울부짖었다. 그날 1차로 23명의 원생들이 자유의 몸이 되었고, 일주일 뒤에는 원생들이 자발적으로 농성을 하면서 양지마을의 굳게 닫힌 문을 열어젖혔다.

그후 그들은 그곳에서 일한 대가로 통장에 남아 있던 십여 만 원에서 백여 만 원의 저축금을 울분과 술로 탕진한 뒤 뿔뿔이 흩어졌다. 수용시설이 지긋지긋하다며 굶어죽어도 자유롭게 살다 죽겠다던 사람들은 노숙자가 되었고, 화병에 제 몸 하나 돌보지 않았던 이들은 하나둘 죽어갔다. 그들 중 소수만이 연락이 끊겨 죽은 줄로만 알고 있었던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갔다. 역전에서의 강제납치 이후 외부와 철저하게 차단된 감옥 같은 곳에서의 강제노역과 철저하게 짜여진 폭력구조 속에서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16년까지 신음하던 그들은 마침내 자유를 얻었다. 하지만, 당시는 IMF 위기로 실업자가 넘쳐나던 때였으므로 그들에게 월급 적은 직장이라도 얻기는 하늘의 별 따기였다.

경비직을 하는 김아무개 씨는 그래도 나은 편이다. 그들에게 돌아오는 일거리는 기껏해야 노가다나 일용잡직 뿐이었다. 김씨는 "우리는 양지마을에

서 청춘도, 가족도 모두 잃었다. 우리의 인생은 양지마을과 노재중(당시 이사장)에게 모두 빼앗겼다"며 지금도 울분을 삭이지 못한다.

가벼운 처벌, 껌값 배상금

양지마을 출소 원생 33명은 민변의 도움으로 그해 8월 노재중 이사장, 박종구 원장 등을 특수감금과 특수강도, 상해치사, 상해치상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특수감금, 특수강도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았고, 인권단체들에서 주장한 압매장 의혹이나 성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조차 하지 않았다. 법원은 단순히 폭행과 노역비 착취와 국고보조금의 횡령 등의 죄만 인정해 노재중 이사장에게 3년형을 선고했다.

사건 발생 1년 뒤, 양지마을 출소 원생 22명은 다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국가의 관리감독이 철저했다면 이런 인권유린은 없었을 것이고, 검찰이 노재중 씨의 재산을 가압류하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국가가 책임지고 배상하고, 노씨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라는 취지였다.

3년 가까이 끌던 이 소송의 1심 재판부는 국가의 관리소홀 탓에 불법구금과 폭행 등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한 사람 당 25만원에서 5백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강제노역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양지마을에서 폭력으로 작업 등의 서를 받아놓은 것을 근거로 강제적인 노역이라고 볼 수 없다는 어처구니없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원생들은 다시 항소를 하였지만, 아직도 재판은 진행 중에 있다.

소송을 맡은 이덕우 변호사는 "인권단체들이 힘있게 조사해서 폭로해냈더니 납치나 압매장, 성폭행 등에 대해서는 검찰이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 법원도 양지마을을 관계자들에게 관대한 처분을 하면서도 청춘도 희망도 상실한 피해자들에게는 껌 값밖에 안 되는 배상금 지급 판결을 내려 다시 우롱하고 있다"면서 이런 사법부의 태도 때문

에 사회복지시설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나타난다고 꼬집었다.

양지마을의 오늘

양지마을은 사건이 난 뒤 공주 마곡사에서 3년간 위탁 운영하다가 지난해 말 다시 천성원(양지마을 등의 시설을 운영하는 재단으로 노재중 씨는 이 재단의 이사장이었다)으로 운영권이 넘어갔다. 최근 '금이성 마을'로 이름이 바뀐 옛 양지마을을 다녀왔다는 유아무개 씨는 "그때 사람들이 다시 양지마을을 운영하고 있다. 앞에 내세우는 사람들만 바뀌었지 실체는 바뀌지 않았다"면서 옛 양지마을로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노재중 씨가 이름만 바뀐 금이성 마을에 제 집 드나들 듯 드나들고 있다고도 말했다.

또 다른 양지마을, 에바다와 꽃동네

한편, 7년째 사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최근 정상화의 단계에 접어든 평택 에바다농아원의 경우에도 양지마을처럼 비리와 인권유린이 판치던 곳이었다. 우리 나라 대표적인 사회복지시설인 꽃동네에서도 최근 오웅진 신부의 비리 문제가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문제가 되는 시설들은 모두 대형 수용시설이다.

이승헌 에바다복지회 사무국장은 "수용시설을 이용자 중심으로 바꾸어야 한다. 시설을 개방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것과 함께 그룹 홈으로 개편하고, 나아가 시설의 선택권을 시설 이용자에게 주는 바우처 제도와 같은 것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 그래야만 시설을 사유화해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시설장들의 유혹을 차단할 수 있다"면서 정부 복지정책의 근본적인 수정을 요구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을 바꾸지 않는 한 사회복지시설의 인권유린과 비리의 구조는 지속될 것이고, 그 속에서 노예가 된 '인간'들의 믿음은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하기에 우리 사회에서 '양지마을'은 지금도 진행형이다. (박래군)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 “구시대 가담자, 양심선인 뒤 폭행”

### 인천 영하운수 노조탄압 심각·전문 노조파괴단까지 고용

인천의 한 택시회사 노조 대의원 한 명이 비노조원에게 폭행당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피해자 조항기 씨는 현재 의식을 회복했으나, 두개골 골절 등으로 전치 10주의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상태이며, 당시 상황에 관해서는 입을 열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밤 11시경 영하운수 노조 대의원인 조항기 씨는 피투성이 상태로 인천의료원 로비 소파에서 발견됐다. 조 씨를 최초 진료했던 의사 한경훈 씨는 “데려온 사람들이 아무런 조치도 없이 조 씨를 두고 가 약 두 시간 후에야 응급치료를 받았다”고 말했다. 뒤늦게 연락을 받고 찾아온 부인 장모 씨의 신고로 사건 직전 조 씨와 함께 있었던 비노조원들이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폭력혐의를 부인하다 이들 중 박모 씨가 폭행사실을 뒤늦게 시인해 인천동부경찰서에서 구속수사를 받고 있다.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아래 민주택시연맹)은 경찰이 이 사건을 노동탄압이 아닌 개인적 시비로 인한 싸움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면서 “노조파괴를 목적으로 위장 취업한 비노조원들의 의도적 폭행에 대한 신속하고 엄중한 단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택시연맹의 주장은 이번 사건이 사측의 회유로 노조탈퇴서를 쓴 뒤 ‘노조 파괴’와 ‘월급제에서 사납금제·도급제로의 전환’ 등을 목적으로 한 노조 파괴 공작에 가담했던 조항기 씨가 노조 탈퇴서를 다시 찢고 지난달 16일 노조원들 앞에서 ‘양심선인’을 한 이후에 발생한 것이어서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조 씨의 부인 장모 씨는 “남편이 회사쪽 일을 해주는 대가로 매달 150만원씩을 받아왔지만, 노조 부수는 일에 가담하고 난 후 계속 양심의 가책을 느껴왔다”고 말했다.

민주택시연맹은 인천지역본부 정광훈 사무처장은 “지난 4월 하기철 사장이 영하운수를 사실상 인수·장악한 후부터 전문 노조파괴단에 의한 폭력과 협박, 회유 등 부당노동행위가 계속돼왔다”면서 이번 사건 역시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하운수 전 노조위원장이 사측에 의해 포섭돼 최근 민주노총으로부터 직위해제된 후,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임기범 씨는 “노조탈퇴 서명을 거부하는 김광욱 쟁의부장을 집단 폭행하는 등 감금·폭행사건이 일상적으로 일어났고, 나 역시 수없이 맞았다”며 그동안 사내폭력이 심각했음을 지적했다.

## 동성애자 커뮤니티 ‘엑스존’ 항소심 공판 열려

### 서동진 씨 출석...동성애 관련 증인신문 사법사상 최초

정보통신윤리위원회(아래 정통윤)가 청소년 유해매체로 낙인찍은 동성애자 웹 커뮤니티 ‘엑스존’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진행되고 있다.

정통윤은 2000년 8월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엑스존을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7조에 따른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심의·결정한 데 이어 2001년 11월 청소년 유해매체 표시 명령을 내렸다. 엑스존은 이에 항의하는 뜻으로 곧바로 사이트를 폐쇄하고 2002년 1월 ‘동성애는 성적 취향의 문제이지 법률적으

로 금지될 사항이 아니며, 정통윤의 조치는 동성애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보법 시행령의 위법성 여부는 판단하지 않은 채 “보는 사람에 따라 의견이 다를 수 있고 행정처분을 무효화할 만큼 정통윤 결정의 하자가 명백하지 않다”는 모호한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2일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이동환)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는 동성애자 서동진 씨(퀴어영화제 조직)가(2면에 계속)

2003년 9월 3일(수)

제 2410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배경내

인권하루소식 창간 10주년 기획 ‘그때 그 사건’ ⑥ 김훈 중위 사건

## JSA를 올린 한 발의 총성, 그후 군의문사 진실찾기

김대중 정부 출범 하루 전인 1998년 2월 24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 241 GP 3번 방커에서는 한 발의 총성이 울렸다. 군당국은 사건 발생 2시간만에 소대장 김훈 중위가 자살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2개월 여 동안 수사를 진행한 국방부는 “김훈 중위가 오른손으로 오른쪽 관자놀이에 자신에게 지급된 권총을 쏜 후, 왼손을 이마 앞으로 뻗어 권총을 감싼 후 스스로 발사했다”고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영화 같은 JSA내 육군장교의 의문사

하지만, 이런 군당국의 수사결론은 곧 유족들의 진상규명 노력에 의해 하나하나 거짓임이 드러났다. 우선 자살에 사용됐다는 권총은 김중위의 것이 아니었고, 가장 많은 화약흔이 있어야 할 오른손에서는 화약흔이 발견되지 않은 대신 왼 손바닥에서만 화약흔이 발견됐다. 거기에 재미 법의학자 노여수 씨는 권총에 지문이 묻어있지 않았고, 밀착사가 아닌 점 등 11가지 근거를 들어 “김훈 중위는 몸부림 중에 오른쪽 손에 찰과상을 입고 머리 위를 얻어맞았다”고 결론지었다.

거기에 마치 영화 <공동경비구역>에 서처럼 남과 북의 병사들이 판문점을 넘나들면서 ‘적과 내통’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언론들은 김훈 중위가 타살되었다는 기사를 연일 내보냈고, 이제껏 눈물로 세월을 지새던 다른 군의문사 가족들도 청와대와 국회 등에 연일 진정서를 접수시켰다. 이런 비등하는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 국방부는 사상 최초로 1998년말 ‘국방부 특별진상조사단’을 구성하면서 1980년대부터 의혹이 제기되었던 군의문사도 전면적으로 재조사하겠다고 밝히게 된다.

새로운 증거에도 수사결과 요지부동

그후 국방부가 공개하지 않았던 사진에서 철모가 새로 발견되고, 김중위가 사망한 초소에서 격투를 벌인 흔적 등이 밝혀지게 되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

면을 맞게 된다. 하지만, 국방부는 그가 자살했다는 최초의 수사 결론을 바꾸지 않았다. 유족들이 제기한 국가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 재판부는 “자살 동기의 비합리성 등 대부분 유족들의 주장을 인정”하면서도 “수사상의 고의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사건은 현재 2심에 계류 중이다.

3성 예비역 장군인 김훈 중위의 부친 김척 씨는 “국방부는 유족들이 애써서 증거자료를 확보해주면 유족을 무시하고, 대한민국 군대의 명예를 훼손한다며 협박하고는 했다. 증언해 준 사병들이 얼마나 입력을 받았으면 후유증에 시달리겠냐”고 울분을 토했다. 또 그는 “3성 장군이었던 나에게도 이렇진대 다른 사람들은 오죽 했겠냐”며 국방부의 무책임을 성토했다.

꼬리무는 자살, 유족들의 한맺힌 투쟁

김훈 중위 사건을 계기로 군의문사 진상규명 요구가 거세어지자 국방부는 1999년 9월 사상 처음으로 군의문사 및 군폭력 사건에 대한 육·해·공군 합동특별조사단을 구성했다. 당시 특별조사단은 총 166건의 민원을 접수해 재조사를 벌였지만, 자살이 타살로 바뀐 사건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또, 최근 5년 동안 군에서 사망자는 1998년 248명에서 지난해 158명으로 35%나 줄었고 자살사고도 102건에서 지난해 79건으로 줄어들었지만, 전체 사망사고 가운데 자살이 차지하는 비중은 해마다 늘어나 지난해에는 군내 사망사고의 절반 가량이 ‘자살’로 나타났다. 이런 재조사나 수사결과는 유족들의 군당국에 대한 불신만 높일 뿐이었다.

김훈 중위 사건을 계기로 천주교인 권위원회에 모이기 시작한 유족들은 전국군폭력희생자유가족협회(전군협)와 군의문사진상규명과군폭력근절을 위한가족협의회(군가협)를 탄생시켰다. 군가협에는 현재 50여 가족들이 모여 있고, 이들은 국방부 앞에서 어머니들의 삭발 단식농성 등 강도 높은

투쟁을 전개하면서 군의문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해왔다.

2001년 3월 부대 배치 2주일만에 아들이 자살했다는 통보를 받은 군가협 주종우 회장은 “군 수사는 기본적으로 믿을 수 없다. 초동수사도 엉망이고, 모든 것을 자살로 꺾어 맞추는 일방적인 수사다. 군 사망사건을 군수사체계에 맡겨서는 의문사만 늘어날 뿐이다”면서 그렇기에 군의문사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군의문사 특별법 제정 절실

이런 주장은 지난해 허원근 일병의 타살을 밝힌 바 있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사망사건 전담 상설 조사위원회 설치’ 등을 권고한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군 인권문제가 주요 이슈로 떠오른 요즘, 군의문사 문제는 군당국의 손을 떠나 국회에서 제정되는 특별법을 통한 해결을 기다리고 있다. (박대군)

(이면에서 이어짐) 위원장)가 출석해 사법사상 최초로 동성애 문제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서 씨는 “청소년 동성애자는 이성애만을 정상으로 여기는 학교와 가족과 또래집단으로부터 배척받아왔다”며 “이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당당한 시민으로 살기 위해서는 동성애에 대한 정보공유와 다른 동성애자들과의 의사소통이 필수적”이라며 엑스존의 존재이유를 강조했다.

하지만 반대신문에 나선 정통윤 측 변호사는 “증인은 원래부터 동성애자가 아니라, 주위 사람들의 영향이나 유혹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은 아니었나?”, “동성애가 청소년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해친다고 생각하지 않나?” 등의 질문을 쏟아내 동성애에 대한 무지와 편견을 드러냈다.

한편 지난 4월 국가인권위는 ‘동성애’를 청소년유해매체 심의기준으로 제시한 정보법 시행령 7조는 인권침해라며 이의 삭제를 권고한 바 있다. (강성준)

고 김승훈 신부님의 명복을 빕니다 ○ 4일 오전 10시 장례미사(명동성당) → 11시 민주사회장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 흥국생명 노조 단식투쟁 ... 왜?

### 파업 109일째, 조합원 1백여명 인권위에서 단식농성

회사측의 성실교섭과 부당노동행위 처벌을 촉구하는 흥국생명(위원장, 홍석표) 노조 조합원의 단식농성이 3일째로 접어들고 있다. 하지만 회사측이 여전히 교섭을 거부하고 있어 사태 해결의 전망은 불투명하다.

손배·가압류... 단식농성에 선 노동자

흥국생명 노조는 올 4월 임금·단체협상이 결렬되자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신청을 거친 뒤 조합원 찬반 투표 결정을 통해 5월 23일 파업에 돌입했다. 당시 노조원들에 관한 회사측의 블랙리스트 문건이 폭로되면서 노조에서는 '노조파괴 공작 시나리오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노조는 회사의 부당노동행위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더욱이 회사측이 노조 위원장과 조직국장을 해고하는 한편 조합원 및 노조간부 45명에 대한 징계를 단행하자 회사에 대한 노조의 불신은 더욱 깊어졌다. 여기에 회사측이 노조 간부 14명에게 1인당 9천5백 만원의 손해배상청구 및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사태는 악화일로로 치달았다.

결국 흥국생명 노조는 지난 1일 장기 파업사태 해결과 회사측의 부당노동행위 처벌을 촉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한 데 이어 당일 오후부터 인권위 7층 상담실에서 집단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특히 흥국생명 노조 홍석표 위원장은 지난달 13일부터 이미 장기파업 사태의 해결을 촉구하며 3일 현재 22일째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노조는 인권위 진정서에서 "회사측이 합법적인 단체행동을 '업무방해'라는 이유로 조합간부에게 손배소송과 가압류조치를 취했다"며, "손배소송과 가압류는 노동자에게 극심한 고통은 물론, 일부 노동자를 자살에까지 이르게 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적법 파업이라도 파업책임은 노조가?

지난 7월 12일 서울지방노동청은 사태 해결을 위해 회사측에는 '노조 파업이 노동법상 적법 파업을 감안하여 당초 주장한 선 업무복귀 후 교섭을 철저히 할 것'을 제안하는 한편 노조에는 '농성을 해산하고 고소를 취하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2003년 9월 4일(목)  
제 2411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배경내

이에 따라 노조는 농성을 해제했지만, 회사측이 '임금'을 제외한 '부담징계, 손배·가압류, 무노동 무임금 등'에 대해서는 교섭을 않겠다는 방침을 내세움에 따라 교섭은 더 이상 진척되지 못했다.

흥국생명 노조 임현홍 법규부장은 "처음에는 회사측이 '(파업농성)불법성 인정', '농성장 우선 해산 및 농성재발 방지약속' 등의 조건을 제시하며 교섭을 회피해놓고는 지금에 와서 파업기간에 발생한 부당징계, 손배소송 등의 문제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다며 또 다시 교섭을 회피하고 있다"며 분통을 토했다. 임 법규부장은 "심지어 교섭을 위임받은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교섭위원 50여명이 회사측의 교섭요청에 따라 2일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의 책임자는 나타나지도 않았다"고 비난했다.

파업 1백여 일을 맞은 흥국생명 사태는 회사측의 태도로 인해 더욱 장기화될 위험에 놓여있다. [고근에]

## 만화사랑방

이동수

다윗들과 골리앗



## 삼성생명 현직과장, 산재요양 얻어내

### 구조조정 압박과 모멸감 이유...긴 싸움 끝에 승리 거뒀

이른바 초일류기업임을 자처하는 한국 최대의 거대기업 삼성. 하지만, 그 허명 뒤에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고통과 눈물이 감추어져 있다. 최근 한 40대 삼성노동자가 2년간의 지루한 싸움 끝에 마침내 산재요양승인을 받아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는 삼성자본의 치밀하고 비인간적인 구조조정계획에 희생 당해온 한 노동자의 분노가 일구어낸 작은 승리였다. 그의 외로운 싸움은 삼성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비참한 노동 현실의 일각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7월 29일 삼성생명 대구지사에 근무하던 이모 차장(56년생, 현재 정직중)은 대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한 통의 산재승인통지서를 받았다. 지난해 7월 신청했다가 기각되었던 산재요양신청을 올해 5월 재심 신청하여 마침내 승인을 받아낸 것이다.

지난 2001년부터 이 씨는 구조조정의 압박을 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씨는 퇴사를 거부하였고 이후 회사로부터 계속적인 퇴직압력과 인사고과 누락, 차별 대우, 부당 대기발령, 조직적 따돌림 등의 부당한 처우를 겪어야만 했다. 근 20년간을 몸바쳐 일해온 직장으로부터 받아야만 했던 인간적인 모멸감과 조직적인 따돌림은 정신적 충격,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함께 '우울성 신경장애', '불안신경증과 신경성 위장병', '역류성 식도염' 등의 질병들을 야기했다. 이로 인해 이씨는 그해 말부터 대구지역의 온갖 병원을 전전하며 치료를 받아야 했다.

극심한 심적, 육체적 고통으로 피폐해진 삶을 이 씨는 거대기업 삼성에 맞선 싸움으로 일궈 세웠다. 이씨는 그동안 직장상사와의 상호고소, 징계처분, 폭력사건 등 사측으로부터 온갖 회유와 협박을 당해왔다고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요양승인 통지서에서 "회사와의 지속적인 갈등상황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하여 불안신경증이 발생하였다는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 씨는 "지금은 사측뿐 아니라, 근로

복지공단이나 노동청, 지방 노동위원회 등의 부당한 처사에도 분노를 느낀다. 노동자의 편에 서서 이들을 대변해줘야 할 기관들이 거대 기업인 삼성 앞에서는 온갖 사유를 들어 책임을 회피하였고, 도리어 사측의 입장만을 대변해준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았다"고 말했다.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 다 때려치우고 싶은 때도 많다. 내가 겪어온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산재승인만이 전부가 아니다. 정당한 보상을 받아 낼 때까지 싸울 수 있는 한 끝까지 싸워볼 것"이라는 이 씨에게서는 앞서 당하기만 해온 노동자의 분노가 느껴졌다.

98년 IMF 위기이후 지금까지 삼성은 소리소문 없이 수많은 노동자들을 퇴출시켜 왔다. 이러한 대규모의 구조조정 과정 속에서 이 씨와 같은 드러나지 않은 예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짐작할 수조차 없다. 구조조정이 본인들의 희망에 의한 사직으로 이루어졌으며, 강제적인 방법으로 퇴사를 강요한 적은 없으며 모든 과정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여 온 삼성그룹. 하지만 최근에 공개된 삼성의 '인력구조조정 시나리오와 대응방안'에 관한 극비문서의 내용과 이씨에게 가해진 온갖 인간적 멸시와 조직적 차별은 초일류 기업을 자처하는 삼성자본이 얼마나 비인간적인 방식으로 노동자들을 대하여 왔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은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난 삼성의 비인간적인 처우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며 "삼성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제 권리와 인간적인 삶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들을 대변할 수 있는 자주적이며 민주적인 노동조합을 건설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이번 이씨의 산재요양승인 판결이 삼성 자본으로부터 부당한 피해를 입은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투쟁하면 이길 수 있다는 용기와 힘을 불어넣어 줄 수 있기를 바란다"며, 현장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힘차게 투쟁할 것을 다짐했다. (양승훈)

## 용두동 철거민 시청과 합의 저소득층 살 곳은 없어

용두동(대전시 중구) 철거민 29가구 중 27가구가 특별분양에 참여하고, 대전시에서는 이들이 입주 전까지 생활할 가수용 시설을 제공하기로 지난달 30일 합의했다. 하지만 강제 철거 과정의 피해 보상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문제점 등은 건드리지 않아 그대로 불씨로 남게 됐다.

지난해 3월, 대전 중구청과 주택공사는 인구조사 설문지인 것처럼 꾸며 개발의사를 받는 수법으로 소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작했다.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본래 목적과는 달리 중구청이 정한 대지 보상가로는 저소득층 주민들은 옮겨 살 곳이 없었다.

이에 주민들이 저항에 나서자 용역강패들이 투입되는 등 인권침해가 잇따랐다. 지난 해 7월 18일 새벽, 용두동에 들이닥친 용역강패들은 대부분 여성인 60~70대 노인들을 무릎 꿇리고 저항하는 학생들을 집단 구타해 남아 있던 주민 42세대를 내쫓았다. 이들에게 구청이 제공한 것은 컨테이너 박스 3개뿐이었다. 주민들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4백일 넘게 중구청 앞에서 비닐움막에 의지해 노숙 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난 달 19일 차세순 씨(64)가 뇌출혈로 쓰러져 구청과 주공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거세졌고, 협상이 한창이던 지난 달 28일에는 구청이 비닐 움막까지 강제 철거해 대화 의지를 의심받기도 했다.

특별분양 참여 결정에 대해 대전지역 철거민공대위 상임대표 김규복 목사(빈들교회)는 "특별분양 접수 마감일 임박했고 마땅히 누려야할 권리라는 점에서 주민들이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라고 설명하고 "하지만 1억 원이 넘는 입주비용 때문에 실제 입주자는 27가구 중 10%도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김 목사는 "이번 합의가 용두동 문제의 원천 해결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며 "주민들의 없는 사업의 돌입, 강제철거에 따른 피해, 건설원가 비공개 등 중구청과 주택공사의 책임을 계속 해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가수용 시설이 완공될 때까지는 철거민들의 노숙 농성이 계속될 전망이다. (강성준)

인권하루소식 창간 10주년 기획 '그때 그 사건' ⑦ 고문기술자 이근안의 등장

# 뿌리뽑아야 할 범죄, 고문

1985년 12월초, 김성학 씨는 영문도 모른 채 기관원들에 붙들려 경기도경 대공분실로 갔다. 그곳에서 그는 다음 해 2월까지 전기고문, 물고문, 잠 안 재우기, 구타를 당하며 까무러치고 깨어나고 다시 까무러치는 72일을 보냈다. 가해자들이 원했던 것은 단 하나, 자기들이 "씨놓은 시나리오대로 자백" 하라는 것. 견딜 재간이 없었던 김씨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간첩이 되었고", 검찰로 이첩되자 선처를 조건으로 전향서까지 작성했다. 이후 그는 5개월만에 무죄 방면되었다.

이근안 기소, 미흡한 단죄

"기막힌 현실을 인정할 수 없었던" 김씨는 이근안 등 16명을 고소하였고,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87년 12월 10일 결국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마침 김근태 씨가 이근안 등을 지목해 서울고법에 낸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시효가 정지되고, 98년 서울고법이 김성학 씨의 재정신청마저 받아들임으로써 이근안에 대한 공소시효가 2013년으로 연장되었다. 대한변협과 민가협이 나서서 수배전단을 날리고, 경찰이 500여만 장의 수배전단과 연인원 389만여 명을 동원해 검거작전을 폈음에도 불구하고 10여년간 잘 피해 다녔던 이근안. 그러나 그도 21세기까지 연장된 시효에는 더 이상 버틸 힘을 잃고 99년 10월 성남지검에 자수, 1심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민가협 등은 "그가 저지른 잔악한 범죄에 비해 지나치게 가벼운 처벌"이라 반발했다. 실제로 이근안에 지워진 술한 고문의혹 중 단 한 건만 받아들여진 점, 그 워선인 박치원, 정형근 등이 실질적으로 면죄부를 받은 점 등을 들어 '구색 맞추기식 판결 아닌가'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어나기도 했다.

고문범죄 처벌, 끝이 아닌 시작

이근안에 대한 처벌은 고문 등 국가범죄에 관한 해결책을 제시했다기보다는 본격적인 문제제기의 계기로 작

용했다. '조작간첩' 이장형, 함주명 씨 등 많은 이들의 재정신청은 거의 예외없이 외면당했고,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위헌심판은 별다른 고민 없이 각하 되었다. 당시 한 단체가 "적게는 수천 건, 많게는 10만 건"에 이르는 추정치를 내놓을 만큼, 광범위한 고문 피해 사례가 접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방치되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자면, 무엇보다도 가해입증이 어려운 고문범죄의 특성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김성학 씨를 고문했던 자들은 "내가 여기(경기도경 대공분실)에 있는 건 니 가족도 모른다"고 위협하는 한편, 서로를 부를 때 "사장이나 백공이니"했다고 한다. 어두운 밀실에서 누군지도 모르는 자들이 일을 저지르고, 그자들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는 고문범죄의 속성상, 수사기관 내부를 들여볼 수 없는 개인이나 민간단체가 피해자의 주장을 입증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천신만고 끝에 증거를 찾았다하더라도 군사독재 당시,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처벌하라고 나서는 것 자체가 "자살행위"였던 터라, 비로소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게 된 때에는 이미 '공소시효'를 넘기고 난 뒤였다.

고문범죄에 대한 처벌이 어려워지자, 한편에서는 "왜 꼭 가해자들을 처벌하여야 하는가"라는 물음이, 다른 한편에서는 "실정법으로 어려운 걸 굳이 들추어서 평화를 깨뜨릴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도 불거져 나왔다.

그러나, '국가권력의 민주화' 같은 거창한 이야기를 거론하지 않는다 해도 피해자가 있기에 진상규명과 가해자 처벌 노력은 시효라는 장애에도 불구하고 중단될 수 없는 것이었다. 피해자 자신에게 있어 국가권력에 의한 범죄는 지속적인 2차, 3차 피해를 불러온다는 점에서도 한번 참으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었다. 84년 6월 '67 일간의 고문을 통해 간첩이 된' 이장형 씨는 "사회에 나와서도 주변의 시

선이 두렵고, 또한 어딜 가나 간첩 딱지가 따라다닌다"고 말한다. 이씨에게 있어 조작간첩사건은 과거 한 때의 악몽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현재의 삶을 가로막는 장벽이었던 것.

고문범죄 근절의 걸림돌, 공소시효

피해자와 함께, 또는 다른 관점에서 시민사회의 노력도 지속적으로 전개되었다. 그 중 특기할 만한 것으로 수지 김 살해사건을 들 수 있다. 상해주범 윤태식은 처벌되었지만, 단순한 살인사건을 간첩사건으로 조작한 장세동이 시효를 넘겼다는 이유로 법망을 빠져나가자, 국제엠네스티한국지부 등 13개 단체는 2002년 5월, '반인도범죄등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을 입법 청원하였다. 이는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시효에 구애됨이 없이 처벌하려는 국제사회의 흐름을 반영한 것이기도 했다.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시효적용 배제원칙은 48년 뉴른베르크 전범재판, 93년 유고 전범재판을 거쳐, 98년 로마규정을 바탕으로 지난해 7월 출범한 국제형사재판소에 이르러 국제관습법으로 확고히 정착되었다.

로마규정은 반인도적 범죄를 '반드시 처벌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반드시'라 함은 그 하위 원칙으로 시효에 구애받지 않을 것(시효부적용의 원칙), 모든 나라가 예외없이 처벌할 것(보편적 관할의 원칙)을 요청한다. 이 규정에 따르면, 모든 고문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근안류'의 대공수사기관의 조직적 비호를 받으며 저지른 △전기고문 등 심각한 비인간적 행위를 처벌하지 못할 이유도 없을 것이다.

특히 로마규정 비준국인 한국은 국내입법 의무에 따라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시효배제특별법'을 이른 시일 안에 제정하여야만 한다. 이는 고문과 조작으로 대표되는 어두운 과거를 청산하고, 국가권력이 인권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 재건된다는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이광림)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3년 9월 5일(금)

제 2412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배경내

## 화물노동자에게 인권도 없다

### 경찰, 폭력연행 가혹 수사이다 업무복귀각서까지 강요

화물노동자들의 인권이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 지난 1일과 2일 양일간 약 400여명에 이르는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경찰에 의해 강제 연행되고 조사받는 과정에서 폭력과 가혹행위가 광범위하게 자행된 것. 이 같은 진상은 3일 밤과 4일 오전 풀려난 조합원들의 진술에 의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화물연대 전북지부 조합원 권모 씨는 지난 2일 새벽 연행되는 과정에서 전투경찰 여러 명에게 둘러싸여 양팔을 뒤로 꺾인 상태에서 군화발에 복부를 수 차례 가격 당해 전치 3주 진단을 받은 상태에서도 이튿날 군포경찰서로 끌려가 조사를 받아야만 했다. 경기중부지회 조합원 김모 씨도 연행 중 발생한 경찰의 폭행으로 인하여 엄지손가락이 골절되어 현재 군포 원광대 병원에 입원치료 중에 있다.

전북지부의 김모 조합원은 경기도 안산의 한 식당 마당에서 동료와 함께 휴식을 취하던 중 갑자기 들이닥친 사복경찰과 순찰차 9대에 둘러싸여 24시간 이상 차를 움직이지 못하게 됐다. 차량에 화물연대의 로고를 붙이고 다녔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화물연대는 김 씨와 같은 이유로 연행된 다른 조합원들이 수십 명에 이르며, 3일과 4일에도 이 같은 일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북지부의 박모 조합원도 2일 새벽 2시경 차를 몰고 가던 중 경찰에 의해 연행됐다. 박 씨는 "부곡 IC 부근을 지나고 있는데, 갑자기 사복경찰과 전경들 3명이 차에 올라 차를 옆으로 빼라고 다그쳤다. 경찰 차량이 길을 막고 있어 비켜줘야 차를 뺄 거 아니냐고 했더니, 상관으로 보이는 사복경찰이 '이 세끼 연행해'라며 소리를 질렀다. 왜

연행하는지 이유나 알자고 했지만, 경찰들은 답변 대신 다짜고짜 폭언을 해가며 차 밖으로 끌어냈다"며 "법을 어겼다면 달게 처분을 받겠지만, 무슨 이유로 잡아가지도 말해주지 않는 게 도대체 무슨 법이냐"며 울분을 토했다. 수사과정에서도 가혹행위는 이어졌다. 경기도 광명경찰서로 연행된 전북지부의 조합원 장모 씨는 식사를 제공받지 못해 꼬박 하루를 굶어야만 했으며, 핸드폰을 빼앗기고 가족들에게 연락조차 못하게 하었다고 한다. 전북지부는 "일부 조합원들은 밤중에도 3, 4

반씩 불러 다니며 취조당해, 잠조차 제대로 자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풀려난 조합원들 거의 모두가 경찰에 의해 '업무복귀각서' 작성을 강요 받았으며 작성을 거부할 시 풀어주지 않겠다는 협박을 받았다. 이 각서에는 '1회 업무복귀 후 확인 도장을 받아 제출할 것'과 '집회 불참 서약' 등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다.

현재 화물연대는 각 지부별로 조합원들에게 가해진 경찰의 폭력과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사례를 취합하고 있으며, 사태가 규명되는 대로 법적 대응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운송하역노조 장원석 법규차장은 "노조원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무차별적 강제연행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공권력 남용일 뿐"이라며 노동탄압 행위의 즉각적 종단을 촉구했다. (양승훈)

클릭! 인권정보자료

### 건강권 실현의 새로운 모델 - 『이윤보다 생명이다』

지은이: 민중의료연합/ 펴낸이: 교육비평/ 2003년/ 223쪽

건강권 실현을 위한 실천 과제를 의료현장의 생생한 사례를 엮어 대안으로 제시한 단행본이 출간됐다. 이 책은 현행 한국의 의료시스템이 이윤 추구를 중심으로 짜여져 있음을 비판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권리로서 건강권이 확보될 수 있는 새로운 의료시스템의 모델을 △의료보장제도 △의료공급체계 △의약품 △노동자 건강 분야 등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그 핵심 키워드는 '무상·공공·자치의료'. 민의련은 "지금의 의료체계가 의료행위의 본업보다는 돈벌이 위주로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하며 진정한 평등과 사회적 연대성에 기초하여 정부와 기업의 재정 부담금을 높이는 방향으로의 제도 전환의 필요성을 촉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건강보험에서 본인부담금을 없애고 무상의료제도를 만들어 내는 것, 위험한 작업환경에 대해 노동자가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것, 공공의료기관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사기업 의료기관도 지역주민의 참여 속에 운영하는 것 등등. 결코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닌 지금 이 땅에 실현할 수 있는 대안적인 의료시스템의 모델을 민의련은 이 책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현실을 헤쳐나가는 일은 '길을 닦는 일'과도 같다. 그래서 민의련이 걷는 한 걸음은 보편적인 권리로서 건강권 실현에 작은 길을 낼 것이다. 지금은 비록 너무나 꿈 같은 얘기지만... (최은아)

# "16대 국회는 대인지뢰 피해자 외면말라" 피해자들 의족시위...지뢰 제거·피해보상 특별법 제정 촉구

"대인지뢰 피해자에 대한 무조건적 보상은 그 자체가 전쟁에 대한 통렬한 반성이자 사죄이며, 지뢰제거는 생활 속의 전쟁을 막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4일 오전 11시 의족을 한 20여명의 대인지뢰 피해자들이 여의도 동아일보 별관 앞에 모여들었다. 그들은 '대인지뢰의 제거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법'(아래 대인지뢰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하며 집회를 가졌다.

지난 3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된 이 법안은 2000년 한나라당 김형오 의원에 의해 초안이 마련되어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과 법제관실의 검토를 거쳐 최종 수정안이 구성됐다. 이 법안은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소멸시효가 지나 보상의 기회를 잃어버린 과거 피해자들에게도 보상을 지급하고 △보상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한 보상위원회를 국방부장관 산하에 두며 △비무장지대 이남의 지뢰지역과 미확인 지뢰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모든 대인지뢰를 제거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특별법이 제정되면 지뢰 피해에 따른 육체적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인지뢰 피해자들에게 큰 힘이 될 전망이다. 대인지뢰피해자모임 고진만 대표는 "농사를 지어 생계를 연명하던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사고 후 의료비 부담과 경제력 상실로 비참하게 살아왔다"며 시급한 보상을 촉구했다.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아래 대책회의) 조재국 위원장은 "법이 제정되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의료비 혜택과 연금 혜택이 제공될 것"이라며 특별법 제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고정호 사무국장은 흉수로 인한 지뢰 유실로 지뢰 피해가 남하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대인지뢰의 제거를 명시하고 있는 이 법은 전체 국민들의 생존과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법안의 통과 가능성에 대해 대책회의 이시우 집행위원은 "의원들 대부분이 인도적 차원의 보상부분에 관

해서는 이견이 없고, 이견이 많았던 안보문제와 관련된 지뢰제거 부분에 대해서도 단서조항을 두어 법안통과의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낙관적 전망을 내놓았다. 실제로 법안에서는 '군사적 필요가 요청될 때 국방부장관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지뢰지역 및 미확인 지뢰지역을 제거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해 대책회의 이미옥 간사는 "이 법안은 대인지뢰지대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대인지뢰의 생산·사용에 관한 금지조항이 없어 오타와 협약과 같은 국제적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하지만 법안 통과가 반드시 낙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이시우 집행위원은 "정세가 어수선했던 행여나 의원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날까 걱정"이라며 "무관심이 가장 큰 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법안은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오는 22일까지 16대 국회 상정여부가 관건일 전망이다. (대홍)

## 영상집단 「결」의 카메라가 담은 세상 "고통받는 노동자들의 일상과 내면의 목소리 담아낼 터"

영상 창작집단 「결」이 노동운동과 대중 사이의 벽 허물기,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위해 최근 카메라를 들고 바쁜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2000년부터 여덟 명의 초동 구성원들을 필두로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간 「결」은 민주노동당 홍보물 제작을 비롯, 2000년 롯데호텔 파업을 다룬 <침묵이 깨어지는 시간>과 같은 해 울산에서의 4·13총선 과정을 담은 <1984 우리는 합창한다> 두편의 다큐멘터리를 공식 발표하는 등 자신만의 분명한 색깔을 고집해왔다.

98년 풍물테러까지 자행한 사측의 극심한 노조탄압이 알려지면서 한때 여론의 집중 비판을 받기도 했던 청구성심병원사건. 사측의 집요한 탄압에도 아직까지 조합을 지키고 있는 노조원들은 지금도 끈질긴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결」의 정진탁 감독이 이들의 투쟁에 결합한 것은 노조원들이 직을 장에라는 진단을 받고 집단 산재신청을 낸 지난 7월 중순경이었다. "그때 그때의 작은 성과물에 만족하지 않고, 이사장 구속과 병원 중앙관리자들의 완전 교체, 노동권 보장 등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투쟁의 핵으로 놓은 것이 노조원이 20여명만 남은 지금까지 그들을 지속시키는 힘"이라고 감독은 힘주어 말한다. 하기에 이번 그의 작품은 강한 고발성이나 물리적인 격렬함의 색채보다 조합원들 내부에 자리한 끈기와 희망, 일상적 삶의 모습 등을 담아낼 예정이라고 한다. 앞으로 약 2개월간의 작업기간을 거쳐 연말쯤이면 청구성심병원의 특별한 영상 투쟁일기를 만나볼 수 있다.

한편, 이진필 감독은 <침묵이 깨어지는 시간>에 이어 두 번째 작품의 제작 초입에 들어갔다. 이번에 그의 카메라가 비추고자 하는 것은 노동현장 가운데서도 상황이 더욱 열악하고 인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영세사업장의 모습이다.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이들 영세사업장에 분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들이 겪고 있는 문제는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 감독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도 바로 이것. 따라서 이번 작품에서는 거대 사업장이 벌이는 강한 투쟁 현상이 아니라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일상생활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질 전망이다. 때마침 서울지역 일반노조와 제화(製靴)노조로 구성된 통합노조가 오는 10월 중순 총회를 갖는다. 감독은 "이번 총회를 통해 노조활동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기존의 상황을 돌파하고자 하는 새로운 움직임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두 감독은 "지역간 격차와 다양한 정치적 스펙트럼의 차이를 넓고 깊게 조명할 수 있는 노동운동 영상 네트워크가 열렸으면" 하는 바람도 잊지 않았다. 이러한 과정에 「결」의 연대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길 기대해본다. (황지성)

인권하루소식 창간 10주년 기획 '그때 그 사건' ⑧ 매항리 폭격장 폐쇄 투쟁

# 고통의 땅 매항리는 아직도 "뚜두뚜두-쿵"

"뚜두뚜두- 짜익, 쿵." 기습을 당한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다. 진정시킬 여유도 없이 날카로운 굉음이 귓전을 울리더니 또다시 포탄소리가 난다. "쿵-". 주먹을 꼭 움켜진 두 손에 땀이 축축이 배었을 때, 필력은 주황색 것발 뒤로 희미한 연기가 피어오른다. 2003년 8월 다시 찾아간 매항리(경기도 화성군 우정면)는 아직도 전장이다.

날마다 전쟁, 반세기 매항리의 비극

2000년 5월 엔진고장을 일으킨 미군 전투기가 아무런 사전 경고없이 폭탄 6발을 마을에 투하하면서 매항리 주민 6명이 다치고 농가 7백여 가구가 피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을 통해 반세기에 걸친 매항리의 비극이 우리 사회에 본격적으로 드러났다.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51년 미군 전용 폭격장이 들어선 이래 오폭사고로 사망한 주민만도 10명. 임산부의 짙은 유산은 물론이고 폭격 굉음으로 인한 자살과 극도의 스트레스, 중금속으로 오염된 갯벌 등 매항리는 죽음의 땅으로 변해버린 지 오래였다.

"폭격장이 만들어진 이래 반세기동안 공휴일을 제외하곤 단 한번도 폭격이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전투기가 하루 동안 쏟아 부은 포탄만도 9백여 발, 여기에 주민들이 살고있는 거주지마저 사격 가능한 지역으로 포함돼 있다 보니 주민들은 매일같이 전쟁의 포성과 폭격의 공포 속에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매항리에서 나와 자라나 이러한 현실을 '천형'처럼 받아들였다는 전만규(47, 매항리 주민대책위원장) 씨는 아버지의 자살을 지켜보면서 싸움을 결심했다.

이렇듯 원한처럼 하나 둘 쌓여온 주민들의 분노는 88년 사회 민주주의 열기를 타고 폭발했다. 주민대책위원회가 꾸려졌고, 1천여 명의 주민들이 3차례나 미군기지를 점거하는 등 적극적인 투쟁이 전개됐다. 하지만 미군과 한국정부는 경찰과 무장군인을 투입해 시위를 진압했고, 주민 2명을 구속시켰다. 그 후 주민들은 심한 무기력증에 빠졌다. 너무나 당연한 요구가 너

무도 처참히 짓밟혔기 때문이다.

들불처럼 일어난 2000년 폐쇄투쟁

하지만 2000년 5월 사건 이후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다시 삼과 곡괭이를 들었다. 마을에선 대규모 시위가 잇따랐고, 대학생과 종교인들이 폭격중단을 요구하며 폭격장을 점거했다. 각계인사들이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국제적인 연대집회가 열리는 등 매항리 폭격장 폐쇄를 위한 투쟁은 들불처럼 번졌다. 한미합동조사단이 "폭탄투하 사건으로 인한 피해는 없다"고 밝혔을 때는 분노한 매항리 주민 3백여 명이 주민등록증을 반납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고된 투쟁은 성과를 남겼다. 51년 폭격장이 만들어진 이래 처음으로 40여 일간 폭격이 중단되기도 했으며, 육상 폭격장을 폐쇄하는 전대미문의 성과를 남기기도 했다. 하지만 마을 바다 앞 해상 폭격장은 끝내 폐쇄되지 않아 지금도 매일같이 폭격이 계속되고 있다. 폭격으로 오염된 바다와 폭격장에 묶여있는 농사 터도 이들의 생활을 계속 고통에 몰아넣고 있다. 여기에 아무런 문제해결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정부 역시 넘기 힘든 또 하나의 산이다. 그렇게 매항리의 시계는 2000년에서 멈춰 서 있다.

매항리는 불평등한 한미관계의 소산

<불평등한소과개정국민행동>의 공동대표인 문정현 신부는 "상호방위조약과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이 평등하게 개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매항리의 해법은 없다"고 강조한다. 매항리 범국민대책위 김용환 집행위원장 역시 "매항리는 불평등한 한미관계로부터 시작된, 이 땅 민중들이 겪고 있는 슬픈 고통의 상징"이라고 말한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해 미군은 국내에 기지나 폭격장을 무기한 사용할 수 있으며, 환경 피해 등에 대한 아무런 배상 책임이 없다. 따라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소과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이러한 현실에 마침표를 찍기 어렵다"는 것이다.

불평등한 소과의 문제는 비단 매항리뿐 아니라 지난해 6월 두 여중생 압사사건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당시 가해 미군에겐 무죄가 선고되었는데, 소과 규정에 따라 미군의 공무 수행 중에 벌어진 사고에 대해서는 한국정부가 재판을 행사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 일이었다. 연일 전국적인 소과개정 촉구 집회가 계속됐지만, 불평등한 소과협정은 여전히 위세를 잃지 않고 있다.

가슴에 칼을 품고 사는 주민들

현재 밖으로 보여지는 매항리는 고통하기만 하다. 하지만 주민들은 가슴에 '칼' 하나를 품고 산다. 2000년 맹렬한 싸움에도 꿈적하지 않는 미군과 정부를 보면서 한동안 절망감에 술만 폈다는 마을 주민 김모 씨는 "내가 뒤지든지 폭격장이 뿌사지든지 둘 중 하나밖에 없다. 미군이 저리 버티면 죽을 때까지 싸우는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그의 말처럼 주민들은 '숙명'처럼 투쟁을 준비한다. 주민들은 지난 7월 "오는 10월말까지 폭격장을 완전히 폐쇄하지 않으면 주민통제 철책을 끊고 폭격장을 점거할 것"이라고 밝힌 데 이어, 한편으론 대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98년 주민 14명이 매항리의 소음과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의 대법원 결정이 새로운 투쟁의 도화선이 될 거라 믿기 때문이다. 이 소송에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폭격 소음으로 인한 각종 침해행위는 사회통념상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라며 모두 1억3천여 만원의 위자료를 주민들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결과에 힘입은 매항리 주민 2천2백여 명은 국가를 상대로 유사한 내용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평생을 어부, 농사꾼으로 살아온 이들의 투쟁이 6km에 이르는 매항리 '쿠니 폭격장'의 철책을 다 걷어내고 평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때 '당신의 힘'이 필요하다는 것. (유해정)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3년 9월 6일(토)  
제 2413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배경내

## “사람 목숨이 특허권보다 못는가”

### WTO 지적재산권협정 최근 합의안, 강제실시 엄격 제한

지난 8월 30일 제네바에서 합의된 TRIPs협정(무역관련지적재산권 협정) 6항의 최종 결정안에 한국정부가 동참한 것은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과 생명권을 철저히 무시한 행위라는 비판이 뜨겁게 제기되고 있다.

5일 오전 11시. 빗줄기가 쏟아지는 가운데 서울 광화문 외교통상부 건물 앞에서는 'TRIPs 합의안 타결을 반대하는 WTO반대 투쟁단'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2001년 11월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TRIPs협정과 공중보건에 대한 선언'(도하선언) 6항은 공중보건을 위해 '특허 의약품에 관한 강제실시를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지만, 그 동안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최빈국간의 입장 차이로 구체적 이행방안에 관한 합의를 보지 못했다. 지난달 말 TRIPs 이사회에서 전격 합의안이 도출됐다.

약국노조 준비위원회 전광희 사무국장은 "이번 TRIPs 합의안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강제실시 수혜국의 범위를 최빈국으로만 한정하고, 시행 절차도 까다롭게 규정하는 등 강제실시를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는 데 있다"고 꼬집었다. 강제실시란 특허 의약품을 특허권자의 허락없이 생산할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부여해 비슷한 효능이 있는 저가의 복제약을 전 세계 어디든 필요한 환자들이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민중의료연합 박주영 사무처장은 "백혈병 환자들이 한 알에 2만원도 넘는 글리벡을 먹기 위해서는 한 달에 300만원도 넘게 들어간다. 너무나 비싼 가격에 돈이 없어 약을 사먹지 못하는 환자들이 이 시간에도 죽어가고 있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라며, "한국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진정 생각한다 면, TRIPs 최종 결정안에 대한 합의를 즉각 철회하고, 이를 폐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기자회견장 앞에서 거리선전전을 진행하던 한국백혈병환우회의 이문석 씨도 "환자들의 생명이 쓰레기 취급당하

는 것 같아 비참함을 느낀다"며 "의약품 특허와 독점을 통해 이익을 남기는 것이 사람의 목숨보다 과연 더 중요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전국민중연대 정광훈 대표도 "초국적 제약회사들의 의약품 특허 독점을 반대하지 않은 정부의 태도는 자본가들의 이익만을 대변해준 것에 다름 아니다"며 결정안에 합의한 한국 정부를 강력 규탄했다.

WTO반대 투쟁단은 오는 10일부터 멕시코 칸쿤에서 열리는 WTO 5차 각료회의를 지지함으로써 TRIPs 합의안의 타결도 지지할 계획이다. (양승훈)

## 〈논평〉 노동자가 위험하다, 정부가 위험하다

노동자가 위험하다. 대량 정리해고의 광풍으로 청춘을 묻은 작업장에서 쫓겨나 실업자가 되고 노숙자가 되어 지친 어깨 늘어뜨리고 고개 꺾여 휘이휘이 정처없는 발걸음을 옮기는 노동자들로 안 그래도 산천이 차고 넘친다. 계약직 노동자로 혹은 용역·파견 노동자로 자식새끼 하나 보고 살아보겠다고 이 악물며 온갖 모멸, 살인적 노동 견뎌내고 있는 이 땅의 노동자도 절반을 넘어서었다. 그런데도 그것으로 모자라간다. 부당해고 자행하는 사용자들 형사 처벌하는 것은 가뜩이나 힘들어하는 사용자들에겐 너무나 가혹한 형벌이라 너스레를 떤다. 국제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것이라며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인다. 노동자에게 돈 좀 쥐어주며 이제 필요없으니 나가라고 해도 사용자들 별탈 없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노사관계 선진화'라 우격다짐이다.

노동자가 위험하다. 온갖 굴욕 다 참아내다 노동자들이 파업 한번 할라 치면 공익사업이네, 직장폐쇄네, 강제중재네, 긴급조정이네, 안 그래도 파업을 가로막는 온갖 족쇄들이 발목을 잡는다. 그런데도 그것으로 모자라간다. 파업하는 동안 다른 사람 데려다 쓰고, 파업금지기간 늘리고, 공익사업장 노동자에게만 강제로 일 시킬 수 있어야 한다. 파업 해 볼 테면 해보라며 사용자가 좀더 쉽게 '배제라 식 직장폐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자리를 잃든지 노예의 조건을 받아들일지 둘 중 하나를 택하라며 강요할 수 있는 무기를 쥐어주겠다. 그러면서 묻는다. 파업하기 더 쉬워지지 않았느냐고. 이것이 '노사관계 선진화'라 우격다짐이다.

그러면서 슬쩍 복수노조 허용, 실업자의 초기업단위 노조 가입 허용이라는 눈속임용 장식물을 얹어놓는다. 몇 년 전부터 지키기로 한 약속을 안 지켰던 것일 뿐이라는 진실에는 애써 침묵한다.

노동으로 일궈 세운 이 땅에 쫓기고 쓰러지고 통곡해온 노동자에게 완전 무장해제를 요구하고, 사용주의 절대 권력만 더욱 강화하겠다는 게 바로 정부가 내놓은 '신노사관계 이정표'다. 그러면서 이것이 '노사관계 평등 지향'이라 우긴들 그 누가 믿어줄까. 이러다간 정말 정부가 위험하다.

인권하루소식 창간 10주년 기획 '그때 그 사건' ⑨ 한국통신 비정규직 노조 투쟁

## 2000년 한겨울의 외침, “우리는 물건이 아니었어”

전화·인터넷 따위를 설치하고 보수하는 노동자들, 우리는 그들 길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KT가 박힌 작업복을 입고 있지만, 그들 대부분은 더 이상 한국통신 소속 노동자가 아니다. 예전처럼 똑같이 한국통신 일을 하지만, 이제 그들은 한국통신과 도급 계약을 맺은 다른 업체들에 속해 있다. 2000년 5월경부터 12월까지 7천 명에게 일방적으로 전달된 '계약 해지 통보서'가 그 이유를 설명해준다.

서류 상 계약직이다 뿐이지, 10년에서 20년을 일해 온 그들이었다. "한국통신에 입사할 때 1년짜리 계약직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다들 평생 직장이 되겠거니 했었다." 윤백희 씨는 한창 해고 바람이 불던 2000년 6월 당시 인권하루소식 기자에게 이렇게 말하며 허탈해 했었다. "이제껏 공휴일도 없이 일한 대가가 일방적 해고라니... 우리가 소모품도 아닌데 너무나 거 아닌가요?" 20년 넘게 한국통신에서 일해 온 구강희 씨는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IMF 이후 문턱문턱 잘려 겨우 80만원을 넘기는 임금도 참아온 이들이었다. 그 해 10월 한국통신(아래 한통) 계약직 노동자들은 노조를 설립했고, 12월 13일 계약 해지 철회와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중앙노동위원회까지도 부당해고등 사측의 책임이 크다고 인정한 합법파업이었다.

한 겨울 외침, "비정규직 철폐하라!"

유난히도 추웠던 그 해 겨울 노동자들은 분당 한국통신 본사 앞에서 노숙농성을 벌였다. 그 과정에서 혈액 순환 장애로 뇌에 손상을 입은 한 노동자는 지금도 말을 못 한다. 이듬해 봄 진눈깨비가 내리던 날, 목동 전화국을 점거하기도 했다. 이 일로 홍준표 노조위원장 등 여럿이 구속됐다. 한강철교 위에서 현수막을 내걸어 보기도 했다. 파업 투쟁에 열심이던 동료 한 명이 죽는 아픔도 있었다.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 기습 시위를 벌이기도 했

다. 노동자들은 실업과 비정규직 사이를 짐작처럼 오가게 하는 비정한 사회 구조에 금을 내기 위해 몸뚱이를 내던졌다. "우리는 물건이 아니다! 비정규직 철폐하라!"

그러나 사측은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말만 지겹도록 되풀이할 뿐, 미동도 하지 않았다. 정부도 뒷짐만 진 채, 공기업의 인력감축을 재촉하며 비인간적인 대량해고를 방조했다. 비정규직 문제가 자신의 문제라는 인식에 눈뜨지 못한 한통 정규직 노조의 냉대도 계약직 노조를 힘 빠지게 하는 일이었다. 2002년 5월 13일 노동자들은 끈질기게 지속해 온 파업을 끝낼 수밖에 없었다. 파업을 시작한 지 517일만의 일이었다.

노동유연화가 노리는 것

그러나 한통 계약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패배'로만 기록되지는 않는다. 2001년은 비정규 노동자들의 투쟁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면서, 비정규 노동자들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널리 알리게 된 해였다.

비정규직이란 항상적인 고용불안을 의미하고, 삶의 불안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위축된 상황에서 노동자는 임금과 노동조건을 열악한 상황을 감수하게 한다. 그리고 노동자들 사이에 위계를 만들어 서로 경쟁하도록 만드는 것, 이러한 것들이 비정규직을 늘리는 '노동유연화'가 노리는 바다. 2000년~2001년 이랜드 노동자, 방송사 비정규 노동자, 대학 시설관리 노동자, 학습지 교사, 레미콘 노동자, 린나이 코리아, 캐리어 사내하청 노동자 등은 비정규 노동자의 비참한 현실을 투쟁으로 증거했다. 한통 계약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여기서 중요한 일부를 이루는 것은 물론이다.

나아가 불안정노동철폐연대 김혜진 집행위원장은 한통 계약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해 "한 사업장 차원의 대응에 그치지 않고, 정부와 자본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대항한 것이었다"는 평가를 덧붙인다. 노동자를 대량해고하고 하청노동자로의 전환을 강요하는 한국통신이라는 공기업 뒤에는 인력감

축을 재촉하는 정부의 정책이 자리잡고 있었다. 한통계약직 노동자들은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비정규직은 더욱 열악한 지위로 떨어지게 하는 구조 조정에 정면으로 맞서 싸웠던 것이다.

비정규직 양산하더니 위하는 척...

최근 들어 정부와 재계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상태와 비교하며 정규직 노동자들을 닦하는 데 팔 걷고 나섰다. "정부와 자본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하고 더 열악한 상황으로 내몰면서, 비정규직 위하는 척 이야기하는 건 말이 안 된다." 파업 당시 한통계약직 노조 조직국장이었던 이승환 씨는 이에 대해 어이없어 한다.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연대의 모범인 이랜드노조의 유상현 씨는 "노동자들이 원해서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갈라선 거냐? 자본이 더 많은 이익을 위해 임금으로, 복지로 노동자들을 갈라놓은 거지"라며 혀를 꼴꼴 찬다.

김 집행위원장은 "정부와 자본의 이데올로기 공세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볼모로 전체 노동자들의 상태를 끌어내리려는 의도"라고 분석한다. 정부가 최근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 비정규 보호대책 등의 이름으로 내놓는 방안에는 정리해고를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중간착취가 필연적인 파견노동이 가능한 업종을 더 확대하고, 계약직과 파견직의 고용불안 기간을 더 늘리는 내용 등이 포함된다. 정부와 재계가 과연 비정규노동자의 편인지, 아닌지 답은 분명하다.

'노동자는 하나다'

정규직 노동자들이 자본이 정한 위계의 틀을 깨고 비정규 노동자들과 동등한 주체로 만나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또 비정규직의 확산을 막고 노동3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모든 노동자들이 공동의 힘을 모으지 않으면 안 된다. 한통계약직을 비롯한 지난 몇 년간의 비정규 노동자 운동은 단순한 진실을 온몸으로 증거한다. '노동자는 하나다.' (이주영)

인권하루소식 창간 10주년을 맞아

# 10년의 새벽을 다시 깨운다

<인권하루소식>이 9월 7일로 창간 10주년을 맞이합니다. 10년전 그날의 창간 정신을 잊지 않고 앞으로도 '운동하는 신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어가겠다는 다짐으로 창간 10주년을 맞는 소회를 독자 여러분께 몇 자 전합니다. 앞으로도 독자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비판을 부탁드립니다.

(편집자주)

다들 미친 짓이라고 했다. 얼마 안가 두 손 두 발 다 들 거라 했다. 그렇게 시작한 인권하루소식이 어느새 10살이 됐다. 세계 유일의 인권전문 팩스신문을 표방하며 잠든 이들의 새벽을 깨워온 지 10년. 그 10년의 새벽을 밝혀온 인권운동사랑방 식구들의 첫 마음, "힘들었지만 여기까지 왔다."

사랑방 활동가들에게 인권하루소식은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보물단지'다. 인권하루소식은 인권활동가로서의 우리를 교육하고 담금질해준 더없이 좋은 학교였으며, 신문에 나지 않거나 나더라도 모퉁이 한 칸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모멸당한 이들의 삶과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의 가장 급진적인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대안 매체였다.

그러하기에 비록 가진 것 하나 없이 초라하게 출발했지만, "진실을 전달하는 데 주저함이 없다"는 창간 정신 하나로, 인권활동가들의 열정 하나로 10년의 세월을 버텨올 수 있었다.

하지만, 사랑방 활동가들에게 인권하루소식은 내다버리고 싶어도 내다버릴 수 없는 '애물단지'이기도 하다. 늘 열악한 재정과 부족한 일손에 허덕이며 활동가들이 일간 신문을 내는 일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었으며, 때로는 24시간 취재·편집 체계를 가동해야

하기도 했다. 하루하루 바닥에서 굶어온 정보들과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의 분노와 희망을 기사로 담아내고 모양새를 갖춘 신문으로 퍼내기까지에는 사무실 소파를 침대 삼아 칼잠을 자고 외박을 밥먹듯 해야 했던 수많은 활동가들의 피땀어린 노고가 있었다. 97년 지령 1000호의 머릿기사를 당시 발행인 서준식의 구속 소식으로 내보아야 했던 고통의 시간도 있었고, 활동가로서 최전선에서 함께 싸우고 기꺼이 잡혀가야 할 그 시간, 한 걸음 떨어져 취재를 하고 사무실로 돌아와 신문을 내야 했던 인고의 시간도 있었다.

그러는 사이, 지쳐 떨어지거나 사람들도 있었다. 초기 팩스신문만이 갖출 수 있었던 속보성이라는 특장이 점차 통신과 인터넷의 발달에 밀려 퇴색하기도 했고, '운동하는 신문'을 만들겠다는 다짐만큼 인권하루소식이 과연 우리 사회의 진보에 기여해 왔는가 하는 회의도 따리를 틀었다. 그러면서 폐간하자는 말들도 솔솔 흘러나왔다.

하지만 '작은 신문 큰 소식', '신문에 안 나는 것 신는 별난 신문', '우리 시대의 인권상황판', '반인권의 세상에 인권의 꽃씨를 뿌리는 신문' 등 독자들이 인권하루소식에 붙여준 이름들은 그 모든 피로와 회의를 단번에 날려버릴 청량제가 되어주었다. 또 창간 당시나 지금이나 "가마 타는 즐거움은 아나, 가마 메는 괴로움은 모르는" 모진 세상은 인권하루소식이 여전히 존재해야 할 까닭을 깨우쳐주고 있다.

"팩스용지 한두 장에 담긴 글들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깨우쳐주고 있다"는 한 독자의 이야기처럼, 이제 인권하루소식은 단순히 사건을 전달하는 매체에 머무르지 않고, 동일한 사건을 인권의 시선으로 재해석하고 인권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며 '교육'을 통해 독자들을 인권지기로

만들어내면서 해방의 불씨를 지켜야 할 새로운 과제를 부여받고 있다.

인권하루소식이 10년의 격랑을 헤쳐 오기까지 원고료도 없는 신문에 소중한 글들을 기꺼이 보내준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다. 날카로운 필체로 인권유린의 현장을 내리치고, 세상이 변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는 '불편한' 이야기를 서슴없이 내뱉어준 이들의 글은 우리 사랑방 활동가들뿐 아니라 인권하루소식을 읽는 독자들에게 아주 특별한 부끄러움과 깊은 깨우침, 새로운 질서에 대한 설렘을 안겨 주었다.

특히 97년 9월부터 <만화사랑방>으로 인권하루소식을 함께 지켜준 이동수 화백에게는 특별한 고마움을 전해야 한다. 인간에 대한 따스한 시선과 인간을 모략하는 세상에 대한 날카로운 풍자가 함께 자리잡고 있는 그의 인권만평은 어느 글 못지 않은 큰 감동과 깨우침을 우리에게 선사해 주었다.

인권하루소식의 10년은 글과 그림으로 인권운동에 함께 참여해준 이들에게 참 많은 빛을 지고 있다.

지난 10년간 우리는 인권하루소식에 더 이상 실릴 기사가 없는 '평화의 날', 신문이 폐간되는 그날을 향해 열심히 달려왔다. 그리고 이제 그 길을 또 다시 강단지게 걸어가야 한다. 한 시대를 드러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 제치는 '운동하는 신문', 가장 낮은 곳에 처한 사람들의 참된 인간해방의 열망을 담아내는 '작은 신문 큰 울림'이 진실을 말하겠다. 다시 새벽을 깨우고, 스스로 길이 되어 걸어가겠다.

2003년 9월 7일 창간 10주년을 맞아  
인권운동사랑방 드림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3년 9월 9일(화)

제 2414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배경내

## “평화 불복종, 국민이 변호한다”

### 스트라이커부대 시위 관련 구속자 24명...국민변호인단 결성

미 공병대와 스트라이커 부대 시위와 관련, 구속자를 위한 <국민변호인단> 결성대회가 8일 오후 6시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 진행됐다.

이날 대회에 참석한 홍근수(목사) 국민변호인단 대표와 국민변호인단으로 참여하는 학생, 변호사 등은 "미국의 전쟁 준비를 고발하고 전쟁반대를 외친 청년들의 용기 있는 행동이 무죄임을 온 국민에게 전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3일 구속자들의 무죄석방과 반전평화운동 탄압에 항의하는 '사회단체공동대책위'(아래 공대위)가 구성돼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이어 이날 구성된 <국민변호인단>은 왜곡된 언론보도에 대응하는 광범위한 국민적 참여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지난 7월 25일 을지로에 있는 미육군 극동 공병단에 진압해 성조기를 태우다 구속된 학생 5명과 8월 7일 포천 영평 사격장에서 스트라이커 부대의 훈련을 막고 시위를 벌인 12명, 그리고 이들의 호송차량을 막았던 학생과 배후세력으로 지목된 사람 등, 이 사건 관련 구속자는 현재 24명에 이른다. 이중 2명은 이미 지난 6일 1심 재판에서 징역 6개월과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공대위 금영제 사무국장은 "인공기를 태우고 경찰을 폭행해도 5만원 벌금이 고작인데, 평화를 외치고 성조기를 태운 행동에 10개월이나 실형을 선고했다"며 어처구니없어 했다. 그는 "재판부는 사회적 분위기와 한미동맹이라는 국가간의 선린관계에 영향을 미친 점, 세대간의 갈등을 조장한 점 등을 이유로 실형을 선고했지만, 이러한 판결은 재판부가 이미 보수입장에 편향되어 있

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금사무국장은 "전쟁준비를 저지하기 위한 행동을 그치 미국의 요구에 따라 탄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결성식에 참석한 우영 씨(대학생)도 "주한미군이 아니라 진짜 미군인 스트라이커 부대가 우리 국민의 아무런 동의도 없이 한국에 들어와서 군사 훈련을 하는데 이것은 내정간섭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며 "학생들의 행동

을 가지고 '생명위협' 운운하는데, 생명을 위협하는 게 과연 누구인지 똑바로 알리고 학생들을 변호하고자 국민변호인단에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민변호인단은 앞으로 1천여 명의 변호인단을 모집해 사건 당사자들의 석방을 위한 '1천인 진정 탄원운동'에 나서기로 한 한편, 폭언과 모멸감을 주는 행위 등 감압적인 수사에 따른 인권침해를 확인해 이에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공대위 측에서는 "훈방조치된 학생의 학교와 집을 형사가 찾아가 배후를 밝히라고 협박한 사례와 영장이 없는 차량을 수색하고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조사한 사례가 접수됐다"며, 이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여 국가인권위에 진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근에]

## 네이스 공대위, 교육정보위 참여기로

### “내·외곽에서 네이스 반대운동 함께 펼칠 터”

'NEIS 반대와 정보인권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NEIS공대위)와 참여연대는 8일 오후 1시 정부종합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그 동안 참여를 유보해왔던 국무총리 산하 교육정보화위원회(위원장 이세중, 아래 교육정보위)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변, 전교조, 참학, 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된 위원 6명은 이날 오후 2시에 열린 3차 회의를 시작으로 매달 한 차례 열리는 교육정보위 회의에 참여할 예정이다.

NEIS공대위는 그 동안 거듭된 교육부의 약속파기와 교육정보위 구성 과정에서의 비민주성과 편파적 위원 구성, 대회의 주요 당사자인 전교조에 대한 탄압 등을 이유로 참여를 유보해 왔다. NEIS공대위 오병일 집행위원장은 "문제가 되었던 전교조 연가투쟁 징계와 관련, 전교조 위원장이 보석으로 석방되고 징계 최소화방향이 굳어짐에 따라 예초 입장대로 교육정보위에 참여해 내·외부에서 네이스 반대운동을 펼치기로 했다"며 유보 결정 철회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이날 회의에 인권단체를 대표해 참석한 다산인권센터 송원찬 활동가는 "운영규정에 대한 문제제기와 각 분과의 보고·심의사항에 대한 검토로 회의가 진행됐다"며 "앞으로 회의운영의 투명성과 국민참여 방안, 네이스의 전반적 문제점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 나가는 동시에 촛불시위 등 외곽 투쟁도 꾸준히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6명의 위원은 회의 참가에 앞서 고건 국무총리와의 면담을 가졌다. 면담에서 고 총리는 "사전에 NEIS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인권 문제를 충분히 다뤄야 했는데 그렇지 못해 사회적 문제로까지 발전한 것 같다. 사후지만 교육정보위에서 충분히 논의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홍]

인권하루소식 창간 10주년 기획 '그때 그 사건' ⑩ 군산 성매매 여성 화재참사 <끝>

# 두 번의 화염이 휩쓴 군산, 성매매의 오늘

2000년 9월, 그리고 2002년 1월 군산 대명동과 개북동에서 일어난 화재 참사는 19명 성매매 여성의 희생으로 이들의 인권실태를 가장 끔찍하게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화재사건 이후 이곳은 과연 어떻게 변했을까?

다시 찾은 인권유린의 현장

어스름 저녁이 다가올 무렵 도착한 군산시 개북동. 약 1년 8개월 전 여성 14명을 화염의 불길로 사라지게 한 성매매 업소 '대가'는 이제는 당시 화재의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당시 이중삼중의 합판으로 가로막혀 있던 창문은 여전히 굳건히 닫혀 있었지만, 건물 전체 외벽은 말끔하게 페인트칠된 상태였다.

그러나 14명의 성매매 여성을 죽음으로 몰고 간 그 거리에서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듯 간간히 문을 연 성매매업소를 찾을 수 있었다. 일반 주택이 즐비하고, 청소년들이 자주 오는 영화관이 버젓이 들어서 있고, 10m만 가면 중심 도로가 나오는 그곳에서 그 끔찍한 사망사고 있었다는 것은 좀처럼 믿기 어려웠다.

개북동에서 약 1km 떨어진 대명동 화재 현장 역시 2차선 도로를 끼고 상가가 밀집해 있는 곳에 위치해 있었다. 현재 1층은 인테리어 업소가 개업해 성업중이다. 쇠창살이 있던 2층 창문은 쇠창살을 모두 철거한 후 깨끗한 유리를 입혀 놓았다. 이곳이 성매매 업소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흔적은 2층으로 통하는 가운데 튼튼한 철문과 철문 위의 쇠창살 정도.

대명동 성매매업소를 아직도 성업중

군산 여성의전화 민은영 인권부장은 "대명동에서는 7여개 성매매업소가 계속 영업중"이라고 말했다. "화재사건으로 군산에서 성매매가 완전히 근절되지는 않았다. 지역을 둘러싼 상권이 성매매 사업과 유기적인 연결 고리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도 군산 시도 성매매를 근절시키기 위해 적극 나서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

성산업은 거대 자본을 투자하지 않아도 고수익이 보장되기에 업자들이 얼마든지 지역을 바꾸어 성매매를 계속할 수 있다. 민 인권부장은 "참사가 있었던 개북동 건물에서는 현재 성매매가 중단되었지만, 이는 성매매가 근절되어서가 아니라 업소가 대부분 대전이나 익산 혹은 군산시 나운동으로 옮겨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화재사건 이후 업소들은 성매매 여성들의 감금이나 성적·금전적 착취가 인권침해라는 지적이 일자 법망을 피하기 위해 교묘하게 성매매 여성을 다룬다고 한다. 민 인권부장은 "성매매 업주들은 여성에게 일기와 개인 장부를 쓰지 못하게 하면서 감시의 끈을 더욱 강하게 하고 있다. 예전에는 성매매 업소에서 숙식을 제공했으나 요즘은 근처에 방을 얻어 공동생활을 하게 하고 출퇴근 형태로 바뀌고 있다"고 밝혔다.

성매매 근절, 여성운동의 주요 의제로

사건이 있기 전 여성운동에서 성매매 여성의 인권은 주요한 의제로 다루어지지 못했다. 성매매 문제를 다룰 때에도 기지촌이라는 특정 지역의 문제로 다루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대명동, 개북동 화재사건 이후 여성운동은 성매매 여성의 인권에 보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들을 지원하고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게 된다. 성매매 여성도 이제는 여성단체에 구조를 호소하고, 경찰의 조사를 받을 때 여성단체를 대동하기도 한다.

그러나 여성들이 성매매 업소로부터 탈출을 해도 이 사회는 이들을 환영하지 않는다. 성매매 여성을 위한 전용 쉼터는 전무한 실정이다. 현재는 가정·성폭력 상담소의 쉼터로 보내지거나 가족에게 인계되는 경우도 있다. 성매매 여성은 대개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에 시달리기에 전문적으로 치유하고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간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현재는 성매매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민 인권부장은 "업소의 협박 전화, 조직폭력배의 끊임없는 추적 등

이 이들을 불안으로 몰아넣고, 자립의 기반이 전무한 상태에서 다시금 이들은 또 다른 착취의 굴레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우리 사회에 만연해있는 향락문화와 여성의 성(몸)을 매개로 돈을 벌고 있는 착취구조가 존재하는 한 성매매 여성은 계속 양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성매매방지법 제정 시급

성매매여성인권지원센터 정미례 소장은 "성매매는 여성의 몸을 팔아 돈을 벌어들이는 인신매매로 명백한 인권침해이며, 이를 묵인하는 것은 사회전체가 행하는 폭력"이라고 지적한다. 100만명이 넘는 여성이 성매매와 관련되어 있는 현실에서 과연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민 인권부장은 "국가가 성매매방지법 제정을 통해 착취고리를 차단하고 여성들이 성매매가 아닌 다른 형태로 자립할 수 있는 심리적·의료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올해 여성계는 성매매방지법의 제정을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다. 조배숙 의원을 비롯하여 86명 의원들이 발의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 및 방지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7월 1일 공청회를 거쳐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이다. 법안은 기존에 '윤락'이나 '매매춘'이 아닌 '성매매'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성매매와 관련된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불법수익에 대해서는 국가가 몰수해 성매매 알선자들이 성매매를 통해 이득을 도모하는 행위를 차단하고자 하고 있다. 또한 '성매매'의 면책조항에서 성매매와 관련한 모든 채무관계를 무효로 하고, 이들의 지원체계를 의료·경제적 측면에서 다층화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함께 민 인권부장은 사람들의 인식 변화도 절실하다고 지적한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상대의 성을 함부로 착취하거나 짓밟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 한기위 연휴 잘 보내세요  
다음 하루소식은 16일자로 찾아갑니다.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리안)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2003년 9월 16일(화)

제 2415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배경내

## 농심 씨른 칸쿠회의 결국 결렬

### 최종선언문 도출 실패...이경해 씨 유해 18일 도착

이경해 씨를 죽음으로 내몬 WTO 5차 각료회의(아래 칸쿠회의)가 결국 결렬됐다. 99년 3차 각료회의가 시애틀 시가지를 점령한 각국 반세계화 활동가들에 의해 무산된 데 이어 이번 회의마저 무산돼 전지구적 자유무역에 향한 WTO의 의도가 또 한번 꺾인 셈이다.

WTO는 지난 10일(아래 현지시각)부터 14일까지 멕시코 칸쿠회에서 각료회의를 열어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의 의제를 중간 점검하고, 협상의 세부 원칙을 논의했으나 최종 선언문 도출에는 실패했다.

이에 앞서 13일 의장이 배포한 선언문 초안은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도 농산물 관세를 스위스 공식(관세 높은 품목은 관세를 더 많이 낮춤)에 따르거나, 5% 이하로 대폭 인하하도록 했다. 이는 관세가 100%를 넘는 품목이 142개나 되는 한국 농업의 몰락 위기를 의미했다. 또한 특정 품목에 보조금을 집중할 수 없도록 상한선을 설정해, 전체 보조금의 90%가 쌀에 지급되는 한국 농업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됐다. 이에 전국 민중연대는 "전면적인 농업개방으로 농민을 말살시킬 선언문 초안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칸쿠회상 중단과 한국 대표단의 철수를 요구했다.

결국 이 선언문 초안은 폐기됨으로써 농민들은 일단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이번 칸쿠회의 결렬 계기는 '싱가포르 이슈'였다. 14일 아침부터 열린 비공식 회의에서 '싱가포르 이슈' 협상을 개시하자 는 측과 협상 자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측이 평행선을 달리자 의장이 결국 합의 실패를 선언하고 회의를 종료한 것.

'싱가포르 이슈'는 전세계적 투자와 금융거래의 자유화를 보장하는 '투자자유화협정'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이번 회의에서 최종 통과를 앞두고 있던 TRIPS협정(무역관련지적재산권 협정)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운명에 처했다. 지난달 30일 나온 사전 합의안은 특허 의약품에 대한 강제실시 수해국의 범위를 최빈국으로만 한정하고 그 절차도 까다롭게 해 거센 비판 여론을 불러들인 바 있다. 의료, 교육 등 공공서비스

## 개인정보 '보호법안'인가, '수집 자유법안'인가 정보인권단체들, 행자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혹평

지난달 말 행정자치부가 입법예고한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개정안이 정보인권단체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행자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전자정부 환경에 걸맞도록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제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하고자" 한다고 개정 이유를 밝히면서도, '정보인권 없는 전자정부' 구상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진보네트워 크 장여경 정책국장은 "국제적 기준에 비춰봤을 때 상당히 미흡하고 어떤 부분은 현행 법령보다도 개악되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이번 개정안은 △정보수집의 최소성과 목적명확성을 기본 원칙으로 규정하면서도 이와 배치되는 '개인정보 수집의 자유'를 천명하고 있을 뿐 아니라 △모든 정보가 아닌 몇몇 한정된 정보에 대해서만 정보주체의 동의나 법률

의 사유화를 목표로 하는 서비스협상의 경우, 서비스 개방 계획서인 1차 양허안 미제출에 대해 조속한 제출을 촉구하는 정도에 머물러 아직 본격 협상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다.

한편, 전국민중연대와 전농 등 한국의 민중운동 진영은 칸쿠회의를 지지하기 위해 2백여 명의 '칸쿠회현지투쟁단'(아래 투쟁단)을 결성해 활동했다. 고 이경해 씨는 회의 개막일인 10일에 맞춰 열린 '국제공동농민행동의 날' 시위에서 "WTO가 농민을 죽인다"는 선전물을 가슴에 단 채 회의장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이 쳐 놓은 바리케이드 위에서 지니고 있던 칼로 자결했다. 투쟁단에 의하면, 그의 죽음 이후 경찰 바리케이드 앞에서 천막농성이 시작됐고, 그의 죽음을 기리는 촛불시위가 (2면에 계속)

적 근거를 요한다고 규정, 기본 원칙의 실효성을 무효화시키고 있다. 또 △정보수집에 앞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것을 명시하면서도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고서는 당해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동의 없이도 정보를 수집하고 다른 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비판을 받고 있다.

진보네트워 크 등 6개 단체는 지난 9월 행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정보수집 최소성의 원칙,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원칙, 사상·신념 등의 정보에 대한 수집금지 원칙 등을 구체화할 것 △다른 기관과 연계·활용될 수 있도록 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방안을 명문화할 것을 요구했다. 지문날인반대연대도 현행 법체계 내에 특별한 보호규정이 없는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정보의 사용을 제한하고 보호 책임주체를 명시할 것을 촉구했다. (대홍)

○ 최은아의 인권이야기 ○

호주제 폐지 이후 호적제도의 개혁 과제

지난 4일 법무부가 호주제 폐지를 주 골자로 하는 민법개정안을 입법 예고함에 따라, 이번 국회에서 민법개정안이 통과되기만 하면 호적제도의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호주제를 기본으로 가(家) 중심의 법적 신분관계를 국가에 등록하도록 한 현행 호적제도는 호주제 폐지 이후 호적법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될 것이다.

정부는 지난 5월부터 호주제 폐지 특별기획단을 구성·운영해오면서 최근 그 대안으로 개인별신분등록제를 채택했다. 이제는 가족별 편제나 개인별 편제나에 대한 논쟁이 더 이상 의미를 갖지 못하고, 새로운 신분등록제에 논의가 필요한 시점인 셈이다.

그 동안 언론을 통해 공개된 개인별신분등록제 안은 개인을 기준으로 신분변동사항(출생·혼인·사망·입양 등)을 기록하고 이곳에 부모, 배우자, 자녀의 기본 신분사항도 함께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는 '개인별'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본인 이외의 배우자, 부모, 자녀의 신분사항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이에 따라 부모, 배우자, 자녀를 구성원으로 하는 가족형태만이 '정상가족'이라는 지금의 고정관념을 유지시킬 위험이 그대로 남아있다. 한부모가족이나 독신가족, 이혼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이룬 사람들은 여전히 차별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개인별 신분등록제에는 개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만 등록하면 된다. 그 외 신분변동사항은 출생부, 혼인부, 사망부 등 사건별로 편제된 별도의 공부(公簿)를 만드는 방식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또 하나 호적제도를 개정하는 데 있어 검토해야 할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이다. 그 동안 한국의 국가신분증명제도는 과도한 정보집적으로 인해 인권을 침해해 왔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주민등록제도를 통해 동적인 인원사항을 파악해 왔고, 대법원에서는 호적제도를 통해 호주와 가족을 중심으로 한 정적인 신분관계를 파악해 왔다. 개인의 신분관련 정보를 두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수집·관리하는 것은 정보의 과다한 집적이다. 게다가 이 안은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는 물론 부모, 배우자, 자녀의 주민등록번호까지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이중으로 신분등록제도를 운영해야 할 어떤 이유가 있는가? 이 시점에서 이원적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주민등록제도와 호적제도의 통폐합을 검토해보아야 한다.

호주를 근간에 둔 현행 호적법의 연원은 일본 식민지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본은 효과적인 식민통치를 위하여 자국의 호적제도를 한반도에 이식시킨다. 일본의 호적제도는 막부 중심의 봉건제를 청산하고 일왕 중심의 중앙집권체계를 만드는 근대화 과정에서 생겨난 신분등록제도였다. 이 제도가 안착되자 일본에서는 징병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군국주의가 등장한다. 폐전 이후 일본은 호주제를 폐지했지만 한반도에서는 지난 50여년간 호주를 중심으로 한 호적제가 유지되어 왔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에 관한 논의는 그 물음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최은아님은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입니다.)

주간인권흐름

(2003년 9월 8일 ~ 9월 15일)

1. "전투병 주변 안 잡아먹지"  
알 카에다, 9·11 테러 능가할 대규모 공격 시작하겠다고 선언(9.7)/ 부시 미 대통령, 미 주도 아래 세계 각국 군대가 이라크 치안유지와 재건에 협력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협력 촉구(9.8)/ <에이비시방송>과 <워싱턴포스트> 여론조사 결과, "미국인 48%가 이라크 침공이 미국에 대한 테러 가능성 키웠다고 생각"(9.9)/ 국방부, 미국이 이라크 전후의 치안유지 차원에서 전투병 파병을 요청해 왔다고 밝혀(9.9)/ 부시 대통령, 9·11 테러 2주기 맞아 제2 페트리트법 통해 테러 용의자에 대한 수사권 확대 추진하겠다고는 의사 밝혀(9.11)/ 서울의 한 외교소식통, "미국이 요청한 파병 규모는 1개여단(3천~4천명)급일 가능성 높다"...참여연대, 민중연대 등 "추가 파병 절대 안돼"(9.15)

2. 북-미 비랑끝 대치정국 풀릴까?  
파월 미 국무장관, "북이 핵포기 의지 밝히고 검증절차 동의하면 북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안전보장 제공할 것"(9.7)/ 북, 정권 수립 55돌 기념일(9·9절) 맞아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2만여 병력이 참여한 가운데 열병식 벌여...미사일·전차 등 군사장비 동원한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는 없어(9.9)

3. 태풍도 못 꺼뜨린 부안의 촛불  
김종규 부안군수, 핵폐기장 백지화 요구하는 부안군민 자극하다 집단폭행 당해(9.8)/ 노 대통령, 국무회의서 "군수 폭행 엄단"과 "폭력 불법행위 반복되는 집회·시위에 예방적 단속 가능하도록 집시법 개정 검토" 지시...60개 중 대 6천여명으로 3배나 늘려 경찰병력 배치(9.9)/ '핵폐기장 백지화 대책위', 8천여명 참석한 대규모 촛불집회 열고 핵폐기장 유치 철회 등 촉구(9.10)/ 부안지역 학교운영위원장과 범부안군민대책위, 등교거부 계속할 뜻 밝혀(9.14)/ 전북 교사 3천여명, 핵폐기장 유치 철회와 핵에너지 정책 대전환 촉구 선언 발표(9.15)

(헝가에서 이어짐) 매일 열렸으며, 각국 농민단체들의 연대 투쟁이 잇따랐다. 이 씨의 유해는 18일(한국시간) 한국에 도착, 이후 장례는 '세계농민장'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칸쿤회의 결렬에 대해 전농은 "비인간적인 세계화를 저지하기 위해 칸쿤에 모인 반세계화 진영의 투쟁과 자결로서 항거한 게 이경해 씨의 피의 결과"라며, 한국 정부에 추가적인 농업개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칸쿤회의는 결국 결렬되었지만 WTO 협상 자체가 취소된 것은 아니다. 칸쿤회의에서 중간 점검을 했던 DDA 협상은 계속되며 올해 12월 15일 이전까지 제네바에서 고위급 일반 이사회가 개최돼 이후 필요한 결정을 하게 된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이 회의에서 향후 협상 일정 등 로드맵을 다시 만들어 협상을 재개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성준]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리안)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2003년 9월 17일(수)  
제 2416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배경내

미군 4500명은 왜 후송되었을까

6천명 후송자 중 75% 이유 의문·열화우라늄탄등 원인 지목

이라크전 개시 이후 지금까지 6천명 이상의 미군이 '의료적인' 이유로 후송되었다는 사실이 최근 알려지면서 미국 사회는 물론 미국으로부터 전투병 파병요구를 받고 있는 나라들에게도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하지만 후송된 미군의 75%가 어떤 의료적 문제를 안고 있는지 그 구체적 내용이 밝혀지지 않고 있어 더 큰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육체적 혹은 정신적 이유로 후송된 미군 수가 6천명을 넘어섰다는 보도를 최초로 내놓은 것은 <워싱턴포스트>였다. <워싱턴포스트>는 지난 2일자 기사에서 미 중부사령부를 소식통으로 인용하며 이 같은 사실을 보도했다. 뒤이어 14일 영국의 일요신문 <옵저버>지도 자사가 입수한 자료를 근거로 유사한 내용을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는 당시 기사에서 후송된 6천명 중 1124명이 전투로 인해 부상당했고, 301명은 차량사고와 같은 비전투 사고로 인해 부상당했다고 보도했다. 반면 <옵저버>지는 전투로 인한 부상자 수를 1178명이라고 보도했다. 보도 날짜의 차이와 지난주에만 55명의 미군이 작전 중 부상을 당했다는 발표 등을 종합해 볼 때, 두 신문간 전투중 부상자 수의 오차는 거의 없는 셈이다. 문제는 후송 사유가 뚜렷하지 않은 나머지 4500명에 대해서는 두 신문 모두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지금껏 미군 당국은 이들 4500명이 어떤 진단을 받았으며, 발병하기까지 어떤 임무를 수행 중이었는지, 얼마 동안 병을 앓았으며 또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는 상태. 후송작업도 은밀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세계사회주의자웹사이트>(WSWS)는 지난 9일자 기사를 통해 '4500명의 군인을 포함해 이미 사망한 군인들 가운데서도 열화우라늄이나 탄저병 백신에 노출된 것이 원인일 수 있다'는 강력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최근 심각한 폐렴을 앓다 사망하거나 입원하는 미군에 관한 보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신문은 "열화우라늄에 오염된 미립자를 집중 흡입하게 되면 폐와 신장이 손상을 입게 된다는 사실은 이미 확증되었"고, "탄저병 백신 역시 폐렴을 불러일으킨다는 의학적 의혹이 보고된 바 있다"고 보도했다. 여기서 말한 의혹이란 지난해 <Cardiopulmonary and Critical Care Journal 8월호>에 게재된 세 명의 군의관의 보고를 말한다. 또한 신문에 따르면, 지난 7월 12일 폐렴으로 사망한 조시 노이취와 8월 6

일 사망한 제페리노 콜링가의 가족들 역시 미군 당국이 사망 원인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고인의 의료 기록과 피와 조직 샘플 등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걸프전 참전군인을 돕는 <전국걸프전지원센터>도 이들 가족들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걸프전 증후군"을 낳은 주인공이었던 열화우라늄을 이들 군인들의 후송 사유로 지목하는 목소리가 크다. 이번 이라크전에서는 100~200톤 가량의 열화우라늄탄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미군의 즉각적인 중동지역 철수를 주장하는 군인가족단체인 <그들을 당장 집으로 돌려보내라!>(Bring Them Home Now!)는 군인들을 열화우라늄으로부터 보호할 유일한 길은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하나의 가능성은 <옵저버>지가 인용한 전문가들의 경고처럼, 장기간 전투상황에 노출된 미군들 가운데 심리적 장애가 발생한 경우다.

그 어떤 경우든 미군이 겪고 있는 악몽 같은 오늘은 이라크로 파병될 한국군이 겪게 될 내일이다. (배경내)

“전투병 파병, 명분도 실리도 없다”

361개 단체, '이라크 민중 겨울 총부리 반대' 한 목소리

미국의 전투병 파병 요구의 구체적 윤곽이 드러나면서, 파병반대 여론이 더욱 거세어지고 있다. 16일 11시 정 부합동청사 앞에서는 '이라크 전투병 파병 저지'를 위한 361개 사회단체 대표들의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회를 맡은 녹색연합 김재남 사무처장은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전쟁에 전투병을 파병하는 것은 결국 피를 불러올 뿐"이라고 말했다. 전국민중연대 공동대표 홍근수 목사도 "전투병 파병은 한국군을 미군의 총알받이로 내모는 행위에 다름 아니며, 이라크 민중들에게

불의한 총부리를 겨누는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며, "정권의 파병에 대한 호의적 고려는 엄청난 민중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동당 천영세 부대표도 "침략전쟁을 부정하고 있는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미국의 일방적인 파병 요구에 정부와 일부 보수언론, 정치인들이 보이는 태도는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힐난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박순성 소장은 "각종 학술회의와 언론활동을 통해 이라크 현지 상황을 올바르게 알리고, 파병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들을 (2면에 계속)

# 국방부, 대인지뢰 추가 도입한다

## 내년 예산 59억원 추가 책정...한국형 지뢰살포기도 개발

국방부가 반인도적 무기인 대인지뢰 도입과 지뢰살포기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이 뒤늦게 폭로됐다. 이것은 이미 살포된 대인지뢰의 제거와 대인지뢰 피해자 보상을 요구하는 여론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것으로 앞으로 많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아래 대책회의)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2000년부터 오는 2007년까지 총 1858억 원을 들여 한국형 지뢰살포기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도 계속사업 예산으로 243억원을 책정했다. 이는 지난해 예산에 비해 59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증액분은 '전투에비탄약'의 증가 때문으로 설명되고 있다. '전투에비탄약'에는 M74 대인지뢰, M75 대전차 지뢰, M79 연습용 대전

차 지뢰가 포함된다. 대책회의 이시우 집행위원은 "한미연합사가 관리하는 전투에비탄약이 증가했다는 말은 미국으로부터 대인·대전차 지뢰를 지난해 보다 더 많이 수입한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이에 대책회의와 참여연대는 15일 발표한 공동성명서를 통해 "지뢰 문제의 구체적 해결은 뒤로 미루어 놓은 채 또 다른 지뢰를 도입하고 한국형 지뢰살포기를 생산하겠다는 국방부의 의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사업의 중단을 요구했다. 이 사업은 지난 99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도 "정부에서 99년내 '특정제래무기금지협약'(CCW) 가입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137억 원이 계상된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현재 한국에는 모두 112만5천 발의 지뢰가 매설돼 있고, 미확인 지뢰지대가 민통선 지역뿐 아니라 후방지대에 까지 분포돼 있다. 또 한국전쟁 이후 2천여 명의 민간인이 지뢰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배상액 추정치는 70억 원 정도로 이번에 폭로된 지뢰살포기 개발사업 총예산의 1/20도 되지 않는다. 또한 한국은 전세계 140개국에 가입하고 있으며 모든 대인지뢰의 사용, 비축, 제조, 이전을 금지하고 폐기하도록 하는 '오타와 협약' 동참을 거부해 국제사회의 빈축을 사고 있다. (강성준)

(☞면에서 이어짐) 바로잡아 국익과 안보론이 얼마나 허구적인가를 국민들이 좀더 잘 알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범국민적 파병반대 여론 조성에 힘을 쓸 것을 다짐했다.

정부는 지난 4월 국익과 실리를 내세워 비전투병을 파병하였지만 무엇이 국익에 도움이 되었는지 무엇하나 구체적으로 국민 앞에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 이미 파견된 비전투병의 안전도 게릴라전이 만성화되면서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명분도 실리도 없는 전쟁에 전투병까지 추가 파병하는 것은 이라크는 물론 중동지역 전체 민중들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저지르는 행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이들 단체들의 주장이다.

기자회견장에서 거리선전전을 진행한 박태현 씨(대학 2학년)는 "미국 점령하에서 이라크 민중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종식하고, 차후 미국의 패권주의가 불러올 또 다른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이번 파병에 대한 전국민적인 반대 의지가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9.27 국제반전공동행동' 조직위원회 이상권 씨도 "거리와 대학, 작업장과 각 지역에서 캠페인과 토론회를 통해 반전평화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것"이라며, 오는 27일 열린 국제반전행동의 날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9.27 국제반전공동행동' 조직위원회는 현재 220여개 사회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인자격으로 조직위원회에 참여한 인원만도 3천여 명에 이른다. (양승훈)

# '무노조 신화' 깨진 삼성, 보복 나서나

## 삼성플라자, 노조 임원들 협박·감시 일삼아

삼성플라자 노동조합에 대한 삼성측의 탄압이 지속적으로 자행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삼성플라자 노조는 지난 5일 '무노조 경영, 노조탄압'으로 악명높은 삼성계열사 소속 기업에서 설립돼 큰 화제가 된 바 있다.

삼성플라자 노조 한동혁 위원장은 약 2년 전부터 비밀리에 한국노총의 도움을 받아 노동조합 설립을 준비해 왔다. 지난 1일 한 위원장등 3명은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를 성남시청에 제출했으나, 조합원 결격사유 등을 이유로 2일 곧바로 반려 처분됐다. 이에 한국노총 성남지부 관계자들이 사측에서 제공한 허위정보만 믿고 내린 반려처분은 잘못된 것이라며 거세게 항의하자, 성남시청은 4일 재검토를 거쳐 5일 결국 노조설립필증을 교부했다. 한 위원장은 "노조설립까지의 과정은 힘든 고통의 연속이었다"고 회고했다.

하지만 노조설립 이후에도 한 위원장을 비롯한 3명의 노조 임원진의 힘겨운 고통의 시간은 끝나지 않았다. 한 위원장은 본지와외의 통화에서 "밤을 새며 강제면담을 하고 사측에서 경비요원을 불러 화장실 가는 것까지 감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내에서 컴퓨터 사용을 금지하고, 다시 회계나 인사 업무 쪽으로 밀어넣어 위원장 자격을 박탈하려 한다. 동료에게 알리고 잠시 외출한 것을 무단이탈이라며 퇴사 운운하고 있다. 지금 받고 있는 전화도 도청되고 있다"며 극심한 노조탄압으로 인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사측의 이러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임에는 명백하다. 하지만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않다. 한 위원장은 "노조간부에 대한 집중 회유와 공갈협박은 이미 예상했던 일이고, 포기할 노동조합이라면 시작하지도 않았다"며 결의를 다졌다. 한 위원장은 또 "단체교섭을 요구해 원만하게 합의하고 싶지만, 노조탄압이 계속될 경우 한국노총과 함께 투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홍)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 청구성심병원 집단산재 전원인정

## 특감, 위법사실 38건 적발 ... 부당노동행위 조사는 미뤄

노조 탄압과 직장내 집단 따돌림에 의한 정신질환을 이유로 산재인정 신청을 냈다가 판정 보류 결정을 받았던 청구성심병원노조 조합원 3명이 추가로 산재인정 판정을 받았다. 이에 앞서 지난 달 1일 5명의 조합원들이 같은 이유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은 바 있어 집단산재인정을 했던 9명 중 개인사정으로 신청을 철회한 1명을 제외하고 전원이 산재 인정을 받은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9일 조합원 3명에 대해 "업무와 관련하여 우울·불안 반응을 수반한 적응장애가 발생했다"며 제출한 요양신청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고 통보했다. 청구성심노조 최윤경 직무대행은 "지난 두 달간 연대 투쟁한 동지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고 만족해하면서도 "요양기간이 끝나고 병원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재발하지 않으려면 사측의 부당노동행위가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3개월 요양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다음 달 7일에는 병원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날 승인 통보를 받은 이명 교섭위원도 "노조 탄압 책임자들이 여전히 버티고 있는 병원에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니 끔찍하다"며 "이 상태로 돌아가면 적응장애가 악화될지도 모르겠다"고 털어놨다.

한편 16일에는 서울지방노동청 주관으로 지난달 25일부터 10일간 진행된 특별근로감독 결과가 나왔다. 노동청은 사측의 위법 사항으로 △임산부 야간업무 및 휴일근로 △노사협의회 미개최 △산재발생보고의무 불이행 등 38건을 적발했으나 정작 문제가 된 부당노동행위는 조사 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관찰서부사무소에서 추가조사 하도록 했을

뿐 위법사항을 지적하지는 않았다. 노동청 관계자는 "향후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30일 이내의 시정기간을 부여하여 자진 시정토록 서부사무소에 지시했고, 기일 내 시정하지 않을 경우 입건 수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최 직무대행은 "서부사무소의 1차 특감이 편파적이어서 서울지방노동청이 주관하는 2차 특감이 진행된 것인데 다시 서부사무소로 책임이 넘어갔다"며 서부사무소 차원의 신속한 조사와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강성준)

# 재일동포 폭력·차별 반대, 국내 인권·사회단체 나섰다

최근 일본 내 총련계 건물에 총알이 날아들고 시한 폭탄이 발견되는 등 재일동포에 대한 보수우익집단의 폭력행위가 도를 넘어선 가운데, 국내 인권사

2003년 9월 18일(목)

제 2417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배경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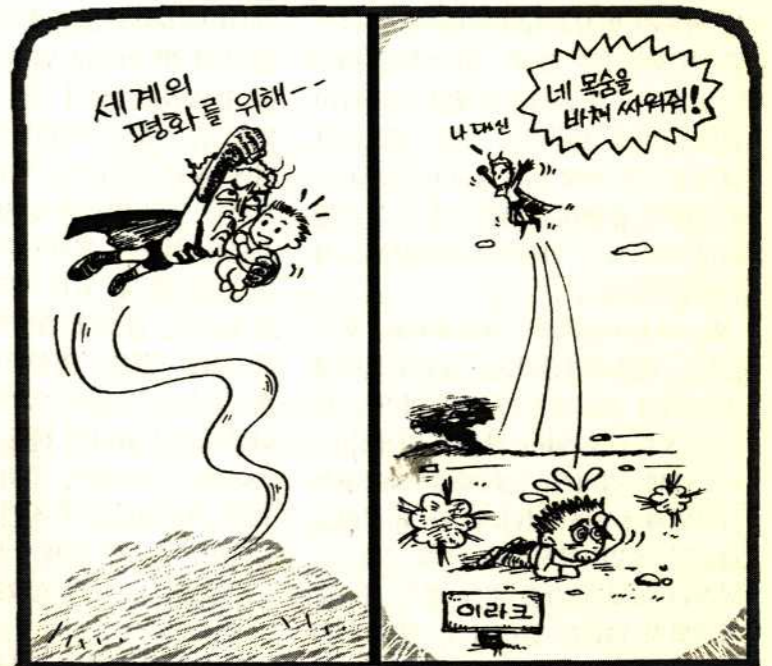
회단체들이 한일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북일 정상회담 1주년을 맞아 17일 민변, 참여연대 등 40개 사회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뒤늦게 밝혀진 일본인 납치 사건과 북미간 핵 갈등을 계기로 일본 내 반북감정이 고조되고, 일본의 군사 대국화와 보수우경화는 비합리적인 민족감정과 갈등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하고 일본정부에게 가해 주체에 대한 처벌과 재발방지책을 요구했다. 특히 그 동안 대학수험자격 등의 제도적 차별과 폭언, 폭행에 시달려온 2만여 명의 동포 학생들이 평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일본정부의 제도적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 재정위기에 처한 민족교육기관을 살리기 위한 한국정부 차원의 지원대책도 요구했다.

동아시아평화마사 정병호 대표(한양대 문화인류학 교수)는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 성명은 사회 주류집단의 우경화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일본의 양심세력에게 용기를 줄 것"이라며 사회단체들이 구체적인 사업들을 계속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성준)

# 만화사랑방

이동수



<기획연재> 공공부문 간접고용 실태와 대안 ①

### 장시간 노동, 박봉에 우는 간접고용 노동자들

(인권하루소식)은 총 4회에 걸쳐서 공공 부문 간접고용(위장도급, 파견 등) 노동 실태를 살피고,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비정규직 노동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비정규직 노동을 확산시키고 있음을 우리는 이 기획을 통해 확인할 것이다. 이 기획은 지난 상반기 인권운동사랑방 기획사업반이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등 4개 단체와 함께 진행한 공공부문 간접고용 실태 조사의 결과에 기반하고 있다. (편집자 주)

서울대공원에서 분노 수거와 쓰레기 처리업무를 담당하는 용역노동자 김 씨. 그는 주 평균 48시간에서 50시간, 월 평균 28일이나 근무를 하면서도 고작 손에는 50만원에 불과한 임금을 받는다며 울분을 토했다. 부산대에서 근무하는 청소용역 노동자 최 씨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의 올 3월분 임금명세서를 보면, 통상임금 43만5100원에 실수령액이 49만277원으로 법정최저임금 51만4150원에 미달했다.

법정최저임금으로 임금을 결정

법정최저임금이 일종의 '임금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 2001년과 2002년 두 차례에 걸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고발되었던 해양대는 올해 새로 체결한 용역계약에서는 정확히 법정최저임금만큼만 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고, 전남대도 2002년 9월부터 법정최저임금인 51만4150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추정되는 최소한의 금액이,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 있어서는 임금의 상한선으로 기능하는 것이다.

또 서울대공원과 파견계약을 맺고 있는 (주)대원관리는 노동자들에게 "퇴직금의 지급대상이 아님"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서약서 작성을 강제하고, 부산대의 경비직 노동자를 고용하는 용역업체에서는 일년에 단 하루라도 결근을 하면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 퇴직금 이외의 각종 수당 역시 제대로 지급되지 않음은 물론이다. 경북대 공대 12호관의 경비직을 담당하고 있는 용

역노동자 양 씨는 매일 야간근무를 하면서 월 77만원의 급여를 받지만, 기숙사 경비를 맞고 있는 계약직 노동자는 격일 근무에 월급 90만원, 상여금 연 70만원을 받는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동일직종에 종사하는 정규직만 아니라 직접고용 계약직 노동자들과도 임금 차이가 현저하다.

항상적 고용불안, 만성화된 불법 고용

대구 KBS에서 운전일을 하는 유 씨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불안한 미래이다. 파견법상의 직접고용 의무를 피하기 위한 사측의 조치로 2년의 계약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계약이 만료되기 때문이다. "돈을 적게 받든 많이 받든, 안정적으로 일할 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유 씨는 말한다.

파견법 제6조 제3항에는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에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피하기 위해 사용사업주들은 2년마다 주기적으로 노동자들을 해고한다. 파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 조항이 오히려 현실에서는 악용되고 있는 것.

형식적으로는 도급계약 혹은 용역계약(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맺고 임금을 받을 뿐 아니라 업무의 지휘·감독도 용역업체로부터 받는 것)을 맺고 있는 경우에도 사실상 불법파견(파견법에 따라 허가받은 파견업체와 근로계약을 맺고 임금을 받지만, 사용업체로부터 업무상 지시·감독을 받는 경우)으로 볼 수 있는 계약내용도 비일비재하다. 경북대 경비직 용역노동자 유 씨에 의하면 일상적인 업무의 지휘·감독은 실질적으로 학교측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용역업체 소속이지만, 유 씨는 출퇴근 확인은 학교측 관리책임자가 직접 전화로 하고 있으며, 업무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도 학교측으로부터 경고조치를 받는다 고 전한다.

더욱 문제가 되는 이러한 불법파견

에 대한 사용사업주의 대응이다. 부산교통공단은 지난해 8월 지하철 2호선 3단계 개통이 이루어지면서 정규직을 채용하지 않고 매표업무를 완전히 민간에 위탁하였다. 이 매표업무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사용사업주(부산교통공단) 및 파견사업주는 부산지방노동청으로부터 불법파견으로 행정지도 및 행정처분을 받은 상태이지만, 파견사업주 측에서 집행정지가처분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아직 용역노동자들이 계속해서 매표업무를 하고 있다. 이른바 공공기업이 국가기관의 시정 지시까지 무시하며 간접고용 노동자를 불법적으로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 (박세진)

### 한나라당 인권위도 사회보호법 폐지에 한목소리

한나라당 인권위원회(위원장 이주영)가 사회보호법을 폐지기로 결정했다.

한나라당 인권위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참석위원 전원 일치로 사회보호법 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처분은 형벌을 종료한 자에 대한 이중처벌이며 피보호감호자의 법적 지위가 수형자가 아님에도 일반 교도소의 수형자에 준하는 처우를 함으로써 피보호감호자의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사회보호법 폐지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인권위는 사회보호법 폐지의 대안으로, 수형자들이 원만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호관찰, 교육명령 등 실효성 있는 사회복귀 프로그램을 담아 대체입법을 마련하는 한편, 사회보호법에 함께 규정돼 있는 치료감호의 경우 인권사회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별도의 입법을 제정기로 했다.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인권위 결정과 관련해 환영의 평을 발표했다. 공대위는 "한나라당 인권위원회가 내린 사회보호법 폐지 결정은 대단히 의미있는 행동"이라고 평가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이를 당론화해줄 것을 주문했다.

앞으로 한나라당 인권위는 연내 국회에서 사회보호법을 폐지시킨다는 계획 하에 9월 안으로 사회보호법 폐지 법안을 만들고, 이를 당론화하는 등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유해정)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3년 9월 19일(금)  
제 2418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배경내

## 국정원 키울 테러방지법 재추진

### 민주당·국정원 협의안 마련...국정원 위상·권한 대폭 강화

지난해 제정이 무산된 테러방지법의 제정을 민주당과 국정원이 또다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보위원회(위원장 김덕규) 소속 민주당 위원들과 국정원은 최근 테러방지법안을 새롭게 마련하고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한변협 등을 찾아가 법안 내용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보위 장세훈 조사관은 "한나라당의 공식 입장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지만 예초 원안에 비해 대폭 수정되었기에 큰 무리없이 여야합의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국감이 끝나는) 10월 중순 이후 법안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인권단체들은 다음주 초 긴급 간담회를 갖고 대응방향을 결정기로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법안에 대한 내부 검토를 긴급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문제조항 손났지만 골격 그대로

이번에 마련된 테러방지법안은 지난해 인권단체들의 거센 반발과 국가인권위의 제정 중단 권고까지 받았던 예초 원안의 문제점을 상당 부분 수정했다. 총 15개조와 부칙 2조로 구성된 이 법안은 인권침해 논란을 빚었던 △모호한 '테러'와 '테러단체'의 개념을 좀더 명확히 하고 △대테러활동에 동원된 군병력의 불심검문·보호조치 등 권한 부여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테러범죄와 단체구성, 불교지죄 등에 관한 벌칙조항도 모두 삭제했다. 하지만 이번 법안 역시 인권침해의 주범으로 지탄받아 온 국정원의 권한을 크게 강화하고 군대를 국내 치안유지활동에 동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큰 골격에서는 변함이 없다. 특히 국정원은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설치, '테러대책'을 명분으로 정보수집과 수사 권한을 대폭 확대하고 관계부처들을 통합·지휘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개혁 대상 국정원에 큰 권한 부여

민변의 최병모 회장은 "이런 문제점 덩어리의 법안은 결코 제정되어선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최 회장은 "국정원이 수사 관할권을 확장하고 다른 국가기관까지 통합 지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위상과 권한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게 이 법안의 목적"이라고 꼬집은 뒤, "수지 김 사건에서 이미 드러났듯이 국정원에서 수사권을 떼어내고 국내정보활동을 제한해야 한다는 개혁방향과 전면 배치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이와 함께 "군대

를 국내 치안유지활동에 동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계엄선포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계수 교수(울산대 법학)도 "이 법안은 국정원 산하에 큰 권한을 가진 대테러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정원 개혁 논의는 진행하지 않으면서 국정원의 힘을 키우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테러방지법으로 테러 예방 안된다"

이 교수는 또 "9·11 이후 미국에서 반테러를 명분으로 수사기관의 권한이 대폭 강화되고 시민적 자유가 제한됐지만 테러 위험은 오히려 높아져 이제는 공화당 안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며 "인권침해 위험까지 감수하고 테러방지법을 제정한다고 테러가 예방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2월 현행법과 제도로도 테러 예방과 진압 등을 위한 통합적 체제와 광범위한 권한이 확보돼 있고, 테러방지법안에 인권침해 소지가 많다는 법 제정 자체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배경내)

테러방지법안의 주요 내용	
테러의 정의	항공기의 불법납치·억제·위협약동 9개 국제협약이 규정한 범죄
테러단체의 정의	유엔 지정 단체 또는 이 단체와 연계된 국내외 결사 또는 집단
대테러대책회의	△대통령 소속 △관계부처 장관과 국정원장 등이 위원(의장은 국무총리) △대테러정책 수립방향 등 중요사항 심의
대테러센터 설치	△국정원장 소속 △테러징후의 탐지·경보, 대테러활동의 기획·지도·조정 등의 활동 △조직·성원 비공개 가능
테러사건대책기구	△관계기관에 테러사건대책본부 설치 △군대, 경찰, 해양경찰 내 테러진압 특수부대 지정·설치 △특수부대의 운영·훈련 등 비공개
대테러대책	△분야별 대테러대책 수립 △국정원장(대테러센터의 장)이 관계기관으로 구성되는 대책기구 설치·운영
외국인 출입국 규제	△국정원장(대테러센터의 장)이 테러단체 구성원으로 의심되는 외국인에 대한 각종 정보 수집 △법무장관에 출입국 규제 요청
특수부대 출동	△테러사건 발생시 국정원장이 특수부대 출동 요청
군병력 동원	△대책회의 의장이 대통령에 시설 보호·경비에 필요한 군병력 지원 건의 △대통령이 국회에 미리 '통보'하면 군병력 등 지원 가능
사법경찰관 부여	대테러센터 공무원에 사법경찰관(수사권) 부여

<특별 기고> 대학도서관 개방운동의 의미 - 김지운 (<불한당> 편집위원)

# 정보의 사적 독점에 맞선 '올리브 프로젝트'

어떤 광고를 보았더니 중, 고등학교의 답이 없어지면서 대한민국이 달라지고 있다고 했다. 또 얼마 전 신문에서는 몇몇 대학들이 지역 주민과 함께 한다는 의미에서 답을 허물고 있다는 기사도 있었다. 기존의 폐쇄적 이미지를 극복하기 위해 일종의 퍼포먼스로 답을 허물고 주민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든 것은 충분히 좋은 시도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개방했을 때 실제 알맹이가 될 것들은 그대로 둔 채 겉만 열 어두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대학도서관 앞에는 아직도 바코드 인식기가 딱 하나 버티고 있다. 이 기계는 출입을 허가받지 못한 사람들을 원천봉쇄하고 있다. 그 학교 학생이 아닌 사람들에게 바코드 인식기는 출입을 막는 커다란 벽인 것이다. 대학의 답은 없어도 대학도서관으로 가는 진짜 벽은 아직도 남아있는 셈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변하려면 아직 멀었다.

진짜 벽은 그대로 남은 대학

지역 주민의 출입을 가로막은 그 벽 안에는 공공도서관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많은 수의 훌륭한 장서들이 빼곡이 들어차 있다. 일례로 성북구의 경우를 보자. 성북구민의 수는 총 44만 명, 성북구 공공도서관의 장서는 총 4만2천 권이니, 주민 1명당 장서 수는 약 0.1 권 정도가 된다. 그에 반해 같은 성북구에 위치한 고려대학교의 장서는 학생 2만 명에 200만 권이다. 학생 1명당 100권 정도가 되는 셈이다. 공공도서관과는 무려 100배 정도의 차이가 난다.

물론 대학은 연구를 위한 공간이기에 한 구의 공공도서관과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긴 하다. 그렇다고 해도 100배 이상의 특혜를 단지 대학을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독점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 일이 아닌가. 특히 요즘처럼 정보의 가치가 더욱 중요해지는 시대에 정보 독점은 대학에 들어간 사람들과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사이의 불평등의 골을 더욱 깊게 팔 우려가 있다. 몇몇 대학의 경우는 인터넷을 통해 그 학교에 어떤 장서가 몇 권이나 있는

지 검색하는 것조차 제한하고 있을 정도이니 그 정도는 심각하다.

정보의 사적 독점, 불평등 키워

'OLIB (Open LIBrary) 프로젝트' (아래 올리브)는 이와 같이 폐쇄적이고 독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 대학도서관의 모습을 바꾸기 위해 고대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인 매체상상력, 생활도서관, 장애인권위원회, 불한당 등이 함께 시작한 운동이다.

대학도서관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것만이 올리브의 목표는 아니다. 사회적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정보의 사적 독점을 막고 누구나 자유롭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찾기 위해 대학도서관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것과 동시에, '교육문화의 공간으로서의 도서관 기능의 복원'을 꿈꾼다. 현재 대학도서관은 취업준비를 위한 독서실과 같은 처지에 놓여있다. 사실 도서관은 다양한 문화의 집산지이며, 고갈되지 않는 정보의 샘터로 기능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올리브는 현실에 대한 비판과 함께 지역 주민이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다양한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대학도서관을 변모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올리브는 대학도서관이 '소수자들을 위한 도서관'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소수자들을 위한 기본적인 시설을 갖추는 것과 함께, 쉽게 이동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위한 우편 서비스와 같이 적극적인 소수자 정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친인권 도서관 꿈꾸는 '올리브'

우리가 이와 같은 주장을 처음 내걸었을 때, 외부인이 들어오는 것을 꺼리는 대학생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지금도 도서관에 자리가 없는데 외부 사람이 들어오면 자리부족이 더 심각해지지 않겠냐는 것이 주된 불만이었다. 물론 도서관에 자리가 없어 발을 동동 구르는 학생들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한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처럼 계속 대학서

관을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합리화되는 것은 아니다.

자리가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도서관과 독서실을 착각하고 있다. 대학생들이 도서관에 요구하는 '자리'는 독서실형 좌석이다. 이런 공간은 굳이 도서관이 아니라도 다른 곳에 따로 설치할 수 있다. 도서관 개방은 도서관에 있는 자료들을 나누자는 운동이다. 도서관에 자리가 없기 때문에 외부인의 출입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은 도서관 개방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또한 대학생들은 등록금을 냈다는 이유로 도서관 개방을 반대하고 있지만, 등록금을 이유로 대학도서관에 대한 배타적인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 대학도서관은 대학생들의 등록금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학도서관은 국가의 직접적인 재정지원에서부터 졸업생들의 유·무형의 기여, 그리고 그 외 대학을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사회적 노력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학생들은 등록금을 내고 대학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을 받고 새로운 지식을 생산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그곳을 점유하고 있을 뿐이다.

대학도서관은 사회적 향유의 대상

좀더 근본적으로 대학이라는 공간 자체의 성격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대학도서관 개방의 의미는 더욱 뚜렷해진다. 우리는 흔히 대학을 출세와 영달을 위한 학벌 재생산 공장쯤으로 여긴다. 하지만 대학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지식을 생산하고 그것을 사회로 환원하기 위해 설립된 곳을 생각해보면, 대학은 어떤 식으로든 스스로의 지식을 사회적으로 환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렇다면 대학도서관에 쌓인 지식 또한 문을 푼다 닫아 잠그고 쳐 박아둘 것이 아니라 보다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열려나가는 것이다. 대학도서관 개방은 바로 대학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제기에 다름 아니다.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3년 9월 20일(토)

제 2419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배경내

## 전자건강카드 또다시 물 위로

### 공무원·업계 등 컨소시엄 구성...전자주민카드로 확장 의욕

지난 2001년 보건복지부 주도로 도입되려다 정보인권단체들의 반대에 부딪혀 폐기됐던 전자건강카드가 다시 추진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자정부 연구센터 산하 '스마트카드 컨소시엄'의 한 관계자는 "지난 6월 30일 삼성 SDS, LG CNS, 쌍용 등 대기업과 학계가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했다"면서 "시민단체뿐 아니라 의료기관과 국민 여론을 수렴해 합의를 도출한 후 본 사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공무원들도 '개

인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어 향후 정부 정책에 얼마나 반영될지 주목된다. 컨소시엄이 마련한 초안은 2001년 안과 비교할 때 △이름과 주민번호 외 처방내역, 개인병력사항 등의 개인정보는 원하는 사람만 카드에 저장하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주민번호를 제외하고 대신 공인인증서를 탑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당시 비판 여론의 지적사항을 피해가는 방향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사라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다. 지문날인반대연대 윤현식 활동가는 "카드의 내장칩에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험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관리기관 내부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연동시킬 경우 정보가 집적될 수 있으므로 유출 위험은 여전히 있다"고 밝혔다. 유출 사고는 외부 해킹보다는 관리기관 내부자 소행인 경우가 더 많다는 것.

또 윤 활동가는 "주민등록증이 없는 청소년도 전자건강카드는 발급 받도록 되어 있어 유출 사고가 생기면 피해범위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제약회사나 보험회사가 병력

이나 투약내역 등에 군침을 흘리고 있는 상황여서 상업적 거래의 위험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또 이 컨소시엄 관계자는 사업 목적으로 "허위·부당·과장청구 등 의료기관의 부당청구 추정액이 1조원에 이르러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과 신뢰도를 실추시키고 있다"며 "전자건강카드

## <논평> 파병과 테러방지법이 이끄는 '죽음'의 쌍두마차

9·11 테러 이후 미국은 대외적으로는 테러지원국을 응징한다며 아프간과 이라크를 침략했고, 대내적으로는 반테러법을 제정하여 정보기관에 수사권을 쥐어주었다. 나아가 부시의 미국은 자신이 만든 흑백논리를 들이밀며 전 세계를 향해 '반테러연대'에 동참할 것을 강요했다. 침략전쟁과 반테러법이라는 두 마리의 말이 이끄는 '테러와의 전쟁'을 통해 미국은 자신의 세계패권을 강화하고자 했던 것이다.

지난 3월 시작된 이라크 전쟁은 아무런 명분도 없고 유엔의 결의조차 거치지 않은 침략전쟁에 다름 아니었다. 이라크 민중에게 미국이 '해방자'가 아닌 '침략자'로 인식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제는 이슬람 전사들만이 아니라 이라크 민중들도 미군을 공격하고 있다. 의기양양하게 종전을 선언했던 부시는 이러한 이라크의 저항 앞에 베트남전에서와 같은 좌절을 맛보고 있는 것이다. 테러방지를 명분으로 제정된 패트리엇법 역시 '인권'에 대한 테러'에 다름 아니었다. 미국인들은 지금 테러의 위협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증대된 현실에서 수사권까지 거머쥔 정보기관에 의해 일상적인 인권침해에 시달리고 있다. '반테러연대'에 동참을 선언하고 각종 테러방지법을 만들어왔던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무소불위의 수사기관들 앞에 인권이 무릎 꿇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이처럼 미국은 반테러를 명분으로 국내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고, 해외에서는 침략전쟁을 벌이며 테러와의 전쟁을 세계화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미국은 자신이 파놓은 수렁에 같이 빠져죽을 한국 동맹군의 추가 파병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내에서는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비상식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테러방지법이 재추진되고 있다. 미국의 패권 전략을 그대로 좇아 전투병을 파병하고 테러방지법까지 제정했을 때 초래될 파괴적 결과는 상상하기조차 힘들다. 12억 이슬람 민중들에게 침략자의 톨마니로 찍히는 것은 물론 피의 악순환을 불러오게 될 것이고,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격상한 국정원에게는 우리의 자유를 저당잡히게 될 것이다. 그러하기에 '평화와 인권의 죽음'을 재촉할 뿐인 파병과 테러방지법의 제정은 결코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 이경해 씨 추모 촛불 '농민 생존권 사수' 핵블로! 광화문 네거리서 고 이경해 씨 추모대회 열려

"누구를 위한 협상을 하고 있는가? 국민들인가, 너희들 자신인가? 이제 허구적 논리와 외교적 수사에 가득찬 WTO 농업 협상은 그만하라. 농업을 WTO체제에서 제외시켜라." 지난 3월 제네바 WTO 정문 앞에서 단식농성을 전개하며 외쳤던 고 이경해 씨의 목소리가 지금 이 땅 400만 농민들의 뜨거운 투쟁의 함성으로 되살아나고 있다.

19일 늦은 6시 광화문 네거리에서는 멕시코 칸쿤에서 자결한 '고 이경해 열사 추모대회'가 열렸다. 강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운데 'WTO반대'와 '열사정신계승'을 위해 전국 각지에서 상경한 농민과 시민 1000여명은 손에 촛불을 받쳐든 채 고인의 죽음을 애도했다.

장례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 서정의 회장은 추모사를 통해 "WTO 협상은 힘겹고 가난한 삶을 살아야 하는 전세계 농민들의 생존권을 말살하려 드는 행위"라며 목숨을 바쳐 WTO 협상을 저지한 이 씨의 죽음을 애도했다. 한국가톨릭농민회 송남수 회장은 "농업은 돈벌이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한 생명과 관련된 문제"라며, WTO체제하에서 자행되는 농업 개방 압력의 부당성을 성토했다.

이밖에도 민중연대 정광훈, 오종렬 상임대표와 환경운동연합 최열 공동대표 등도 조사를 통해 WTO체제와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농민, 노동자, 빈민들의 생존권마저 위협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자본의 에이전트" 노릇을 하고 있는 정부를 강력히 비난하며 고인의 의지를 계승하여 끝까지 싸울 것을 결의하였다.

고인의 큰딸 이보람 씨는 "아버지께서는 한 그루의 성냥이 되고자 한다고 유언을 남기셨다"며 "아버지의 죽음이 정말로 헛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한 뒤 끝내 오열했다.

추모대회에 참석한 전농 충남도연맹 박성만 부의장은 "칸쿤현장에서 가장 열심히 싸운 것은 한국 농민들이었다. 5차 각료회의를 막아냈다는 데 자부심을 가진다"며 앞으로 닥쳐올 제6차

WTO협상 또한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 다짐하였다. 한국농업전문학교에 다니는 김규동 씨는 "우리 학생들 또한 고인의 뜻을 이어 투쟁들을 계속 전개해 나갈 것"이란 결의를 내보였다. 전국민민연합 최오수 조직국장은 "영결식이 끝나고 열사를 떠나보냈다고 해서 이 싸움이 매듭지어져서는 안 된다"며 "민중들이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몸과 불을 지르고 할복을 해야만 하는 이 비참한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전 민중들이 함께 연대하는 강력한 투쟁들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이경해 씨의 유해는 20일 오전 9시 발인되어 10시경 울림공원 내 평화의 문 앞에서 영결식을 가진 뒤 장지(전북 장수)로 옮겨지며, 당일 오후 4시경 장수군청 앞에서의 노제 후 하 관될 예정이다. 또 전국민중연대 등 각계 사회단체들이 주최하는 '故 이경해 열사 추모 및 이라크파병 반대 결의대회'가 20일 오후 1시 30분 서대문 독립공원에서 개최된다.

한편, 19일 오후 6시경 경북 성주군 농민단체가 주최한 '고 이경해 열사 추모 촛불집회' 도중 몸에 신나를 붓고 분신을 시도했던 박동호(34, 농민) 씨는 현재 화기로 인해 내부 장기가 손상돼 생명이 위독한 상태다. 흠어머니를 모시면서 하우스 참외농사로 생계를 꾸려왔던 박 씨의 분신 시도는 농민들의 가슴을 또 한번 찢어놓았다. (양승훈)

### "보호감호제 폐지만이 대안"

법률가 176인 사회보호법 폐지 촉구

사회보호법의 폐지를 촉구하는 여론이 거세다. 지난 17일 한나라당 인권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사회보호법 폐지를 결의한 데 이어, 19일 법학교수와 변호사 등 법률가 176인은 사회보호법 폐지를 촉구하는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법률가 176인은 선언에서 현행 "보호감호제는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 위험적 제도"이며 형사정책의 측면에서도

"보호감호제 폐지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주장했다.

보호감호제가 헌법에 반하는 이유는 △보호감호가 형벌과 질적으로 다르지 않아 이중처벌에 해당한다는 점 △대상 범죄의 사회적 위험성을 고려치 않고 '전과'를 기초로 보호감호를 부과하고 있어 제도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비해 피감호자의 인권이 과도하게 침해돼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 △피감호자들로부터 사회적 유대를 단절 시킴으로써 재범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보호감호제가 표방하는 목적을 달성하기에도 적합하지 않아 방법 적정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 △이미 누범이나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이 이뤄지고 있는 현실에서 다시 보호감호를 부과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점 △재범의 위험성을 법원이 아닌 사회보호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재판 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점등을 제시했다. 사회 일각에서 보호감호제의 존치를 주장하는 데 대해 이들은 △누범과 상습범 등을 가중처벌할 수 있는 특별형법 조항들이 존재하고 △낙후된 교정현실을 고려할 때 보호감호제를 유지하면서 인권유린을 방지할 수는 없다는 점등을 지적하며, "보호감호제를 유지하면서 개선 운영하는 것은 도리어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22일 가출소하는 청송감호소 피감호자들은 이날 서울로 올라와 민주노동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회보호법 폐지를 촉구할 예정이다. (유혜정)

(비면에서 이어짐) 것이 아니라 전자이권, 전자운전면허증, 그리고 전자주민카드로의 확장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진보네트워드는 19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정말로 수록정보가 적다면 건강카드가 반드시 스마트카드여야 할 까닭이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확장을 논하지 않는다면 굳이 높은 비용까지 들어 저장 정보를 계속 추가할 수 있는 스마트카드를 도입할 이유가 없다는 것. 또 이 컨소시엄에는 그 동안 스마트카드 사업에 투자해왔으나 특별한 수요처를 찾지 못한 대기업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어, 단순히 전자건강카드 도입만으로는 이들의 과잉투자 상태가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의혹을 더하고 있다. (강성준)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리안)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 "청송은 미래까지 구금하는 곳"

### 청송감호소 출소자 집단상경...사회보호법 폐지 촉구

"저희들의 과거가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하여 어찌 저희들의 미래까지도 강제로 구금을 당해야 한단 말입니까?" 사회보호법 폐지안이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이 법의 최대 피해자인 피감호자들이 22일 가출소해 사회보호법 폐지를 촉구하는 집단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오전 10시 청송 제2보호감호소에서 가출소한 143명 중 70여명은 출소 직후 상경해 민주노동당 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그 동안 네 차례에 걸친 단식농성과 일부 출소자들의 증언에 의해 보호감호의 문제점이 제기돼 왔으나, 이처럼 출소자들이 대규모로 자신들의 뜻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이에 앞서 지난 17일 법무부 사회보호위원회는 사회보호법 폐지 여론에 밀려 1500여 명인 피감호자를 올해 말까지 800~900명 수준으로 줄이고 보호감호 기간도 줄이는 등 소위 '개혁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출소자들은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감호소에서 보낸 지난 세월이 얼마나 분통이 터지고 원통하면, 사회보호법의 폐지가 얼마나 간절하면, 짧게는 5년, 길게는 15년만에 만나는 사랑하는 가족을 뒤로하고 이렇게 상경했겠습니까"라며 절박함을 호소했다.

이들은 사회복지를 위해 5년을 일해도 근로보상금이 1백만 원 안팎에 불과하며, 가출소 대상이 된다 하여 취득한 자격증도 사회에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 말했다. 그나마 직업교육도 받지 못한 채 방안에만 갇혀 있는 피감호자도 300여명에 이른다.

4년 동안 갇혀있다 이날 출소한 김

모 씨는 "아프면 사회병원에서 사비로 치료받게 해 돈이 없으면 치료도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4년7개월을 수감돼 있었던 최모 씨는 "갇혀있는 동안 양친이 돌아가셨는데도 외아들로서 임종도 못하고 산소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처지"라고 털어냈다. 그는 "지난 잘못에 대한 반성은 사회에 대한 분노 때문에 잊어버릴 판"이라고 호소했다.

인권운동사랑방 유혜정 상임활동가

2003년 9월 23일(화)

제 2420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배경내

는 "피감호자 신분을 벗어난 이들이 가족들이 보고싶을 텐데도 곤장 상경해 사회보호법 폐지라는 정의의 요청을 용기있게 발원했다"고 평가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한나라당 인권위원장 이주영 의원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의원은 "지난 17일 인권위 전원일치로 사회보호법을 폐지키로 했다"며 "당론으로 채택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사회보호법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해 출소자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한편 이들 가출소자들은 앞으로 3년 동안 보호관찰 대상자로서 만나는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를 포함해 주거, 직업 등을 매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 이들 중 가족과 인연이 끊어진 10여 명은 오늘부터 여관을 전전해야 할 상황이다. (강성준)

## "부당노동행위, 국감에서 철저히 밝혀내라"

### 민주택시연맹, 부당노동행위 눈감는 노동부 강력 규탄

국정감사 첫날을 맞아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위원장 구수영, 아래 민주택시연맹)은 부당노동행위를 눈감아주고 경찰력을 동원해 직접 사측의 노조탄압에 동조한 노동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22일 오후 3시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열린 이날 집회에서는 인천 영하운수와 성남 낙원택시, 안산 상록운수 등의 사업장에서 벌어진 부당노동행위와 노동부의 부당한 처사를 규탄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인천 영하운수에서는 사측에 고용된 조직폭력배들의 상습적 폭력과 부당노동행위가 벌어졌으나, 노동부 조사는 물론 고소·고발장을 접수받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도 수개월째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성남 낙원택시와 안산 상록운수에서는 상급단체 변경과 관련해 노동자 10여 명이 구속되기도 했다.

민주노동총신승철 부위원장은 "노동자를 이해한다면 역대정권 중 같은 기간 가장 많은 노동자를 구속한 노무현 정권에 배신감을 느낀다"며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도 이번 감사에서는 부당노동행위 관련해 증인 채택을 하지 않기로 결의하는 등 더 이상 국회와 정부에 기대할 바가 없는 상태"라고 비판했다. 민주택시연맹 박재성 조직국장 역시 "노동부가 직접 나서서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기상천외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며 노동부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민주택시연맹은 이날 규탄대회를 출발점으로 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23일과 25일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철저한 국정감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다. 또한 11월말까지 택시제도 개혁과 노조탄압 분쇄를 위한 대정부·대국회 총력투쟁에 돌입할 예정이다. (대홍)



### ○ 선미의 인권이야기 ○ '미래의 주역과 오늘의 고통'

오늘도 6시에 졸린 눈을 겨우 뜨고 학교로 향한다. 아침 밥은 10분의 단잠과 기꺼이 바꾼 지 오래이다. 수시 1학기에 합격한 아이들이 빠져나간 교실 안으로 들어서면, 남은 30명 남짓한 수능 전사들이 이제는 별로 새로운 것도 없는 하루하루를 관성의 힘으로 버티고 있다.

이런 우리에게도 꿈 많은 시절이 있었다. 각자의 빛깔과 향기를 간직한 다양한 그 꿈들을 함께 나누었었던, 이제는 모두들 그 꿈들을 잠시 접은 채 오로지 수능이라는 한 가지 목표만을 위해 정진하고 있다. 각자 다양한 꿈을 실현하기 위해 확실적인 수능을 거쳐야 한다는 입시제도에 문제가 있음을 우리들 모두는 알고 있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살아남아야 하겠기에 문제집을 펴는다.

이런 우리가 신세타령이라도 할라치면 어른들은 그래도 교복 입을 때가 제일 좋은 거라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우리를 위로한다. 고3의 양면성이 드러나는 순간이다. 학생들이 학습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면 가장 강도 높은 노동을 강요받는 것은 고3이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조금만 있으면 그 고통도 끝나게 된다. 그야말로 파이날(final)인 것이다. 그 마지막 순간을 멋지게 장식하기 위해 조금만 더 버티라는 말은 꽤나 설득력을 갖는다.

하지만 잠시만 생각해보자.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달리고 있는가? 대부분은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말할 것이다. 그렇다면 미래에 꿈을 이루기 위해서 현재 우리가 누려야 할 것들은 포기해도 좋은 것일까?

예전에는 "청소년은 미래의 주역입니다"라고 하면 사회로부터 대우받는 듯한 기분도 들었고 명분상이나마 사회가 청소년에게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안도했다. 하지만 왜 '미래의 주역'들의 현실에 대해서는 사회가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일까를 고민하다 이 말이 표현과 반대로 작용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미래의 주역'이라는 말은 "너희는 미래의 주역이니 오늘의 고통쯤은 참아야 한다. 우리는 단지 너희가 성인이 될 미래에 관심이 있을 뿐이다"라는 사회의 외침인 것이다.

청소년은 미래의 주역일 뿐 아니라 현재의 인간이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주어진 기본적인 권리는 청소년에게도 지금 마땅히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사회는 우리에게 미래에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지금의 고통은 참으라고 요구한다. 이제는 이러한 요구에 반기를 들어야 한다. 지금까지 어른들은 우리들이 처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미래에 대한 환상을 심어주며 현실의 고통을 망각하게 했다. 우리 청소년들도 미래에 대한 장밋빛 환상으로 현재의 나의 권리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럴수록 청소년 인권은 한 걸음씩 멀어져 간다.

노동해방이 되고 통일이 되어도 여성운동은 계속된다는 말이 있다. 이제 그 문장은 노동해방이 되고 통일이 되고 여성이 해방된 이후에도 청소년 운동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말로 바뀌어야 한다. 청소년의 인권현실을 사회가 계속 외면하는 한.  
(선미 님은 청소년의 힘 회원입니다.)

### 주간인권흐름

(2003년 9월 15일 ~ 9월 22일)

1. 도대체 뭐가 '국익'이라는 거지?  
장영달 국회 국방위 위원장, 이라크 방문 뒤 "전투병 파병은 이라크 주민의 적대감 증폭 우려 있어 적절치 않다" (9.16) / 361개 사회단체들, "파병 반대" (9.16) / 3천여명 병력 이라크에 1년간 파병할 경우 2천여억원 이상이 소요 될 것으로 추정 (9.17) / 정부, "22일째 이라크 현지조사단 파견...파병여부 신중 검토" (9.17) / 주미에 의원, "문서도 없는 구두 파병 요청에 공식 대응한 것은 굴종외교"라 외교 통상부 장관 비난 (9.17) / 리처드 롤리스 미 국방부 부차관 보, "1만5천명 규모의 다국적군 지휘권을 한국에 맡길 계획...내달 24일 한미안보협 개최 때까지 파병 여부 결정해 달라" (9.18) / 조영길 국방부장관, "12명의 이라크 현지조사단 23일 파견" (9.18) / 여야 의원 19명, "추가파병 동의안 국회 제출되면 부결시킬 것" (9.18) / 방미 중 최병렬 한나라 당 대표, "미국은 지금 이라크 문제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파병 동의 시사 (9.18) / 한국군 전투병 배치 예정지역인 이라크 북부 모술 일대에 미군 겨냥 게릴라 공격 부쩍 늘어나 (9.19) / 이라크 관련 정보조작으로 곤경에 처한 영국 노동당, 자신의 텃밭 선거구 보결선거에서 참패 (9.19) / <한겨레> 여론조사 결과, 전투병 파병 반대 57.5% (9.21)

2. 여전히 높디높은 고국의 문턱  
천북활동 혐의로 입국이 불허돼 왔던 재독 철학자 송두율 교수 귀국 뜻 밝혀 (9.17) / 재독 통일운동가 정경모 씨, "준법서약보다 더한 자수서 작성 요구받았다"며 입국 포기 (9.18) / 국정원, 송두율 교수 체포영장 발부 (9.18) / 해외 민주인사 33명, 한가위 고국방문 행사 참석차 입국...한통련 인사 17명 포함 (9.19) / 송두율 교수 입국...국정원, 송 교수에 대한 공소보류 방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9.22)

3. 사회보호법 끝이 보인다  
한나라당 인권위, "9월말까지 사회보호법 폐지안 마련해 정기국회 내 처리" (9.17) / 법무부 정책위원회, 감호기간 제한하고 보호감호 시작 전 중간심사 도입하는 등 사회 보호법 개정안 마련...폐지 여부는 추후 결정키로 (9.19) / 법률가 176인, 사회보호법 폐지 촉구 (9.19) / 청송감호소 가출소자 70여명 집단상경해 사회보호법 폐지 촉구 (9.22)

4. 기타  
법무부, 전쟁범죄·반인도적 범죄의 공소시효 없애는 특법 제정키로 (9.15) / 인권위, 지난해 9월 전주 금암2교출소에서 일어난 경찰관 피살사건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자백 얻기 위해 가혹행위 했음을 밝혀내고 경찰관 7명 수사 의뢰 (9.17) / 국회 정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국정원, 테러방지법 재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9.18) / 화물연대, 분말시멘트 트레일러 업체들이 업무복귀한 조합원들에게 탈퇴각서 발송하고 있다고 밝혀 (9.19)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3년 9월 24일(수)

제 2421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배경내

## 파병반대 움직임 하나로 총집결

### 351개 사회단체 '비상국민행동' 결성...27일 국제반전집회도

이라크 파병반대 여론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라크 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아래 비상국민행동)이 결성돼 파병반대운동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23일 전국민중연대, 참여연대, 민주노동당 등 351개 시민·정당·사회단체들은 비상국민행동을 결성한 '비상사국회의'에서, "이라크전쟁은 이라크에 평화가 아니라 보복과 테러의 악순환을 가져왔을 뿐"이며 "미국의 파병 요청은 이라크전쟁의 책임과 뒷수습을 국제사회에 떠넘기는 것에 불과하다"며 범국민적 파병반대 운동을 결의했다.

이들은 경제적 이익이나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 국익을 위해 파병하자는 소위 '국익론'에 대해 "군비를 감당할 수 없게 된 미국이 파병국가에 전쟁지원비까지 요구하고 있"고, 지난 1차 파병 이후 "북핵문제에 관한 미국의 일방적 압박전략도 변화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히려 편협한 자국이주의의 틀을 넘어서서 지구촌의 문제를 대국적으로 성찰할 때 진정한 국익이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우방이 어려울 때 돕자는 소위 '우방론'에 대해서는 오히려 "일방적 군사행동을 주도한 부시행정부의 실정을 미국 국민들이 분명히 깨닫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받아치면서 "많은 가난하고 힘없는 나라들이 미국의 무시하기 힘든 요구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반대하라는 국민 대다수의 의견에 따라 파병을 거부"한 것을 "민주주의를 향한 중대한 진일보"로 평가했다.

이들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유엔 결의에 다국적군 소속의 전투병 파병이나 평화유지군 파병 형식에 대해서도 "점

점 미국 지위가 변하지 않는 한 이라크에서 미군과 다국적군은 테러와 보복의 가장 손쉬운 목표물이 될 것"이라며 반대했다. 또 "유엔은 더 이상 미국의 패권정치에 활용되고 그들이 저지른 일방적 군사행동에 명분을 세워주는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하며, 어떠한 형태의 이라크 파병에도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비상국민행동은 이후 △파병안 부결을 위한 대국회 촉구운동 △인간띠잇기 등 파병반대 범국민대회 개최 △각계각층의 파병반대 시국선언 등을 전개하기로 했다. 또 '국민 토론의 날'을 선정해 전국 곳곳에서 파병을 반대하

## "수용자에게 자유로운 신문읽기를 보장하라"

### 국가인권위, 구금시설 신문기사 삭제 관행에 쟁기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교도소측의 자의적인 신문기사 삭제 관행에 쟁기를 박았다.

23일 인권위는 "구금시설 수용자들이 구독하고 있는 신문의 일부 기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삭제해 교부하는 것은 알권리 침해"라고 판단하고, 교도소측의 자의적인 삭제 관행을 부추기고 있는 '수용자 신문열람 지침'의 개정을 법무부장관에 권고했다. 이번 권고는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권모 씨 등 4인과 마산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오모 씨가 지난 1월에서 4월 법무부장관 등을 상대로 인권위에 인권침해 진정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인권위는 광주교도소와 마산교도소측이 삭제한 기사가 △수감 중인 양심수

는 토론마당을 벌일 예정이다. 가깝게는 현재 330여 개 사회단체와 5000여 명의 개인회원이 가입한 '9.27 국제반전공동행동 조직위원회'가 주최하는 대규모 집회가 오는 27일 서울, 부산, 인천 등 전국 각지에서 열린다. 이 날은 이스라엘에 맞선 팔레스타인 항쟁인 '인티파다' 3주년이 되는 날로 미국, 영국, 일본 등 전세계 40여 개 국가에서 미국의 이라크 점령과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에 반대하는 집회가 동시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국방부 이라크 현지조사단 12명이 24일 이라크로 출발해 다음 달 3일까지 현지 정세와 안전문제를 파악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조사단 대부분이 파병을 찬성하는 관계자로 채워져 있고 미군의 안내로 현지를 둘러보게 되는 등 객관적인 현지 조사가 불가능할 것"이라며 조사를 핑계로 "파병을 기정 사실화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강성준)

가 단식농성을 시작하며 쓴 글 △전 진주교도소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형을 선고받은 내용 △교도소에서 자살사건이 발생한 내용 등이었고, 해당기사가 교도소 내의 안전과 질서를 구체적·직접적으로 교란할 위험성이 있는지를 피진정인들이 소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현행 '수용자 신문열람 지침' 제9조(열람 제외기사) 1항의 표현이 막연하고 불확정적이어서 교도관의 자의적 판단을 가능케 하여 알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며 "열람 제외 기사를 탈주, 집단단식 등 교도소내 안전과 질서를 구체적·직접적으로 교란할 가능성이 있는 기사로 한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라고 지침의 개정을 권고했다. 지침 9조 1항은 △조직폭력, 마약(2면에 계속)

# "내년 정부예산안, 800만 빈민 외면했다"

## 사회보장예산 9.2% 증액 그쳐...예산 증액 위한 연대제 발족

최근 빈민들의 생계형 자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예산편성안에서 빈곤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사회복지예산이 배정되자 각계의 비판이 뜨겁게 제기되고 있다. 지난 22일 정부가 발표한 내년 예산안 총액은 117조5429억 원. 이중 사회복지예산은 올해 11조1300억 원에서 9.2%가 늘어난 12조1600억 원에 불과하다. 반면 국방예산은 17조5100억 원에서 18조9400억 원으로 8.1%나 늘어났다.

이에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48개 사회단체들은 23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보장 예산확보를 위한 연대'(아래 사회보장 예산연대)를 발족시키고, 내년도 예산편성안의 근본적 변화를 촉구했다.

사회보장예산연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예산에서 사회복지분야의 예

산이 1조원, 9.2% 정도 증액되었지만, 이는 빈곤계층의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라고 꼬집었다. 또 "이번 예산안은 빈곤문제로 인한 자살과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의 제반 문제를 외면한 너무나 안일한 것이었다"며 "이와 같은 점진적 접근으로는 수많은 국민들에게 희생과 고통을 지속시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빈곤문제연구소 류정순 소장은 "800만 명의 빈민 중 약 135만 명 정도만이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고 있고 나머지 660만 정도는 이른바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되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지만, 실제로는 수급 대상자만큼이나 생활이 열악한 사람이 대다수"라며 "이들의 생계를 외면하는 것이 생계형 자살이나 범죄를 더욱 양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누구에게도 때릴 권리는 없다'

## 반인권적 체벌 금지 위한 법개정 토론회 열려

23일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 세미나실에서는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아래 참학) 상담실 주최로 체벌금지를 위한 법개정 토론회가 열렸다. "누구에게도 때릴 권리는 없다"라는 제목으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에서 참학 윤지희 정책위원장은 "최근 네이스 등 온라인에서의 학생인권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오프라인에서 자행되고 있는 학생인권 침해해결하지 못하는 한 진정한 학생인권 보장의 길은 요원하다. 학교현장에서의 체벌이 학생인권 침해에 있어서는 가장 큰 문제"라며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발제자들은 모두 체벌의 반인권성을 지적하며 체벌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인권운동사랑방 김영원 상임활동가는 "체벌은 폭력을 재생산할 뿐"이며 "체벌은 자신의 행동을 자율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능동성을 거세당한 인간으로 자라나게 한다"고 주장했다.

하승수 변호사는 "한국은 현재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해있고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로부터 체벌을 금지하라는 권고를 받은 바도 있지만 이행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것이 현실적 규범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구체화작업'이 필요하다"며 "이 과정에 학생의 참여는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참학 장은숙 상담실장은 현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7항이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 사실상 체벌을 허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폭력적 체벌이 자행되고 있는 본질적이고도 일차적인 원인은 교육관련법 제도와 교육정책에 있다"며 "체벌금지를 위한 구체적 법개정 운동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학은 앞으로 체벌반대 거리 캠페인과 법개정을 위한 온라인 서명운동을 벌여 체벌반대에 대한 국민여론을 확산시키고 범법법인 청지와의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체벌 피해사태에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대홍)

민주노동당 김혜경 부대표는 "늘어난 약 2조4천억원의 예산안 중 군비 증가분이 1조4천억이나 되는데, 이 돈을 사회보장예산으로 돌린다면 무상으로 증대 등 차상위계층에 있는 빈곤층들의 생활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아질 것"이라며 국방비 증액을 강력히 비난했다.

사회보장예산연대는 향후 예산개정안에 대한 국회 청원 △사회보장예산 확보 촉구대회 개최 △국회 예결산 위원회에 대한 모니터링과 대국민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양승훈)

열한번째 반딧불이

# <도시> The City

- 남미 이민자들의 빼앗긴 꿈

· 때: 9월 24, 25일 늦은 7시30분  
· 곳: 광화문 아트큐브

(이면에서 이어짐) 등 당해 수용자와 관련된 범죄기사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광고·관련기사 △수용자의 심적 안정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선동성 광고·관련기사를 삭제하도록 하고 있다. 인권위 인권침해조사2과 강인영 조사관은 "올 1월부터 3월까지 6개 구급시설의 신문기사 삭제 현황을 조사한 결과, 같은 기사라도 시설별로 삭제 여부에 큰 차이를 보였"고 심지어 "수용자인 아버지가 심부전증을 앓는 아들에게 신장을 기증한 기사나 인권운동사랑방 창립 10주년 기사까지 삭제한 교도소도 있었다"고 말해 교도소측의 자의적 삭제 관행이 심각한 수준임을 드러냈다. 강 조사관은 "교도소측은 자의적 판단을 막기 위해 교도관회의를 열어 심의 결정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담당 교도관이 판단한 대로 거의 그대로 삭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6월 서울지법 제7민사부(재판장 윤석중)는 서울구치소측이 수용자 오모 씨의 편지 발송을 가로막은 행위의 부당성을 다룬 <한겨레>(2001년 1월 5일자) 기사를 삭제해 구치소측이 교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국가가 원고인 오모 씨에게 손해를 배상하라 고 판결한 바 있다. (배경내)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3년 9월 25일(목)

제 2422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배경내

# "전투병 파병은 이라크 민간인 학살"

## 이라크 파견 평화활동가·의료진 공동 기자회견 열어

"고의적으로 조장된 무지와 맹목이 판을 치고, 전쟁과 함께 국익을 말하고, 친구를 위해 우리 젊은이들이 다른 나라 어린이들의 피를 흘리게 해도 된다는 주장을 공공연히 내세우는 한국사회의 현실이 당혹스럽고 절망적이다."

이라크 전쟁 전후로 이라크에 파견됐던 평화활동가와 의료지원단이 추가 파병을 막기 위해 다시 나섰다. 24일 이라크반전평화팀, 보건의료단체연합 의료지원단 등 평화활동가 61명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파견 당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파병반대를 주장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의료지원단으로 지난 7월까지 석 달간 이라크에 있었던 우석균 씨(의사)는 "전쟁 이후 발전시설이 복구되지 못해 정수시설도 가동되지 않고 있어 오물이 티그리스 강으로 그대로 흘러 들어갈 정도로 위생시스템이 붕괴된 상황"이라며 "의약품과 식량 부족까지 겹쳐 설사병과 감기로도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당시 의료지원단 조사 결과, 어린이 100명 중 35~40%가 영양실조에 걸려 있고 초등학교 고학년생 중 84%는 "자신은 어른이 될 때까지 살 수 없을 것 같다"고 답했다. 우 씨는 "전투병 파병은 이들에게 총부리를 들이대는 것"이라며 "이들에게 보낼 것은 인도적 지원이지 군대와 폭탄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열화우라늄탄의 피해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지난 5월 <크리스천사이언스 모니터>지는 열화우라늄탄에 의해 파괴된 후세인 대통령궁 근처 방사능 수치가 통상수준보다 1900배나 높았으며 바그다드 외곽에서도 통상수준의 1000배를 기록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우 씨

는 "정상치의 50배나 되는 방사능이 환자의 손에서 측정되기도 했지만 미군은 열화우라늄탄의 사용량과 사용장소를 밝히지 않고 있으며, 그 유해성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족문화작가회의·파견작가로 이라크에 머물렀던 오수연 씨는 추가 파병 목적으로 제시된 '치안유지'에 대해 "현재

이라크의 치안문제는 강도, 약탈 등의 범죄나 종족, 종교간 분쟁이 아니라 미군 점령을 반대하는 이라크 민중의 저항을 의미한다"며, "군수차량만이 아니라 일상적인 치안을 맡는 차량이나 바그다드 시내 신호등을 고치는 미군도 공격받고 있다"고 말했다. 비폭력평화연대 한상진 씨도 "한국이 치안유지를 위해 전투병을 파병한다면 점령군 입장에서 독립세력을 진압하는 역할을 맡는 셈"이라고 규정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24일 출발한 '정부조사단'에 맞서 '시민조사단'을 다음 달 중에 이라크로 파견할 예정이다. (강성준)

# 대법, "불법파견이면 직접 고용된 것으로 봐야"

## 인사이드코리아 해고 노동자, 부당해고 인정받아

'업무 도급'을 위장해 불법적으로 노동자들을 파견받아 사용하고 있었다면, 이미 사업주가 노동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반가운 판결이 나왔다.

지난 23일 대법원 제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NSK가 '위장도급'의 형식으로 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하여 인사이드코리아라는 법인격을 이용한 것에 불과"해 "실질적으로는 NSK가 원고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을 직접 채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고 봐야 한다"며 2001년 11월 1일 지무영 씨등 3인의 원고들을 2년 넘게 사용하다 계약직 노동자로의 신규채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관련기사 본지 2003년 3월 15일자 참조>

재판부는 △인사이드코리아는 NSK와 경영상의 독립성이 없는 사실상의 자회사인 점 △NSK가 인사이드코리아로 보내 노동자들을 정식 직원과 구별 없이 업무지시 등 제반 인사관리를 시행해왔던 점 등을 들어 NSK와 인사이

드코리아 소속의 원고들 사이에는 이미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러한 대법 판결은 지난 3월 '불법파견이라도 2년이 넘게 사용했다면 파견법에 따라 파견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서울고법 판결보다 한층 더 진일보한 것이다.

민주노총 주진우 비정규직장도 비정규 노동자들의 권리보호에 중대한 의미를 갖는 판결이 나왔다고 크게 반겼다. 주실장은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고제한 등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위장도급이 판치고 있는 현실에 경종을 울렸다"며 "도급을 위장한 불법파견이 드러날 경우 곧바로 해당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고용의제조항'을 직업안정법 안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법 판결 이후 협상을 통해 지난 8월 복직된 지무영 씨는 "이제서야 고용불안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고 안도하면서 "정부가 불법파견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 궁극적으로는 파견법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배경내)

<기획연재> 공공부문 간접고용 실태와 대안 ②

“노동조건 개선은 꿈도 꾸지 마라”

경북대 공대 건물의 경비를 맡고 있는 용역노동자 양 씨의 1주일 근무시간은 1백 시간이 넘는 평균 119시간. 평일 15시간(18시~다음날 9시), 토요일 20시간(13시~다음날 9시), 일요일 24시간(9시~다음날 9시)의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지만, 임금은 고작 77만원에 불과하다. 부산대 경비직의 경우도 근로계약서 상에는 24시간 근무 시 오전 1시간, 오후 3시간의 휴식과 오전 1시부터 5시까지의 수면을 보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야간에는 관리실 소파에서, 관리실이 없는 경우는 책상 위에 엎드려 눈을 붙이는 것이 고작인 것이다. 이들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제5장이 정하고 있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 받지 못한다. 다른 업종에 비해 노동강도가 약하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의 예외지대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소파와 책상이 그들의 잠자리

부산지하철에서 청소 일을 하는 여성 노동자 조 씨는 “하루 중 맘놓고 쉴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다”고 말한다. 외환위기 이후, 전에는 4개조로 돌아가던 열차 청소조가 3개조로 줄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시간이 없다 보니 점심식사도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먹는다. 지하철공사 측이 휴게실로 제공한 선로 옆 계단 밑의 조그마한 방에는 통풍구도 없고, 개수대와 하수구에서 발생하는 습기로 인해 방안은 항상 축축이 젖어있다. 이런 열악한 공간에서 조 씨는 식사를 하고 야간근무를 하는 날에는 잠을 자기도 한다.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 장시간 노동하는 용역노동자들이 휴가라도 제대로 쓰고 있을까? 실태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연월차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77.1%, 20%만이 연월차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다고 응답했다. 상당수의 용역노동자들이 사용업체 관리자의 강요 또는 업무부

담 등으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 예를 들어 부산대 경비직 노동자의 경우 1년 내내 24시간 맞교대 근무가 계속되기 때문에 휴가 사용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서울대 공원의 경우도 27만명이나 되는 공원을 51명의 인원이 청소해야 하는 조건이다 보니, 월 2일의 휴일 이외에는 명절도 없고 휴가도 전혀 보장되지 않고 있다.

노조 결성은 ‘밥줄을 건 결단’

이런 노동조건을 바꾸고 싶어도 노조 결성은 꿈도 꾸지 못한다. 인천공항공사는 노조원들을 다른 곳으로 발령하거나 조합탈퇴를 강요하였고, 한국방송공사는 ‘사업장 내 조합활동’을 금지 시켰다. 인천지하철공사는 ‘용역업체와의 제계약 거부’를 위협하며 노조 활동을 가로막았다. 또 수도권 매립지관리공사는 2002년 5월 26일 노동조합이 결성되자 5월 31일 설계 변경을 이유로 용역노동자들의 현장 출입을 차단했고, 용역업체는 6월 1일자로 이들의 근무지를 원거리로 배치해 사실상 노동조합 와해를 시도한

사례도 있다.

서울대공원의 2003년도 현재 청소용역회사인 대원관리(주)는 지난해 웅비환경(주)이 새 ‘용역업체로 낙찰되기 전까지 15년간을 대공원과 청소용역계약 맺어왔던 회사이다. 대부분 10~20년동안 장기 근무하면서 부당 대우를 받아왔던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한 것은 2001년 4월이었고, 단체협상을 통해 임금인상과 주 1회 유급휴일을 보장받았다. 그러나 회사는 그해 대공원과의 용역계약이 만료되자 52명의 조합원 전원을 해고했고, 노동자들은 25일간 농성 끝에 웅비환경(주)로부터 고용승계를 인정받았지만, 2003년 다시 대원관리(주)가 들어오면서 하루아침에 노조원 전원이 해고되었다. 조달청은 대원관리(주)가 과거 임금착취와 부당해고 등으로 문제가 되어왔고 또 퇴직금 미지급 관련 소송이 제기돼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 업체를 또 다시 선정했다.

이처럼 열악하기 그지없는 노동조건을 강요하고, 노동조합 활동도 용인하지 않는 곳은 민간 사기업이 아니라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사와 같은 공공부문이다. 비정규직의 차별 해소를 외치는 정부가 사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차별의 늪으로 밀어 넣고 있는 것이다. (박세진)

만화사랑방

이동수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3년 9월 26일(금)

제 2423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배경내

교사들 불법감청해온 학교 고발

민주노총 정보통신부장 고발장 접수..노동감시규제 서둘러야

학생용 원격강의 프로그램을 교사 감시수단으로 불법적으로 사용해 온 경기도 김포시 소재 통진중학교와 통진종합고등학교의 이사장과 교장 등이 민주노총에 의해 고발됐다.

25일 민주노총 최세진 정보통신부장은 “통신중과 통신중고는 2003년 5월부터 교사들의 동의도 없이 학교에 불법적으로 감청설비를 설치하고, 교사들의 전자통신 내용을 불법적으로 감청, 이를 통해 취득한 자료를 이용해 교사들을 징계해 왔다”며 “이는 ‘통신비밀보호법’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학교측의 불법 감청으로 피해를 입은 교사들을 대신해 이날 오전 11시 전모 이사장과 통진중고의 이모 교장, 통진중의 탄모 교장 등 5인을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최 정보통신부장에 따르면, 통신중과 통신중고는 지난 5월 17일경 전모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넷오피스쿨’이라는 감청 장비를 설치한 후 교사들의 통신 내용을 불법적으로 감시해 왔다. 이 과정에서 통진중고의 오모 교사는 ‘쉬는 시간’을 이용해 남편과 메신저로 채팅을 시작하자 몇 분내에 교감에게 호출돼 사유서 제출을 강요받았으며, 일주일 후 채팅 내용을 증거자료로 ‘견책’징계를 받았다. 뒤이어 7월에는 통진중 최초 교사가 ‘넷오피스쿨’이 감시프로그램임을 알아내고 프로그램을 삭제하자, 학교측은 이를 발미로 전교조 조합원인 최 교사를 ‘파면’하기까지 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불법적인 전기통신의 감청이나 대화의 녹음 또는 청취를 금지하고(3조) △불법 감청에 의해 지득 또는 채록된 통신 내용을 재

판 또는 징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하고(4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16조) 하고 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역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고(49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62조) 하고 있다.

‘넷오피스쿨’은 원래 원격강의용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으로 사이트 접속 내역이나 통신 내용은 물론, 모든 프로그램의 사용 내용과 마우스의 움직임까지 확인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 그러나 이 학교에서는 (☞2면에 계속)

클릭! 인권정보자료

인권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다

『새벽을 깨우는 A4 한 장 : 인권하루소식이 전하는 161개의 인권이야기』

지은이: 김혜진·백래군 외 글, 이동수 그림 / 엮은이: 인권운동사랑방 /

펴낸이: 사람생각 / 2003년 9월 / 368쪽 / 12,000원

지난 10년간 <인권하루소식>에 실렸던 글과 그림이 새 옷을 입고 단행본으로 출간됐다. 책에는 <인권하루소식>에 실렸던 인권 시평이나 기고, 논평들과 이동수 화백의 인권만평들 가운데 우리 인권현실에 의미 있는 시선과 통찰을 제공하고 있는 인권이야기 총 161편이 담겨 있다. 이 책에 담긴 글과 만평은 인권운동의 새로운 의제를 던지고, 척박한 인권현실을 과감하게 고발하며, 운동사회 내 스며든 그릇된 논리를 성찰하게 한다.

책의 1부는 △자유의 전선(시민·정치적 권리 분야) △존엄한 삶을 위한 투쟁(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분야) △No! Know!(소수자 인권 분야) △평화의 노동(평화에 대한 권리 분야) △진실을 향한 등불(진실을 알 권리 분야) △안을 비추는 거울(운동사회 내부에 대한 성찰)을 주제로 한 총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필자들은 인권현장을 발로 뛰고 있는 인권활동가들과 교수, 전문가들로서 <인권하루소식> 10년의 격랑을 함께 이겨낸 인권지기들이다.

책의 2부는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코너에 실렸던 인권만평 가운데 특별한 우수성과 감동을 선사하는 작품들을 골라 묶었다. 이동수 화백은 1997년 9월부터 매주 만화사랑방을 통해 인간에 대한 따스한 시선과 인간을 모략하는 세상에 대한 날카로운 풍자를 보여주었다. 각각의 만평에 해설도 곁들여 당시 시대적 상황과 사건의 배경을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열정’이라는 의미를 가진 ‘passion’은 우연인지 필연인지 ‘고난’이라는 의미도 함께 담고 있다. 이 책을 곰곰이 읽다보면, 열정을 가진 사람이 겪는 고난이 보인다. 거친 파도에 맞서 싸우는 인권 옹호자들의 열정으로, 혹은 이 사회 그늘에 놓여있는 소수자의 시선으로, 가장 가난한 자의 얼굴로 다가오는 참된 인권의 의미를 이 책에서 만날 수 있다. (최은아)

©구입 문의·신청 : 02-741-5363

# "김도현 석방하고 장애인인 나를 구속하라"

## 이광섭 씨, 또다시 시청역 선로 점거...연행자들 모두 풀려나

장애인이동권 투쟁과 관련해 김도현 씨(인권운동연구소 객원연구원)가 지난 8월 20일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아래 장애인이동권연대)의 이광섭 씨(지체장애 1급)가 김 씨의 구속에 항의하며 24일 또다시 시청 역에서 선로점거 시위를 벌였다. 이 사건으로 이 씨와 이씨의 동료 2명은 24일 남대문경찰서로 연행됐다 당일과 이튿날 풀려났다.

이광섭 씨는 연이어 발생하는 지하철 역사내 장애인 추락참사에 항의하여 지난 5월 28일 광화문 역 지하철 선로를 점거했던 주인공. 하지만 검찰은 시위를 주도한 이 씨는 구속하지 않은 채, 이 씨가 선로에 내려가는데 도움을 준 김도현 씨만을 철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이에 이 씨는 반발하여 "김도현을 석방하고 장애인을 구속하라"고 외치며 이번 시위를 벌였다. 이와 함께 이 씨는 △이동보장법률의 제정 △발산역과 송내역 추락참사에 대한 서울시와 철도청의 책임 인정과 공개사과 △안전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약 20분동안 시위를 벌이던 이 씨는 지하철 공익근무요원들과 관할 경찰서 경찰들에 의해 승강장으로 들려나왔다. 이 과정에서 공익근무요원들이 폭언과 폭행을 가하며 막무가내로 이 씨를 들어 옮겨 현재 이 씨는 팔목과 어깨 부분에 부상을 입은 상태다.

김도현 씨의 구속과 관련 '검찰의 편파적 수사가 장애인의 주체적 투쟁을 왜곡시키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분열시키려는 의도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 시위와 관련한 연행·조사 과정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돼 문제가 됐다. 이 씨는 연행 후 곧장 풀려났으나 나머지 2명의 비장애인은 이틀동안 조사를 받은 후 25일 오후 3시 무렵이 되어서야 풀려난 것. 이에 이 씨는 "동지들을 풀어주고 나를 구속하라"며 밤새 경찰서 안내실을 지켰다.

장애인이동권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이광섭 씨가 진행한 선로점거 투쟁은 이동에서의 차별을 심각하게 받고 있는 장애인 당사자들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진행할 수 없는 목숨을 건 투쟁"이라며 "이에 대해 검찰은 비장애인의 사주에 의해 진행된 것으로 판단하여 편파적 수사를 일삼고 심지어는 비장애인의 다른 목적에 의해 장애인들이 동원되어 진행된 것으로 판단하는 어이없는 작태도 서슴지 않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장애인들의 목숨을 건 투쟁이 이어지고 있지만,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3일에도 지하철 중로 3구역에서 한 중증장애인이 경사형 휠체어리프트를 타던 중 리프트가 갑자기 앞으로 기우는 사고가 발생해 가까스로 위기를 넘겼다. 이에 대해 장애인이동권연대 김기룡 선전국장은 "지금처럼 서울시와 철도청이 어떠한 안전대책도 마련해놓고 있지 않는 한, 지하철 발산역에서와 같은 추락참사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며 책임있는 대책수립을 촉구했다.

한편 23일 장애인이동권연대는 서울 지방변호사회(회장 천기흥)로부터 올해의 시민인권상을 받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수상 이유에서 "장애인 이동권연대는 장애인과 노약자, 임산부 등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대홍)

## 전대생 국보법 사건 선고공판 일박

노무현정부 출범 후 첫 국가보안법 사건으로 이목을 끌었던 건국대생 2명의 선고공판이 임박해 재판부의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7월 14일 국가보안법 제7조 1항(교무·찬양), 5항(이적표현물 제작·배포)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건국대 법대 학생회장 김종곤 씨의 선고공판이 26일 오전 10시 서울지법 519호실에서 열린다.

애초 17일로 예정되어 있던 선고공

판은 검사 측이 공소사실 중 가톨릭중앙의료원(CMC) 파업 관련 업무방해 혐의를 제외하면서 26일로 연기됐다. 김 씨는 현재 징역 3년 자격정지 1년을 구형받은 상태다.

같은 혐의로 구속된 같은 학교 측산대 김용찬 씨는 3일 국보법 피고인으로는 이례적으로 보석결정을 받고 풀려났으며, 25일 예정돼 있던 선고공판은 "재판부에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연기됐다.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을 구형받은 김 씨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23일 다시 열린다. (강성준)

(☞면에서 이어짐) 이 프로그램을 오로지 교사들을 감시하기 위한 '감청설비'로 설치해 활용해 온 것.

최 정보통신부장은 "최근 작업장에서 노동감시가 매우 은밀하게 확산되어 있어 노동자들이 감시당하는지조차 알 수 없는 경우들이 많다"면서 "제조 목적과 무관하게 노동자 감시·통제용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프로그램은 정보통신부에 등록하도록 해 실질적인 규제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자감시근절을위한연대모임의 이황현아 씨(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연구원)도 2001년 작업장내 감시카메라의 철거를 요구하는 파업 끝에 결국 승리한 쉼대용의 사례를 들며 "현재로서는 노동자들이 현장 투쟁과 단체협상을 통해 노동감시를 막아내는 것이 최선의 돌파구"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 씨는 "통합프라이버시법의 제정은 물론 노동자들에 대한 감시 문제를 특별히 다룰 수 있는 노동감시규제 입법도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배경내)

### 혁 없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한 부안 아이들의 서울 평화행진

9월 29일(월) 부안의 초·중·고 학생들이 서울로 올라와 혁 없는 세상을 함께 만들자고 연대의 손을 내민다.

- 12시: 노란 종이배 띄우기 (여의도 고수부지)
- 3시: 아이들의 문화한마당(종로일대)
- 5시: 평화행진(종로일대 → 덕수궁)

# 인권하루소식

##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3년 9월 27일(토)

제 2424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배경내

# 전대생 김종곤 씨 징역 2년 선고

## 국보법으로 얹어내고 다른 죄로 마무리?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7월 11일 연행된 건국대 학생 김종곤 씨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돼 충격을 주고 있다.

26일 오전 10시 서울지방법원 519호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형사 1단독, 재판장 노재관)는 김종곤 씨에게 징역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죄목은 국가보안법 7조 1항과 5항(반국가단체 찬양·교무 행위 및 이적표현물 제작·배포) 등의 위반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화염병 사용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해 "근본적으로 이념적인 편향성이 인정"되고, "작년 7월 안암동(재개발지역)에서의 폭력행위에 대해 변호인 측이 제시한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검찰이 제기한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이에 대해 「국가보안법 완전철폐와 김종곤/김종곤 학우 무죄석방을 위한 건국대 대책위원회」의 유한상 위원장은 "애초 검·경은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학생들을 구속하고서, 이후 조사과정에서 폭력행위 등의 여죄를 덧씌우는 형태로 수사를 무리하게 진행했다"며, "이는 국가보안법이 언제든 공권력의 무기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재판부가 인정한 폭력혐의에 대해 지문날인반대연대 윤현식 활동가는 "쇠파이프와 야구방망이, 화염병을 집어던지며 3백 명이 넘는 철거깡패들이 달려드는 상황에서 몇 안 되는 주민들과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는가? 그저 손에 잡히는 대로 집어던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정당방위 불인정 판결'은 형평성을 무시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6월 말 안암동 재개발지구에서 빈민 지원활동을 했던 김 씨는 같

은 해 7월 9일 새벽에 갑자기 들이닥친 철거용역에 대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 싸운 적이 있다.

이 사건 담당 조영선 변호사는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이해할 수 없는 과도한 법률적 적용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항소와 헌법소원 등 향후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승훈)

## 〈논평〉 국정원 개혁, 왜 안 하나

최근 법원은 이른바 '안풍' 사건 관련자들에게 실형과 더불어 총 856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당시 여당의 선거 자금으로 불법적으로 사용됐던 1천억원 이상의 돈 중 안기부 예산에서 지원됐던 돈이 856억원이라는 것이다. 이 사건을 보는 국민들은 자신의 세금으로 이뤄진 안기부 예산이 당시에 어떻게 특정 세력의 정권 유지 수단으로 무단 전용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 분노는 할지언정 그다지 새삼스럽게 여기지 않는다.

중앙정보부, 안기부를 거쳐, 지금의 국정원에 이르기까지 정도의 차이만 있었을 뿐 정권 안보 기관으로 기능하며 술한 권력 남용과 인권침해를 자행해왔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최종길 교수 사건, 인혁당 재건위 사건 등 의문의 죽음에는 이 정보기관에서 자행한 고문과 사건 조작, 공작 정치가 있었다. 1987년 발생한 '수지 김 살해 사건'에 대한 은폐와 조작은 심지어 2000년도까지 계속됐다. 도청 의혹, 사찰 의혹도 끊이지 않았다. 국정원의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로지 정권의 안보를 위해 권력자들은 이 기관의 힘을 의지했고, 비밀스런 정보기관은 그래서 온갖 불법과 탈법을 일삼아왔다.

국정원이 국민의 통제에서 벗어난 '비밀의 성'으로 남아 있는 한 이런 문제는 언제나 잠복해 있을 수밖에 없다. 수사권까지 갖고 있는 정보기관인 이상 무엇이든 이름을 바꾼들 국민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하기에 주요 정당의 후보들마저도 지난 대선에서 하나같이 국정원 개혁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이다. 국정원 개혁 논의의 핵심 축은 국정원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고 정보 수집 기능은 해외 정보에 국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보기관의 민주화는 국정원의 활동과 예산에 대해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고, 국가기밀, 비밀 활동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새 정부 들어서도 국정원의 근본적 개혁 움직임은 전혀 눈에 띄지 않는다. 도리어 정보기관에 정부 부처를 지휘, 관할할 수 있는 권한을 주자는 테러방지법이 다시 추진되고 있는 판국이다. 국정원에 대테러센터를 새로 설치해 관계 기관의 대테러 활동을 총괄 지휘하도록 한다니 옛 남산 시절의 통제불능의 권능을 가진 정보기관으로 부활시키지는 것인가?

정부는 테러방지법 제정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반대로, 국정원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개혁 작업에 더 이상의 지체 없이 나서라.

<지사의 눈> 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 공청회

### 호주제, '전통'으로 정당화된 차별적 제도

25일 법무부와 여성부가 공동 주최한 '(호주제 폐지에 관한) 민법개정안 공청회'. 반대토론자로 나선 정통가족제도수호법국민연합 공동대표 구상진 변호사의 논지는 호주제 폐지 반대론의 한계를 명확히 드러냈다. 구 변호사는 인권에 대한 무지, 평등에 대한 사전인수적 해석, 맹목적인 전통수호론을 기반으로 호주제 폐지를 민족살상 행위로 매도하기까지 했다.

구 변호사는 "평등이란 같은 것을 같게 다른 것을 다른 만큼 다르게 하는 것"이라며 "가족제도상 남녀 인격의 평등과 남녀유별 및 양성의 조화가 기본원리"라고 주장했다. 구 변호사는 호주와 성관 제도에서 남녀평등을 주장하는 것을 마치 △남녀의 복장을 통일하여 남자에게 치마를 정장으로 입게 하고 △남녀의 화장실을 분리하는 것도 금지하고 △산부에게 출산휴가도 주지 않는 것과 같은 획일적인 평등으로 취급했다.

복장의 차이, 화장실의 분리 등으로 인한 폐단은 사실상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똑같이 강제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호주제로 인해 동등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심지어 고통받는 이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자명한 상황에서, 이를 남녀유별이란 말로 간단히 정당화하는 구 변호사의 당당함이 당혹스러울 따름이다.

구 변호사는 "호주제란 집안이라는 개념이 있어 선후대를 통하여 계속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그 집안에 태어나는 자녀에게 그 선조의 성씨를 붙이며, 선후대 간에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연결된 일족을 일가로 부르는 제도"라고 정의하고, "호주제의 본질은 가계계승제도를 호주 개인의 권리의무의 형태로 표현한 법률형식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호주제는 현실의 가계계승제도를 법률적으로 표현한 것이 결코 아니다. 우리는 같은 선대에 제사를 지내는 모두를 한 가족으로 생각하고 그 중 최고령자를 보통 집안의

어른(호주)으로 대우한다. 하지만 한 가족 내에서 법적인 호주는 4~5명이 될 수도 있다. 장남이 아닌 아들들은 결혼을 하면 분가를 해 호주가 되고, 사위들도 독립된 호주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구 변호사는 호주제에 대해 "대한민국 수립 전부터 자생적인 기초로 형성되어 있는 가족제도의 기본구조"이고 "가족제도는 헌법제정권력을 창출한 문화로서 헌법의 토대"이기 때문에, 양성평등과 인간존엄은 정통가족제도 보호와 조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의 이름으로 호주제, 부성

제도 등 전통의 변경을 강제할 수 없다는 것.

하지만 예로부터 전승되어 온 모든 것이 전통이란 이름으로 맹목적으로 전승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따라서 이것들에 대한 계승과 폐기를 통해 새로운 전통을 만드는 척도 중 법적인 기준을 헌법에 부여하는 것은 당연하다. 헌법은 전통을 기반으로 만들어지지만, 헌법에 어긋나는 전통은 이미 전통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한 악습일 뿐이다.

결론적으로 구 변호사의 논지는 이미 차별적 제도로 인정되고 있는 호주제를 '전통'이란 이름으로 정당화하려는 시대역행적 발상이다. 호주제 폐지, 더 이상 발목 잡아서 안 된다. (범용)

### 카메라로 병역거부자들의 양심을 만나다

<총을 들지 않는 사람들>, 군사주의 문화 고발

지난 몇 년간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운동의 역사와 현주소를 그린 다큐멘터리 <총을 들지 않는 사람들>(감독 김환태)이 지난 25일 첫 선을 보였다. 카메라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한 솔직한 감독의 고백으로 시작된다. '군대를 다녀온 남성으로서 기독교적인 감수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감독에게 병역거부는 혼란스럽다. 하지만 카메라의 시선은 병역 거부자들의 신념과 양심의 진정성을 느끼면서 점차 따뜻해진다.

영화는 지난 2001년부터 본격화된 운동의 흐름을 짚어내는 동시에 다양한 병역거부 운동의 목소리를 통해 우리사회에 뿌리깊이 남아 있는 군사주의 문화를 고발한다.

"범의 어름은 살아있는 제 몸용 시체를 염하듯 단단히 묶어 관속에 넣었습니다. 조국과 민족에의 충성의 어름이 사병에서 불타 올라 저의 청춘을 불태워주고, 세월의 어름은 화려터 굴뚝 위의 냉세 같은 것을 제 몸에 남겼습니다."

60년대 말 종교적인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어느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의 이야기다. 단지 종교적 양심이 국가의 전체 논리와 상충된다는 이유로 7년을 감옥에서 보내야 했던 그는 지금도 꿈속에서 어두운 감방을 경험하곤 한다. 사회는 그를 국가안보를 위해한 자로, 종교적 이단자로 배척했다. 그것이 그가 총을 들지 않은 대가다.

1939년부터 지금까지 60여 년 간 한국사회에서는 무려 1만 명에 달하는 여호와의 증인들이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로 전과자가 되었으며,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정치적, 평화적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의 목소리도 현재의 남북 대치상황과 군 형평성의 문제를 들어 묵살되고 있다. 정부는 국가안보라는 이름 하에 너무나도 당연하게 개인의 신념과 권리를 무시하고 그들의 인권을 희생시켜 온 것이다.

감독의 말대로 영화를 통해 "내 안의 편견과 폭력성, 그리고 국가에 의해 훈육된 가치들을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여전히 침묵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회 각층의 의견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매개를 찾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김희정)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3년 9월 30일(화)  
제 2425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배경내

## “핵없는 세상 함께 만들어요”

부안 어린이·청소년 대거 상경·종로 가득 메운 반핵 함성

"경찰 아저씨들이 무서워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지켜주지는 못할망정 머리를 때리고 그랬어요. 나라에서는 왜 원자력에만 돈을 쏟아 붓고 대체에너지에는 돈을 안 쓰는지 모르겠어요. 서울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져주면 부안에 핵폐기장이 들어서지 않을 거예요. 핵폐기장은 안돼요. 부안 말고 우리나라 어디에도 안돼요"

29일 친구들과 25대의 버스를 나눠 타고 부안을 출발해 서울에 올라온 유미옥(부안초 6) 어린이는 상경한 이유를 묻자 이렇게 답했다.

이날로 등교거부 37일을 맞은 부안 지역 어린이, 청소년 1100여 명은 오후 3시 서울 종묘공원을 가득 메운 채 '핵 없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한 부안 지역 어린이·청소년의 문화 한마당'을 열고 핵폐기장 유치 철회와 대체에너지 개발을 한 목소리로 외쳤다.

이 자리에는 부안군 진서면 민들레학교 학생들이 부안군수, 대통령, 진압경찰의 폭력진압에 이르는 과정을 연극으로 표현해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핵 없는 세상에서 공부하기 위해 등교거부를 계속하겠다"고 밝혀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이어 핵 없는 세상을 염원하는 풍선 날리기와 대체에너지 개발을 촉구하는 편지낭독이 이어졌고, 행사장 주변에서는 반핵 만화와 사진 전시회가 열렸다. 행사를 마친 어린이, 청소년들은 조계사까지 반핵평화행진을 벌였다.

'핵폐기장 백지화, 핵발전 추방 범부안군민 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29일 현재 부안 초

중고생 7067명 중 63.4%인 4484명이 등교거부에 참여하고 있다. 학교에 가는 대신 이들은 변산공동체, 민들레학교 등 인근 대안학교에서 여는 '반핵민주학교'에 참여한다. 계화면 생태학교 '시선'에서 반핵민주학교 교사로 자원활동을 하고 있는 유병희 씨는 "핵폐기장을 주제로 한 집단토론과 자연체험 등 다양한 생태교육을 진행해 아이들이 '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는 것을 배운다'며 무척 즐거워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렇게 어린이, 청소년들까지 핵폐기장 지지 투쟁에 나섰지만 정부는 요지부동이다. 오히려 정부는 지난 8일 김종규 부안군수 폭행사건 이후 '치안유지' 명목으로 주둔 경찰병력을 60개

중대 6천여 명으로 3배 증강해 '준계엄 상태'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대책위 집계에 따르면 29일 현재 구속 16명, 불구속 52명, 즉심 75명, 수배 10명 등 반핵투쟁에 앞장선 사람들에게 대한 탄압도 극심한 실정이다.

부안 수협 앞에서 매일 열리고 있는 촛불집회 사회를 맡아오다 수배된 김희정 씨는 "경찰은 대책위 사무실이 있는 부안성당 앞에서 수시로 검문을 자행해 관계자들의 행동반경을 좁히고 한편으로는 부안 주민을 폭도로 매도하며 불만을 표출하지 못하도록 겁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다음 달 1일부터 11일까지 문규현 신부 등 대책위 공동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삼보일배를 부안 수협 앞에서 전라북도 도청까지 진행하고 △다음달 2일부터 5일까지 전국 각지의 연인원 500명이 참여하는 '반핵현장활동'을 열며 △다음달 10일부터 전북에서 열리는 전국체전 지지투쟁을 벌이는 등 투쟁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강성준)

## 탈주자 양산하는 이주노동자 정책 개혁 서둘러야 화성 외국인보호소 탈주자 4명 붙잡혀...인권보호대책 시급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돼 있던 외국인 11명의 탈주사건을 계기로 외국인 보호정책과 강제추방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지난 27일 새벽 1시경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외국인보호소에서 강제출국 대기 중에 있던 외국인 11명은 보호소 내 창살을 자르고 함께 탈출했다. 29일 오후 현재까지 이들 탈주자 가운데 방글라데시인 2명을 비롯해 모두 4명이 붙잡혔다. 붙잡힌 이들은 다시 화성 외국인보호소로 재수용된 상태다.

무엇보다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이들의 탈주 사유. 탈주자의 대부분은 형사범이 아닌 단속으로 검거된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이다. 화성 외국인보호소 관계자는 보호소내 처우에 대한 불만을 탈주사유로 꼽고 있는 일부 언론의 보도내용을 강력 부인하면서 "오늘밤부터 자세한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강제퇴거 후 재입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탈주하지 않았겠느냐"고 추정했다. 법무부 출입관리과 관계자도 "우리 외국인보호소의 처우 수준은 주변국들에 비해 훨씬 양호한 편"이라며 처우에 대한 불만이 사유일 가능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서울경인지역 평등노조 이주지부는 의견을 달리했다. 이주지부의 서선영 씨는 "외국인보호소는 오랫동안 불법체류 이주 (2면에 계속)

# ● 박하순의 인권이야기 ● '비아 캠페시나'가 열어가는 길

올해 초 브라질에서 열린 세계사회포럼에 참가한 적이 있다. 운 좋게도 국제 소농 원주민 운동조직인 '비아 캠페시나' (농민의 길)의 초청을 받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농) 간부의 도우미로 부문별 사전대회의 하나인 농민대회부터 참석할 수 있게 되었다. 포럼기간 동안 우리처럼 '비아 캠페시나'의 공식 초청을 받은 200여명의 각국 농민운동 대표자들은 수도원에서, 브라질의 MST(땅없는 농업노동자들)를 비롯한 중남미의 5천여 농민들은 커다란 체육관에서 노숙을 했다. 이 '풍찬노숙' (風餐露宿)을 위해 어떤 철레농민들은 3-4일이나 걸려 버스를 타고 왔다고 했다. 불편한 잠자리와 변변치 못한 식사에도 불구하고 각종 토론회와 문화행사가 풍성하게 개최됐다. 이들은 미주자유무역협정 (ALCA 또는 FTAA)과 이라크전 반대시위의 주력대오이기도 했다.

이들은 늘 농업의 상징색인 녹색 모자를 쓰고 녹색 스카프를 두르고 다녔다. 최대 규모의 조직화된 대오였다. 지금은 정권의 성격이 변질되고 있지만 에콰도르와 브라질에서 이들 소농들에 힘입어 신자유주의에 비판적인 정권이 들어섰고, 볼리비아 선거에서는 반미·반신자유주의 가치를 내건 농민이 직접 출마해 선전했던 터라 사기도 흥만해 있었다.

포럼기간 중 토지점거에 성공해 공동체를 건설해 소박한 행복을 누리고 있는 MST 정착촌을 방문해 1500여명이나 되는 이들과 함께 할 기회를 가졌다. 거기에는 이들이 건설하고자 하는 자유, 평등, 협동, 우애의 미래사회가 이미 있었다. 포럼이 끝난 뒤에는 토지점거를 준비하고 있는 대규모 비닐 판자촌을 돌아볼 기회를 가졌는데, 이들 역시 새로운 공동체를 꾸리게 될 앞날에 대한 희망에 가득 차 있었다.

이번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회의에 대한 거리의 반대세력 중 주력대오도 '비아 캠페시나'였다. 이번에도 허름한 지역 문화회관에서 사전대회를 열었고, 집단 노숙을 하고 공동으로 식사를 해결했다. 이들은 세계적인 곡물 메이저기업과 초민족적 (금융)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WTO에 대항하여, 그리고 미국-유럽연합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동지배에 맞서 토지에 대한 권리, 식량주권, 식품안전성, 유전자조작 반대, 생명특허에 대한 반대 등을 내걸고 싸우고 있었다. 농민이 주력인 한국참가단과 중남미의 소농 원주민이 없었다면 칸쿤투쟁은 아예 불가능했을 것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운동에서의 '비아 캠페시나'의 주도성은 내년 초 인도에서 열리는 세계사회포럼에서도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비아 캠페시나' 지도자 중의 하나인 온두라스 농민 대표에 의하면, '비아 캠페시나'에 가맹해 있는 인도의 한 농민조직의 규모는 천만 명에 이른다.

'비아 캠페시나' 운동은 자본주의가 채 발전하지 않은 나라나 지역의, 아직 소멸하지 않은 소농들의 허망한 몸부림에 불과한가? 최소한 멕시코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멕시코의 한 인권변호사에게서 들을 수 있었다. "소농운동이자 원주민운동인 사파티스타 운동을 멕시코 시민사회의 90%가 지지한다. 노조는 부패했고, 제도혁명당에서 갈라져 나와 진보정당을 표방하는 민주혁명당도 가짜 좌파다. 사파티스타

(\*1면에서 이어짐) 노동자들을 범죄자처럼 다루며 폭행, 폭언을 일삼아왔고, 징벌 목적의 독방 수용이나 열악한 처우 등이 문제가 되어 왔다. 최근 개선된 측면이 없지 않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최근에는 강제출국에 앞선 대기 장소인 외국인보호소에서 감옥 아닌 감옥 생활을 강요하는 '장기구금' 문제가 큰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출입국관리법은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 가운데 즉시 송환이 불가능할 경우 무기한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임금체불이나 여행자 증명원 발급 등의 문제로 즉시 송환이 어려운 외국인들이 장기간 구금되는 경우가 흔하다. 이번에 탈주했다 검거된 방글라데시인 찬드라센 씨도 5월 19일 보호소에 입소, 임금체불 문제로 4개월이 넘게 수용돼 있었다. 이주지부의 꼬박, 비두 씨 역시 지난해 9월초 출입국관리소의 '표적단속'에 걸려 보호소에 수용됐다 21일간 단식농성과 국가인권위 진정을 거쳐 석 달 가량만에 일시 보호해제돼 풀려난 바 있다.

서 씨는 "임금체불 등의 문제로 당장 출국이 불가능한 경우 보호조치를 해제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데, 보호소측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사업주와 타협을 보게 한 다음 출국을 강요하는 사례가 많다"고 밝혔다. 부산외국인노동자인권유한모임 정귀순 대표도 "보호소측이 일시 보호해제를 적극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장기구금은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보호와 강제퇴거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적법절차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흔하다. 지난해 11월 전북대 사회과학연구소와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가 국가인권위 용역사업으로 수행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심층면접에 응한 14명의 보호소 수용자 중 상당수가 서면으로 발부하도록 되어 있는 보호명령서를 본 적이 없고, 있더라도 (영어 이외에는 통역/번역이 제공되지 않아)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서명했다고 응답했다. 또 대다수는 강제퇴거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보호소 내에서 일어난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인권위 진정절차에 대해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4년 미만 체류자 가운데 불법 입국자와 4년 이상 체류자를 합법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고용허가제 역시 시급히 개혁되어야 한다. 11월 15일 이후에는 미등록자와 합법화 제외자들에 대한 대대적 단속·추방이 예고돼 있다. 정 대표는 "이주노동자들이 목숨을 걸고서라도 보호소를 탈출하는 이유는 한국에 오기 위해 진 빚을 고스란히 안고 돌아오는 것이 그들에게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보호소내 처우문제는 물론, 선택적 합법화와 추방정책이 전면 재검토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배경내]

운동은 상승하고 있다." 멕시코 운동세력의 주된 구호가 '사파타 비베 비베 (만세 만세)'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이렇게 국제 소농운동 조직 '비아 캠페시나'는 세계전역을 충분히 자본주의화하지 못한 채 위기에 빠져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강요하고 있는 세계 자본주의의 강력한 비판자로 부상하고 있다. 여기에 이경해 열사의 죽음을 부여안은 한국의 농민운동도 함께 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박하순님은 사회진보연대 집행위원장이십니다.)

◎ 오늘 주간인권호를 읽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 2003년 10월

### (제 2426호 ~ 제 2445호)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3년 10월 1일(수)

제 2426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배경내

## “테러위협 빌미 국정원 강화 안돼”

### 테러방지법제정반대공동행동, 입법 중단·국정원 개혁 촉구

“안전을 위해 자유를 포기하는 국민은 안전과 자유 모두를 누릴 자격이 없다.” - 벤자민 프랭클린

지난해 많은 논란 속에 입법이 무산된 테러방지법이 또다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인권사회단체들이 입법저지투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산인권센터 등 60여개 인권사회단체로 구성된 ‘테러방지법제정반대공동행동’은 30일 오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테러방지법 제정 시도의 중단을 촉구했다.

테러방지법제정반대공동행동은 성명서를 통해 “국정원의 근본적 개혁을 현 정부에 기대하고 있었던 우리는 국정원의 권한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테러방지법의 제정 추진에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며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오랜 피와 땀을 통해 성취한 현 수준의 민주주의와 인권마저도 후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에 새로 마련된 법안은 테러범죄와 단체구성, 불고지죄 등에 관한 벌칙 조항을 삭제하는 등 지난해 문제점으로 지적된 일부 조항을 수정하였지만, 국정원 내에 대테러센터를 설치해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을 총괄·지휘하도록 하는 등 국정원의 위상을 더욱 강화하고자 한다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다. 테러방지법제정반대공동행동은 “한때는 월드컵을 핑계삼더니 이제는 또 무엇을 이유로 내걸 것인가”라고 물으며 테러방지법의 추가 입법에 어떠한 명분도 있을 수 없음을 지적했다.

기자회견에 이어 열린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테러방지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실제 테러를 포함

한 안전업무나 재난관리업무 등은 기존 국가기구에 의해 이미 수행되고 있는데,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구를 중복해서 둘 필요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 민변의 장주영 변호사는 “국정원은 현재 테러대책기구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하지만, 효율성으로만 따지자면 중앙정보부 시절이 최고였다. 그때로 돌아가자는 말이냐”고 되물었다.

또 장 변호사는 비밀조직인 국정원에 대한 외부 통제기제의 부재를 지적하며 “국정원은 정보기관 본연의 업무인 테러에 관한 정보만 수집하면 되고,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대테러정책의

결정과 집행은 일반 행정기관이 투명하게 집행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이계수 교수(울산대 법학)는 9·11 이후 세계적으로 시민권이 제약되고 반테러법 등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정보기본권을 침해하는 새로운 법률들이 제정되고 있는 경향을 지적하며 “각국의 보수 공안세력들이 9·11을 자신들의 권한 강화의 계기로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 스테러방지법은 사실상 대테러센터의 조직 및 권한에 관한 법률이라는 점 △법안에 국정원을 통제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없는 점 △국내 치안문제에 군대를 동원할 수 있다는 점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공개적 논의가 없었던 점 등을 비판했다.

테러방지법제정반대공동행동은 향후 테러방지법에 관한 의견을 정부와 관련부처에 전달하기로 하고 지난 대선 후 중단된 국정원 개혁에 관한 논의를 공론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대홍]

## “퇴직연금제는 퇴직금만 위태롭게 할 뿐”

### 퇴직금 증시안정자금 동원 목적...현행 퇴직금제 강화해야

지난 24일 노동부는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으로 구성되는 퇴직연금제도의 도입(2004.7 시행)과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 적용 확대(2007.1 시행)를 골자로 하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안을 입법예고했다. 퇴직적립금을 투자신탁회사 등에 위탁 운용하도록 해 퇴직시 적립된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한다는 것. 이에 대해 노동계는 퇴직금을 더욱 위태롭게 할 뿐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한국노총 강홍준 홍보국장은 “전체 노동자의 12%만이 노조로 조직되어 있는 현실에서 대다수 노동자들은 기업이 선호하는 확정급여형 퇴직금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개인이 기금운용 결과에 책임을 지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에서 사용자 부담

액은 현행 퇴직금 부담액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연금운용이 잘못되거나 증시 형편이 나빠지면 적립된 원금조차 송두리째 날아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도 퇴직연금제가 퇴직금을 증시안정자금으로 투입하고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라며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민주노총 정경은 정책부장은 “2007년 4인 이하 사업장에 확대 적용한다는 방안은 실현되기 힘들다”며 “퇴직금조차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4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들에게도 퇴직금이 보장될 수 있도록 현행 퇴직금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법안은 오는 13일 입법예고기간이 끝나는 대로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입법추진될 예정이다. [양승훈]

# 이달의 인권 (2003년 9월)

## 흐름과 쟁점

### 1. 이제는 전투병까지 달라하네

부시 미 대통령은 미국의 주도 아래 세계 각국 군대가 이라크 치안유지와 재건에 협력해야 한다고 국제사회의 협력을 촉구했다(9/8). 이어 국방부는 미국이 전투병 파병을 요청해 왔다고 밝혔다(9/9). 이에 대해 장영달 국회 국방위원장은 이라크를 방문한 후 "전투병 파병은 이라크 주민의 적대감 증폭 우려가 있어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9/16). 리처드 롤리스 미 국방부 부차관보는 "1만5천명 규모의 다국적군 지휘권을 한국에 맡길 계획이며 10월 24일 한미안보협 개최 때까지 파병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재촉했으나(9/18), 여야 의원 19명은 "추가파병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부결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9/18). 반면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는 방미 중 "미국은 지금 이라크 문제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파병 동의를 시사해 빈축을 샀다(9/18). 전국민 중연대, 민주노동당 등 361개 단체들은 '비상국민행동'을 결성해 파병반대를 위한 범국민적 운동을 결의했고(9/23), 세계 40여 개 국가에서 동시에 열린 '국제반전공동행동' 집회에서는 파병반대 목소리가 뜨겁게 울려 퍼졌다(9/27). 한편 조영길 국방부 장관은 "10월 중순까지 이라크 추가 파병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파병 결정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9/30).

### 2. 꺼지지 않는 반핵의 촛불

정부가 위도 핵폐기장 선정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김종규 부안군수가 핵폐기장 백지화를 요구하는 부안군민을 자극해 집단폭행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9/8). 이에 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관련자들을 엄단하고 재발방지책 마련"을 지시하자, 경찰은 주둔병력을 60개 중대 6천여 명으로 3배나 증강 배치하고, 촛불집회 연단과 반핵 플래카드, 깃발 등을 철거했다(9/9). 그러나 부안대책위는 "국가폭력에 굴하지 않고 최후의 1인이 남을 때까지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고(9/10), 군민 8천여 명은 한가위 연휴에도 촛불집회에 결집해 이에 화답했다(9/10). 전북 교사 3천여 명도 '핵폐기장 유치 철회와 핵에너지 정책 대전환 촉구 선언'을 발표했고(9/15), 부안군 의원 7명은 핵폐기장이 백지화될 때까지 등원거부를 선언하고 군수와 군의회 의장의 퇴진을 촉구했다(9/24). 부안 어린이·청소년 1100여 명도 대거 상경해 반핵평화행진을 벌이는 등(9/29) 군민들의 저항은 줄을 이었다. 한편 고건 총리는 대책위 문규현 신부 등과 면담해 "그 동안 정부와 주민과의 실질적 대화가 부족했다"고 시인하며 조건 없는 대화를 제의하면서도 "핵폐기장 백지화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못박았다(9/29). 부안 초중고 운영위원장들은 만장일치로 등교거부 지속을 결의했다(9/30).

### 3. 사회보호법, 얼마 안 남았다

한나라당 인권위가 "9월말까지 사회보호법 폐지안을 마련해 올 정기국회 내 처리"하고 이를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9/17). 반면 법무부 정책위원회는 감호기간의 제한, 보호감호 시작 전 중간심사제의 도입 등 사회보호법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법 폐지 여부는 추후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9/19). 이에 헌법학자와 변호사 등 법률가 176인은 위협적인 사회보호법의 폐지를 촉구했으며(9/19), 청송감호소 가출소자 70여명도 집단상경해 사회보호법 폐지 운동에 힘을 실었다(9/22). 이어 출소자들은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사회보호법 폐지 1인 시위에 돌입했고(9/23), 청송 피감호자 500여 명은 5번째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가 법무부 개정안의 철회와 사회보호법의 폐지를 거듭 촉구했다(9/29).

## 논평

- 노동자가 위험하다, 정부가 위험하다(9.6)
- 파병과 테러방지방이 이끄는 '죽음'의 쌍두마차(9.20)
- 국정원 개혁, 왜 안 하나(9.27)

## 인권이야기

- 손상열 - 6자 회담 이후 짙어봐야 할 것(9.2)
- 최은아 - 호주제 폐지 이후 호적제도의 개혁과제(9.16)
- 선미 - '미래의 주역'과 오늘의 고통(9.23)
- 박하순 - '비어 캄페시나'가 열여가는 길(9.30)

## 인권정보자료

- 「이윤보다 생명이다」(9.5)
- 「새벽을 깨우는 M 한 장 : 인권하루소식이 전하는 161개의 인권이야기」(9.26)

## 기획연재 - 공공부문 간접고용 실태와 대안

- ① 장시간 노동, 박봉에 우는 간접고용 노동자들(9.18)
- ② "노동조건 개선은 꿈도 꾸지 마라"(9.25)

## 기획 - 창간 10주년 기획 '그 때 그 사건'

- ⑤ 부랑인 수용시설 양지마을 사건 - 육지위의 노예섬, '양지마을'은 진행형(9.2)
- ⑥ 김훈 중위 사건 - JSA를 울린 한 발의 총성, 그후 군의문사 진실찾기(9.3)
- ⑦ 고문기술자 이근안의 등장 - 뿌리뽑아야 할 범죄, 고문(9.4)
- ⑧ 매항리 폭격장 폐쇄 투쟁 - 고통의 땅 매항리는 아직도 "뚜두뚜두 쿵"(9.5)
- ⑨ 한국통신 비정규직 노조투쟁 - 2000년 한겨울의 외침, "우리는 물건이 아니었어"(9.6)
- ⑩ 군산 성매매 여성 화재참사 - 두 번의 화염이 휩쓴 군산, 성매매의 오늘 <끝>(9.9)

## 성명서- 인권하루소식 창간 10주년을 맞아

- 10년의 새벽을 다시 깨운다(9.6)

## 특별기고

- 김지운 - 대학도서관 개방운동의 의미 : 정보의 사적 독점에 맞선 '올리브 프로젝트'(9.19)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 불안과 분노에 떠는 이주노동자들

### <현장> 합법화 시한 한 달 앞둔 이주노동자들을 만나다

"한국인 노동자들보다 훨씬 더 적은 돈 받고 더 힘들게 일하며 버텨왔는데, 이제 와서 나가라니 말이 됩니까?" 우리가 한국경제에 도움이 되었다는 걸, 우리도 이웃이라는 걸 인정해 주세요." 지난달 28일 오후 경기도 일산에서 서울경인지역 평등노동 이주지부(아래 이주지부) 주최로 열린 '단속추방분쇄 노동비자쟁취 일산지역 투쟁 결의대회'에서 만난 이주노동자들은 여기저기서 분노를 토해냈다.

7월 31일 국회를 통과해 8월 16일 공포된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특례조항에 따라 지난달 1일부터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의 합법화를 위한 등록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곳곳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무엇보다 지난 3월 31일을 기준으로 체류기간이 4년이 넘은 20여만 명을 비롯해 정부의 '선택적 합법화' 대상에서 제외된 이주노동자들은 내달 20일경 이후 대거 추방될 위험에 내몰려 있다.

#### 강제추방 앞두고 애타는 심정들

"이주노동자들이 소규모로 고용된 사업장에서는 최근 계속해서 4년 넘은 사람들을 해고하고 있어요. 오랫동안 일해 온 숙련 노동자들을 왜 추방하는지 모르겠어요." 경기도 안산에 거주하고 있는 방글라데시 출신 소학 씨는 "친구들 중에 남편은 체류한 지 4년이 넘고 아내는 3년이 안돼 11월 15일 자진출국기간까지 생이별해야 할 처지에 놓인 부부도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서울 이태원 이슬람 사원에서 만난 파키스탄 출신 라히 씨는 대화를 나누는 내내 불안한 눈길로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2001년부터 불법체류하고 있는 라

히 씨는 의자 만드는 공장에서 일하다 지난해 협심증에 걸려 일자리를 식당으로 옮겼다. 가족의 생계 때문에 몸이 아파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라히 씨는 이달 말까지 다른 업종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쫓겨날 처지다. 국적을 불문하고 합법화가 허용되는 업종은 농축산업뿐이고, 음식점업 등 서비스분야 6개와 건설업은 외국국적의 동포에게만 허용되기 때문이다.

3월 31일 이후 신규로 발생한 불법체류자들도 합법화에서 제외되긴 마찬가지. 브로커들에게 500만 원이나 주고 한국에 왔다는 모로코인 부랄리 씨는 4월 2일자로 불법체류자가 돼 자진출국기간이 끝나면 추방될 처지에 놓였다. 이주노동자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윤성봉 노무사는 "현시 브로커들에게 속아 새로운 제도에 대해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채 최근 입국한 이주노동자들도 많다"면서 "방글라데시의 경우 대개 브로커에게 1천만 원을 주고 들어오는데, 이 금액은 방글라데시에서 평생을 벌어도 모으기 힘든 돈"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이주지부를 비롯한 이주노동자 관련 인권단체들은 모든 이주노동자를 합법화하고 최소 5년간의 체류와 취업을 보장하는 노동비자의 발급을 요구하고 있다.

#### 사업주들 담합해 노동조건 후퇴시켜

다행히 합법화 대상에 포함된 노동자들도 지금보다 더 열악한 노동조건을 받아들여야 하거나 아니면 쫓겨나야 할 형편에 놓여있다. 등록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고용주가 발급하는 고용확인신고서와 사업자등록증, 표준근로계약서,

2003년 10월 2일(목)  
제 2427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배경내

기간이 끝나면 자진 출국하겠다는 서약서 등의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데, 이를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계기로 악용하는 사업주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주지부 선전국장 쏘냐 씨는 "새로 근로계약을 작성하면서 임금 삭감, 휴일수당 폐지, 퇴직금 폐지 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줄을 잇고 있다"고 말했다. 이주노동자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용산 나눔의집 최준기 신부도 "120만 원을 받던 이주노동자가 임금이 절반이나 깎여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있었다"며 등록기간이 끝나는 10월말이 되면 이와 같은 사례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 우려했다.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강제추방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이 후퇴한 노동조건이라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

최준기 신부는 또 "사업주가 이주노동자의 신원을 보증하도록 하는 체계여서 사업주들이 필요한 서류 발급을 꺼리는 경우가 많은 뿐 아니라, 사업자등록증조차 없는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 고용된 이주노동자들의 경우는 등록 자체가 불가능한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 "재입국 보장 없어 출국 힘들어"

일단 출국했다 재입국해야 하는 3년 이상 4년 미만 체류자들도 사업주들이 고용확인신고서 발급을 꺼려 등록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이주노동자들 자신도 재입국한다는 보장도 없어 등록을 꺼리고 있다. 또다시 불법체류자로 남는 길을 선택하고 있는 것. 9월 30일 현재 합법화 대상 23만여 명(노동부 집계) 가운데 단 10% 등록률을 보이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현실에서 비롯된다.

사업장 이동의 자유와 노동3권이 보장되지 않아 1년 단위의 노예생활을 강요한다는 고용허가제 자체의 문제점은 접어두고, 이 제도가 정착되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은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 (배경내/강성준)



<기획연재> 공공부문 간접고용 실태와 대안 ③

### 정부 구조조정 정책, 저임금·고용불안 부추겨

97년 12월말부터 본격화된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에 따라 2000년 말까지 △공공부문 민영화 △14만 명에 이르는 인력 감축 △외주 용역화 △각종 복지제도의 축소 △성과주의 임금체계의 도입 등이 진행되었다. 2001년부터는 이른바 '상시적 구조개혁 시스템'이 도입된 것이다.

정부산하단체를 강제하는 기획예산처의 구조조정 지침은 공공부문의 경영혁신 원칙으로 '건물 등 시설물 관리, 주차장 관리, 식당 운영 등 비교적 단순기능을 수행하는 업무' 등을 민간 위탁할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에는 정규직 대 비정규직 비율을 3:7로 변화시키는 것이 중장기적 과제로 제시되었다. 도시철도공사는 94년 설립 당시 이미 예상 정원의 30%가 모자라는 상황에서 출발하였음에도 99년 2월에는 정원의 20.8%에 해당하는 1천6백56명을 감축하였다. 이 과정에서 모자라는 인력은 용역으로 해결해왔다.

부산 해양대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정부조직 개편 방침에 따라 정원이 감축된 국립대 방호·위생직 정원은 신규로 채용할 수 없고, 이미 인력 감축에 따른 용역비가 국고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다. 부산 지하철의 경우 2002년도 경영혁신추진지침에 따라 83개 역사 중 34개 역 매표업무를 민간 위탁하였다. 그러나 명목상 위탁일 뿐 실제로는 간접고용으로 2002년 11월 부산지방노동청에서 불법파견으로 고발하기까지 했다.

노동자를 물자로 파고 사는 조달청

이런 정부의 지침이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조달청 물자조달계약지침'이다. 이 지침에는 교육기관, 정부투자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등 2만 6천여 개 공공기관의 경우 '품명 당 5천만 원 이상인 내자 물자'의 용역계약을 조달청을 통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들 공공기관들은 조달청의 최저낙찰제로 결정되는 업체와 용역계약을 맺게 된다. 정부는 99년 9

월 9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3항의 '예정가격의 100분의 90이상으로 입찰한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로 결정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여 '최저낙찰제'를 도입하였다. 이로써 무조건 낮게 써서 응찰하는 용역업체가 계약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런 조달청의 조달계약 지침은 민간업체의 용역 입찰의 경우에도 기준으로 적용된다.

2000년 서울대 용역업체로 선정된 (주)대호안전관리공사는 대학당국이 원래 책정했던 28억 8천만 원에 훨씬 못 미치는 23억 1천만 원에 용역계약을 따냈고, 그런 만큼 노동자들은 예년에 비해 5만 원 정도 깎인 임금(여성 미화원 40만원, 남성 미화원 45만원)을 받게 되었다. 이와 같은 경우는 부산해양대, 서울대공원의 사례에서도 확인된다.

결국 '최저낙찰제'는 이미 최저임금 수준인 조달청 예상 입찰가격보다도 더 낮은 수준에서 용역계약이 낙찰되도록 하여,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저임금 구조를 낳는 원인이 되고

있다.

지방자치 단체의 잘못된 민간위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 동안 시설관리원,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 등 각 직종별로 30% 이상의 인력이 감축되었고, 민간위탁이 추진되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비정규 상근인력 관리운영지침'등 구조조정 지침의 결과이다. 의정부시는 99년 7월 가로 청소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기로 결정하면서 환경미화원들을 강제 전직시켰다. 이때 미화원들의 월급은 50만 원씩 삭감되었다. 또 평택시는 2002년 12월 31일자로 도로보수원 전원을 우선 정리해고한 뒤, 보름도 더 지난 올 1월 17일야에 민간위탁 입찰공고를 냈다. 더욱이 민간위탁 예산이 이전에 비해 1700만 원이나 증가해 비리의혹을 불러오기도 했다. 이처럼 강행 처리된 정리해고에 대해서는 지난 5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판정을 내리기도 했다.

이와 같이 정부에 의해 진행된 구조조정과 각종 지침은 인력 감축과 외주용역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비정규 노동자의 양산과 저임금, 고용불안을 정착시키는 주도적 역할을 해내고 있다. (안우진/박래군)

◎ 다음 하루소식은 7일에 찾아갑니다.

## 만화 사랑방

이동수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3년 10월 7일(화)

제 2428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배경내

## 또다시 빛어진 보호감호제의 비극

### 강모 씨 사망경위 베일 속·피감호자 단식 8일째 이어져

청송보호감호소(이하 감호소) 피감호자들의 단식농성이 8일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단식농성자 중 1명이 갑자기 사망하는 사건까지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4일 사망한 강모 씨는 6일 부검 결과 급성 충소돌기염과 파열 및 복막염이 사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강 씨의 사망 소식을 가장 먼저 접한 출소자 조석영 씨는 "이번 사건은 감호소 내의 의료문제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비극"이라며 "감씨가 (이중처벌인 보호감호처분으로) 감호소에 있지 않았다면 복막염과 같은 병으로 어이없게 죽을 수 있었겠냐"며 울분을 삭였다.

감호소 측의 사망경위에 관한 증언도 의혹을 부채질하고 있다. 조 씨에 따르면, 강 씨는 단식 이틀째인 9월 30일 부모님에게 전화를 해 안부를 전하기도 했으며 병동 입원환자도 아니었다. 그런데 사망 직후 청송감호소 측은 '강 씨가 간경화를 앓고 있었고 단식 중 아프다고 해서 수액을 맞고 죽을 먹다 갑자기 사망했다'고 사망 경위를 밝혔다. 그러나 부검 결과 간경화 증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우석균 의사는 "사인이 된 병은 심한 통증을 동반하는데, 소측이 말한 환자의 증상이나 의료 조치는 전혀 납득할 수 없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강 씨의 죽음으로 피감호자들의 농성 분위기도 더욱 격앙되고 있다고 조 씨는 전했다. 동료의 어이없는 죽음이 이들이 처한 상황을 다시 한번 웅변해 주었기 때문이다. 단식 8일째를 맞은 6일 현재, 전체 피감호자의 2/3에 해당하는 8백여 명이 단식을 계속하고

있으며, 과거 농성을 주도해 왔던 2감호소뿐 아니라 1감호소에서도 자발적인 참여가 늘고 있는 상태다.

사회보호법 폐지를 촉구하는 움직임은 감호소 안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활발하다. 지난달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사회보호법의 잔혹함을 알렸던 출소자들과 가출소자들은 법무부 앞에서 1인 시위에 들어갔으며, 6일부터는 국회 앞으로 시위장소를 옮겼다.

지난 1일에는 인권사회단체 활동가들도 사회보호법 폐지를 촉구하는 선언을 발표했다. 활동가들은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제도는 이미 형벌이 종료된 사람의 인신을 구속해 시설에 구금하고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반인권적 악법"이라며 "법무부의 사회보호법 존치 노력은 역사적 책임과 시대의 사명을 거스르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법무부는 사회보호법 폐지를 놓고 아직도 갈팡질팡이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사회보호법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예정됐던 10월 2일 정책위원회 회의는 "존치와 폐지에 대한 입장 차이가 팽팽히 대립하고 있어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채 폐회"했다. (김정아)

## 장애인콜택시 운전기사 노조의 힘겨운 출발

### '봉사원' 신분·열악한 노동조건 여전히 못 벗어나

그 동안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했던 장애인콜택시 운전기사들이 노동조합(지부장 변재수)을 설립해 화제가 되고 있다. 운전기사들은 지난 8월 5일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한 뒤 무려 55일간의 심사를 거쳐 마침내 9월 30일 동부지방노동사무소로부터 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장애인콜택시 제도는 올해 1월 1일부터 서울시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현재 100대가 운행중이다. 이 택시에는 휠체어리프트가 장착되어 있고 요금도 일반택시의 40% 정도여서 중증장애인을 위한 거의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이 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로부터 운영을 위탁받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아래 공단)과 1년 단위의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는 운전기사들은 '운전봉사원'으로 불리며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부정당해 왔다. 운전기사들은 하루 약 10시간의 잠시

간 노동을 하면서도 기본급 95만원에 보통 월 20~30만원의 성과급을 받는다. 또 가스비, 수리비 등도 자비로 부담해 왔다. 지금은 운전기사들의 요구로 가스비를 공단 측이 부담하고 있지만, 차량 보수·유지비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변재수 지부장은 "적은 급여에 자비 부담이 많아 지금까지 그만둔 운전기사가 20명이 넘는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3일에는 운전기사 신동권 씨가 장애인 탑승객을 들어 옮기다 허리를 다쳤지만 공단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자비로 모든 치료비를 부담해야 했다. 이 사건은 운전기사들이 노조 결성을 결심하게 된 직접적 계기가 됐다.

노조를 설립하기까지 탄압도 있었다. 변 지부장은 "설립신고서를 내자, 시설관리공단 측은 기사들을 개별적으로 불러 재계약을 미끼로 회유하는 등 노조탄압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신고필증이 나온 후에도 공단 측은 (2면에 계속)

○ 손상열의 인권이야기 ○

전쟁을 거부할 권리와 전쟁에 거부운동

91년 걸프전 때, 일본에서 벌어졌던 일이다. 유엔 다국적군에게 일본이 지불한 90억 달러 가량의 전비 지원금을 놓고 대대적인 시민소송운동이 일어났다. '평화를 위한 시민소송'에 참여한 시민 3000여명은 국가를 상대로 전비 부담과 해외 파병이 위법한 것이며 시민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항의했다. 그리고 걸프전에 가담함으로써 납세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만큼, 이에 대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99년 유고공습 때에도 비슷한 행동이 있었다. 미국과 나토의 유고공습에 항의했던 전쟁거부자연맹(WRI)이라는 단체는 납세를 거부하면서 "우리의 세금을 살인이 아니라 유고의 난민과 빈민을 지원하는 데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외에도 '전화세에 포함된 전쟁세 안 내기 운동', '전쟁세의 일부를 오직 인도적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는 평화세로 전환하자는 캠페인' 등을 펼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전쟁에 반대하고 있다.

이들이 실천하고 있는 전쟁세 거부운동은 '전쟁에 어떻게 저항할 것인지'에 대해 근본적으로 고민하는 모든 이에게 작지 않은 영감을 던져 준다. 무엇보다 이들의 운동은 우리에게, 전쟁·폭력·살인 따위와 우리의 일상이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강하게 문제제기하고 있다. 부당한 전쟁과 살인에 사용되는 돈이 사실은 우리 일상에 스며든 전쟁협조체계, 즉 납세를 통해 전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마련되고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이들의 행동은 평화와 안전이라는 것 또한 누군가 보장해줄 수 있는 '그 무엇'이 아니며, 전쟁을 거부할 권리·평화를 추구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스스로 주장하고 행동함으로써만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진지한 마음을 가진 평화주의자들은 게으른 꿈과 싸우거나 단지 평화에 대해 이야기하기보다는 실제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특히 이라크 추가 파병 문제로 온 나라가 떠들썩한 오늘 우리의 상황에서, 전쟁을 반대하고 폭력에 저항하는 일상적인 실천은 여전한 고민거리일 수밖에 없다. 특히 이라크라는 해외의 전장이 우리의 일상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문제제기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전쟁세 거부운동은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부당한 이라크 점령에 협조하는 국가에 항의하고, 전쟁세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또한 평화를 위한 인간의 기본권이라는 사실을 주장함으로써, 은은하지만 끈질긴 평화운동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손상열님은 평화인권연대 활동가입니다.)

(이면에서 계속) 조합원 수가 적다는 이유로 단체협상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변 지부장은 "직원 추천으로 기사를 선별하는 등의 문제를 제기했지만 공단 측은 들은 척도 안 한다"며 노조를 무시하는 공단측을 비판했다.

그러나 서울시청 장애인복지과의 임한균 장애인복지팀

주간인권흐름

(2003년 9월 29일 ~ 10월 6일)

1. 이라크 파병 수순 밟는 정부  
김진표 부총리, 국감답변에서 "신속한 이라크 파병 결정이 경제에 도움될 것"(9.29)/ 라포트 한미연합사령관, 한미상호방위조약 조인 50주년 기념식에서 "한국의 군사적 능력으로 미워 이라크 추가 파병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압박(9.30)/ 윤영관 외통부 장관, "파병결정 너무 늦어져서 곤란"(9.30)/ 한승주 주미대사, "조건없는 이라크 파병 지지"(9.30)/ 폴 월포워츠 미 국방부 부장관,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은 한국에 도움이 될 것"(10.2)/ 미, 다국적군의 이라크 파병과 재건비용 부담을 촉구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초안 제출...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 "미국이 유엔과 이라크과도통치위를 제치고 계속 주도적 구실을 하는데 비판적"(10.2)/ 이라크 파병 정부 조사단 귀국, "한국에서 보고 들은 것보다 안정화되어 있다는 느낌"(10.3)/ 정부 조사단 민간위원 박건영 교수, "미군 제시 일정과 안내에 따라 움직였으며, 파병 예상지인 모술 지역 조사는 겨우 4시간에 불과", "조사보고서를 파병 결정에 중요자료로 참고하기에는 한계가 많다"고 털어놓(10.6)

2. 핵폐기장 백지화, 물꼬 터지나  
문규현 신부 등 부안대책위 공동대표들과 주민들, 부안에서 전북도청까지 삼보일배 시작(10.1)/ 고건 총리와 부안대책위, 대화기구 구성을 위한 실무기구 구성 합의...핵폐기장 백지화나 전면 추진 등 전제조건 없이 모든 사안에 대해 대화하기로(10.3)/ 전북대책위, "정부는 유치에 대한 행정행위중단, 구속·수배문제 해결 등을 통해 대화 의지를 분명히 보여야 할 것"(10.4)/ 부안 초중고 운영위원장단, 41일만에 등교거부 철회...대화 중단되면 2차 등교거부할 것(10.4)/ 정균환 의원, 등교거부 철회에 대해 "부안군민이 위대한 결단을 내렸으니 이제 정부 차례"(10.5)/ 위도발전협 정영복 위원장이 위도에서 반핵 현장활동하던 학생 뺨 때리고 "1시간 안에 나가지 않으면 없애버리겠다"고 협박...대책위, 사과와 재발방지 요구(10.5)

장은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없고 택시운행의 수입금 전액이 운전기사 자신 몫이라 노동자라고 보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공단이 지정한 콜센터에서 정해진 근무시간에 따라 일하고 월 95만원의 기본급에 차량운행을 통한 수입은 성과급의 성격을 갖고 있어 이들의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서울시청의 태도는 설득력이 없다. 이미 지난 8월 말 근로복지공단도 콜택시 운전기사들의 산재보상에 관한 질의에 대해 "장애인콜택시 운전기사는 근로기준법 제14조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답한 바 있다. 이처럼 노동조합이 만들어졌지만 갈 길은 멀다. 변 지부장은 "우선은 최소한의 노동자성만이라도 인정받았으면 좋겠다"며 "4대보험 적용과 계약직의 정규직화, 노동시간 단축을 우선적으로 요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홍)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3년 10월 8일(수)

제 2429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배경내

“교육개방 특별법은 공교육 포기”

외국 교육자본 유치 특별법 추진...교육불평등 심화 우려

지난 2일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대한 특별법(안)'에 대해, 여러 교육·사회단체들이 '이 법안이 공교육 포기 선언에 다름 아니며, 이와 같은 시장주의적 교육정책은 향후 혼란만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번 법안의 주요한 내용은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일체의 국내 교육관련법의 적용 배제 △설립·운영에 관한 규제 완화 △등록금, 선발, 교원, 교육과정 등의 자율적 운영 보장 △세제, 부지 공여, 재정 지원 등 각종 혜택 부여 △결산상 잉여금의 본국 송금 허용 △국내 학교와 동일한 학력 인정 △내국인 입학 허용 등이다. 사실상 전면적 교육개방과 규제완화를 통해 제주 국제자유도시와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의 교육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인 셈이다.

교육개방 전면화 위한 특별법 추진

이에 7일 오전 11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는 'WTO 교육개방 저지와 교육공공성 실현을 위한 범국민교육연대(준)'등 각계의 사회단체 대표들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개방 전면화 중단'과 '특별법 제정 철회'를 촉구했다.

대표들은 성명서를 통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은 결국 학생들의 편중 현상과 전반적인 경쟁구조의 심화, 사교육비를 포함한 전체 교육비 상승을 초래하여 교육적 불평등을 더욱 확대시킬 것"이라 비난하며 "이번 법안이 불려올 전면적인 교육개

방은 급속도로 공교육의 붕괴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육불평등·공교육 붕괴 초래할 것”

전국민중연대 정광훈 상임대표는 "10%의 사람들만 돈을 들여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현실을 바꾸어야 한다. 교육을 상품화하려 앞장서는 정부를 막아내야 한다"며 열변을 토했다. 전국연합 오종렬 공동대표도 "외국자본이 마음대로 와서 학교를 설립하고, 장사가 안되면 그대로 떠나버려 폐허만이 남는 게 교육개방의 실체"라고 꼬집었다.

전교조 조희주 부위원장은 외국 학

교의 최종적인 설치 승인의 책임을 재정부 산하 경제자유구역위원회로 떠넘겨 버린 교육인적자원부의 무책임성을 비판하면서, "교육부는 사실상 교육을 포기한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전국교육대학교 대표자 협의회 김동환 위원장은 "누구나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것이 어떤 특정한 계급과 기득권자들을 위해서만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를 위해서는 무분별한 교육개방이 아닌, 교육재정 확충 등을 통한 공교육의 질적 향상과 올바른 교육개혁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범국민교육연대(준)등 교육·시민·민중운동 진영은 오는 11일 이번 법안의 입법저지와 WTO 교육개방 및 교육주권포기 저지를 위한 민중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향후 집회와 캠페인 등을 통해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양승훈)

“국민 인권보다 미군 심기가 우선인가”

스트라이커부대 시위 관련자들 인권유린 심감

지난 8월 7일 있었던 스트라이커부대 진입시위 등을 발미로 최근 11기 한총련 간부들에 대한 탄압이 자행되고 있는 가운데, 당시 시위와 관련한 경찰의 수사과정에서도 인권침해가 계속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비난이 거세어지고 있다.

7일 오전 11시 '스트라이커부대진입시위관련구속자석방대책위'(아래 구속자대책위), 인권운동사랑방, 11기 한총련은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스트라이커부대 시위 관련자에 대한 인권유린 사례를 보고하고 구속자 전원석방과 한총련 탄압 중단을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스트라이커부대 진입시위 관련자들을 경찰이 연행·수사하는 과

정에서 무차별적인 통신내역 조회와 공갈협박, 미행, 영장없는 압수수색 등의 인권침해가 자행된 데 대해 강력 규탄했다.

박수정 씨(수원여대)는 기자회견에 참석해 자신이 당한 인권침해 사례를 직접 밝혔다. 박 씨는 지난 8월 9일 의정부경찰서 앞에서 스트라이커부대 진입시위 관련자 연행에 항의하여 시위를 벌이던 중 연천경찰서로 연행됐다가 훈방조치됐다. 하지만 경기도 보안수사대 권태준 형사는 박 씨가 훈방조치된 후에도 학교로 찾아가 박 씨의 전화번호를 알아내 만나기를 요구했다. 이에 박 씨는 계속 거절을 했지만 권형사는 "그렇게 피하면 나도 내 방식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협박 (2면에 계속)

# "유료소개소, 간병인·환자 부담만 늘릴 뿐" 서울대병원 간병인들, 무료소개소 폐쇄 중단 촉구

서울대병원(병원장 박용현)이 지난 15년 동안 운영해온 간병인 무료소개소를 폐쇄하고 대신 사설 유료 간병인 업체를 도입하기로 해, 간병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뿐 아니라 환자 부담까지 가중시킨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무료소개소가 병원 측에 의해 일방적으로 폐쇄된 것은 지난 달 1일. 보건 의료노조에 따르면, 같은 달 17일 병원장은 노조와의 면담에서 유료 간병인 업체의 일방적 선정을 중단하고 노조가 자체 운영하는 무료 소개소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30일 병원 측이 약속 백지화를 통보해 왔고, 지난 1일 이에 항의하러 병원장을 면담하러 간 간병인 대표 등 6명이 원장실 앞에서 경비원들로부터 폭행 당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결국 간병인 대표 정원자 씨는 같은 날 병원 측의 약속파기를 규탄하며 본관 앞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하는 한편, 7일부터는 간병인들의 릴레이 단식농성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 의료노조에 따르면, 기존 무료소개소 체제에서는 △간병인이 병원에서 공채되었고 △병원 간호사가 간병인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해 왔으며 △간병료를 병원에서 결정해 왔다. 하지만 사설업체에 맡겨질 경우 △간병인의 자격요건과 별도 교육이 없으며 △간병인이 부담해야 할 업체 입회비가 25만원, 월회비가 5만원에 이르고 △간병료를 업체에서 결정하게 돼 환자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간병인들이 24시간 노동으로 받는 돈은 고작 5만원. 이를 8시간 노동으로 환산하면 한 달 임금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50만원에 불과하다. 간병인들은 이렇게 극도의 저임금에 시달리면서도 무의식 환자 간병, 튜브식사, 가래뽑기, 투약 등 간호의 많은 부분을 담당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월회비 부담에다 이미 사설업체가 도입된 다른 병원에서 종종 보고되는 것처럼 장기환자 소개를 위한 웃돈을 요구받거나 업체 관리자가 손자 돌잔치 청첩장까지 돌리는 사례까지 발생한다

면 간병인들이 당하는 착취의 정도는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한달 50만원에 월회비 부담까지

이에 대해 병원측 관계자는 "그동안 간병인들의 업무 태만에 대한 환자들의 항의가 계속돼 관리 경험이 많은 업체에 맡길 경우 의료 서비스 향상이 기대된다"며 "기존 간병인은 사설업체에 있었다면 부담해야 했을 가입비와 월회비를 내지 않았으니 그만큼 이득을 누려온 셈"이라고 주장했다. 또 "병원장은 노조측이 주장하는 약속 자체를 한 적이 없으며, 폭력사태도 간병인들이 제기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병원 안모 간호사는 "기존 간병인은 오랫동안 근무해 병원 시스템을 잘 알고 간호사와 의사소통이 잘 된다"며 "사설업체 간병인은 매번 다른 사람이 들어와 그때마다 업무를 설명해 줘야 하고 전문적이라는 느낌을 못 받았다"고 반박했다. 병원 현관 앞 단식농성장을 지나던 환자 나모 씨(60)도 "업체가 간병료를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 자체가 환자에 대한 횡포"라며 "간병인은 병원에서 공채로 뽑아야 환자들이 좋은 서비스를 받을 것 같다"고 말했다.

7일 서울대병원 본관 건물 앞에서 열린 항의집회에 참석한 건강세상네트워크 강주성 대표도 "간병 비용은 '간호료' 명목으로 환자가 이미 지불한 병실료에 포함돼 있어, 환자가 따로 간병인을 두는 것 자체가 이중부담"이라며 "간병 업무를 외부업체에 맡기지 말고 병원이 직접 관리하는 것이 공공의료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강성준)

(☞면에서 이어짐) 하는가 하면, "불법이 아니냐, 고소하겠다"는 박 씨의 말에 "마음대로 해라"라고 응답하는 등 계속적으로 박 씨를 압박했다. 권형사는 영장도 없이 박 씨의 집에까지 들어가 협조하지 않으면 박 씨가 구속될 수 있다며 가족들을 협박하기도 했

다. 최근까지도 박 씨는 연천경찰서로 나와줄 것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았다. 박 씨는 이날 공갈협박과 가택침입 혐의 등으로 권 형사와 연천경찰서 소속 경찰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시켰다.

영장없이 집안까지 들어와 협박

또한 경찰은 스트라이커부대 진입시 위 당시 취재를 하던 이용남 현장사진 연구소 소장을 연행, 경찰서 유치장에 가두고 이 소장을 구속하기 위해 영장도 없이 그의 승용차와 핸드폰, 사진기 등을 압수수색해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이 소장 측은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밖에 김영국 씨(경원대)는 단지 구속자와 통화가 잦았다는 이유만으로 9월 2일 연행됐다 무혐의로 풀려나기도 했다.

구속자대책위 금영재 사무국장은 "연행 당일에는 경찰들의 조사 태도가 비교적 관용적이었다. 미8군사령관이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등 이튿날부터 예상외로 사건이 크게 불거지면서 강압적, 폭력적 조사가 시작됐다. 이런 상황에서 성과가 진급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경찰들이 배후색출을 위해 영장 없이 통화내역까지 조회하는 등 불법적인 인권침해를 자행하게 된 것"이라며 "파녀사냥 식의 수사에는 인권유린이 동반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마녀사냥에는 인권유린 동반 마련"

단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스트라이커부대 시위와 관련해 28명이 구속되고 80명이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데다 최근 한총련 간부 46명에게까지 검거령과 소환장이 발부된 상황을 비판하며 "법무부는 청년들을 길들이려 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구속자대책위는 오는 10월 9시 30분 의정부지원에서 열리는 스트라이커 진입시위 관련자 13인에 대한 선고공판에 앞서 9일 미대사관을 출발, 공판이 열리는 의정부까지 도보순례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흥)

네이스 반대·정보인권 사수  
여섯번째 촛불집회  
· 때: 10월 8일(수) 늦은 6시  
· 곳: 홍대앞 걷고싶은 거리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3년 10월 9일(목)  
제 2430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배경내

## "추가 조사단 대신 민간지원단을"

### 인권단체, 이라크 자치·재건 위한 민간지원단 파견 촉구

이라크 파견 정부조사단(아래 조사단)의 조사내용이 "파병을 위한 수순 밟기"라는 비판이 거센 가운데, 8일 오전 국방부 앞에서 '이라크 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아래 국민행동) 주최로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에 앞서 6일 오후 조사 결과 발표 자리에서, 조사단의 유일한 민간 위원인 박건영 가톨릭대 교수가 "파병 예상지 모순에 대한 직접 조사는 45분에 불과했으며 미군 제시 일정과 안내에 따라 움직여 한계가 많았다"고 털어놓아 부실조사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국민행동은 "조사단은 처음부터 파병을 기정사실화하고 그것을 관철하는데 필요한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 간첩"이라며 △정보조작에 대한 국방장관의 공개사과 △허위보고 당사자인 강대영 조사단장 문책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단 파견을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평화인권연대, 장애인이동권연대 등 17개 인권단체와 이라크반전평화팀의 공동선언도 발표됐다. 이들은 조사단이 "식수 90%, 전력 50%가 공급되는 등 안정화 추세로 가고 있다"고 발표한 데 대해 "경제 여건이 나아졌다는 것은 초국적 기업들의 투자 기회 확대를 의미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달 21일 발표된 이라크 경제개혁 조치는 △석유를 제외한 경제 전 분야의 민영화 △외국인의 소유권 100% 인정 △외국기업의 내국인 대우와 투자 제약 철폐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 이라크인들의 공공자산이 이윤을 우선시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통제 아래 놓이는 것은 시간문제였다.

국민행동은 조사단이 "이라크 국민은 미군과 동맹군의 주둔을 반대하면서도

치안확립 때까지는 주둔을 인정하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한 데 대해, 조사단의 민간인 접근이 제한적이었다며 "한국군 파병을 단호하게 반대하는 이라크 주민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달 29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 "경제자유구역법은 유엔 사회권규약 위반"

### 인권단체들, 유엔에 보고서 제출...한국정부에 시정권고 촉구

국내 인권단체들이 지난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경제자유구역법이 국제인권규약을 위반하고 있다며 유엔의 판단을 구하는 한편 한국정부에 시정을 권고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다산인권센터, 평화인권연대 등 4개 인권단체들은 8일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위원회'(아래 사회권위원회)에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와 한국의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제출하고, 사회권위원회가 한국정부에 신속한 권고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번 보고서 제출은 인천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데 이어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앞다투어 경제자유구역 신청에 나서 '전국도의 경제자유구역화'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유엔의 판단 결과가 주목된다.

보고서에서 인권단체들은 경제자유구역법이 △주휴일과 생리휴가 무급화 △파견노동 허용 업종과 파견기간의 대폭 확대 △단결권 제약 △외국교육기관에 내국인 입학 허용 △장애인, 고령자 고용 의무 면제 △환경관련규제 면제와 각종 환경부담금 감면 △특

라크 국민통합운동(UNM)의 알-아시위 부의장은 "이라크의 안정은 이라크인의 몫이지 외국군대가 간섭할 일이 아니며, 미군을 지원하러 오는 군대도 점령군"이라고 밝힌 바 있다.

평화인권연대 손상열 상임활동가는 "여론이 조사단 구성과 과정의 문제점, 모순의 안전성 여부에만 집중돼 있는데, 이라크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군대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이라크의 자치와 재건을 위한 지원 과제를 조사할 민간조사단의 구성과 국가차원의 민간지원단 파견을 요구했다. (강성준)

권충을 위한 의료기관 개설 허용 등으로 외국인투자기업에 갖은 특혜를 부여함으로써, 노동권·교육권·환경권·건강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임금수준이 정규직의 63%에 불과하고 각종 사회보험 적용비율도 50% 정도에 불과한 파견노동을 대폭 확대하도록 한 것, 경제자유구역 내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대폭 제한한 것 등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회권위원회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아래 사회권규약)의 이행감독기구로서, 가입국의 사회권 침해 상황을 통보받을 경우 심사를 거쳐 이에 대한 의견을 해당 정부에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한국정부는 이 규약에 지난 1990년 가입했다.

인권운동사랑방 허혜영 상임활동가는 "사회권위원회는 그 동안 각국 정부가 취하는 무역투자 자유화 관련 정책이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해야 함을 촉구해 왔다"면서 "경제자유구역법이 사회권규약이 규정하고 있는 차별 금지 의무와 후퇴조치 금지 원칙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는 만큼, 올바른 판단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배경내)

<기획연재> 공공부문 간접고용 실태와 대안 ④ <끝>

# "정부부터 비정규직 없애라"

직업상담원 1천8백여 명이 지난 6일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이들은 정부의 노동정책 주무부서인 노동부에 고용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IMF 이후 실업자가 폭증하고 고용안정센터 업무가 대폭 늘어나면서 노동부는 비정규직인 일용잡급으로 직업상담원을 채용했다. 그러나 이들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비해 70~80%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받아왔고,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고용불안에 시달려 왔다. 실업자들의 취업알선, 실업급여 지급, 외국인노동자의 체류·고용확인신고서 발급 등 고용안정센터의 일을 도맡아 왔지만, 정작 자신들은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려 왔던 것. 직업상담원들의 주요한 요구는 기본급 17% 인상과 정규직으로의 전환 등 다른 부문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와 결코 다르지 않다. 노조에서는 노동부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다른 부처의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이번 사태를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차별해소를 위한 우선적 과제

노동부 직업상담원 노조의 파업에서도 드러나듯 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에서부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임금과 노동조건 등에서 심각한 차별을 겪고 있다. 그 동안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노동운동 진영의 요구를 요약하면 "공공부문에서부터 비정규직을 근절하라"는 것이다. 특히 최근 간접고용 형태의 비정규직이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은 올 상반기 전국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민주노총 공공연맹, 인권운동사랑방 등 5개 단체가 '공공부문 간접노동 임금·노동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담은 결과보고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이들 5개 단체는 간접고용 근절을 위해서 우선 △기획예산처와 정부혁신추진위원회의 각종 지침을 통한 구조조정을 중단하고 지자체의 무분별한 민간위탁방향을 철회할 것 △조달청의

물자조달 계약에서 노동력을 사고 파는 용역계약은 제외할 것 △공공부문에서부터 위장노동도급계약 형식의 불법과정을 근절할 것 등을 요구했다. 또 △최저임금은 적어도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선인 70만600원이 확보되어야 하고 △포괄임금제를 비롯한 탈법적인 임금체계를 근절하는 한편 △감시직·단속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의 적용 제외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별 해소한다더니 되레 비정규직 확산

그러나 이처럼 당연한 요구를 정부는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현 정부는 출범 초기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정립'을 공약하고 비정규직을 비롯한 5대 차별 해소를 약속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진행하자 거의 동시에 노동부와 기획예산처가 200개 공공부문 사업장의 비정규직 실태를 조사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정부의 이런 공약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문제는 차별 해소와는 정반대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달 4일 발표한 <노사관계선진화방안>이

바로 그 증거이다. 원론적으로 정부는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주장하면서도 <노사관계선진화방안>에서처럼 지속적으로 노동유연화 정책을 시행하여 비정규직의 확산을 도모하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정부, 정규직 전환 결단 내려야

이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운동 진영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화를 위한 특별기구를 구성하고 비정규직 차별 해소 문제에 사업의 비중을 높이며 정부에 근본적인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연맹 이상훈 조직국장은 "정부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노동운동진영만 매도하고 있다"며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부터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힘주어 말한다.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태도가 곧바로 민간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 기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저임금·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정부의 근본정책이 바뀌어야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노동부내 직업상담원 노조 파업의 해결과정은 정부의 비정규직 문제해결 의지를 확인하는 시험장이 될 것이다. (박래곤)

## 만화사랑방

이동수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3년 10월 10일(금)

제 2431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배경내

## 송두윳이 아니라 '우락'가 문제다

### 국가보안법 전제로 한 송두윳 교수 심판도 변명도 안돼

보수언론과 극우세력들이 연일 송두윳 교수의 '천북 행적'을 하나둘 들추어 내며 그를 '빨갱이', '거물 간첩'으로 몰아세우고 있다. 레드 콤플렉스와 안보상업주의에서 발출을 찾는 이들이 물 만난 물고기처럼 색깔공세에 나서고 그를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지 않는 현 정권의 '이념적 편향'에 시비를 거는 모습은 너무나 익숙하지만 여전히 낯뜨거운 한국사회의 야만을 고백한다.

그러나 지금의 지형을 더욱 혼탁하게 만드는 것은 소위 '송두윳을 위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한다. 그의 '행적'과 '거짓말'에 너무나 당혹스럽다고. 그들은 꾸짖는다. 그가 경계인을 자초하면서도 너무나 북에 깊숙이 발을 담갔다고. 그들은 타이른다. 여유를 갖고 검찰수사 결과를 지켜보자고. 그러면서 애걸한다. 그가 이제 남한을 '선택'했고 사실상 '전향'한 만큼, 우리 사회가 '실패하고 방황하는 지식인' 하나쯤 포용 못해서야 되겠냐고. 경건한 어조로 관용과 성숙한 민주주의를 이야기하지만, '지금 그대로의 송두윳'이 아닌 '자유 대한의 품에 안긴 귀순자로서의 송두윳'을 옹호한다는 점에서 이들 역시 레드 콤플렉스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다.

더 이상 이러한 야만의 칼부림을 두고 볼 수 없다며 그 동안 침묵해 왔던 이들이 말문을 열기 시작했다. 9일 오후 진보네트워킹센터와 '송두윳 교수 사건 교수·학술연구자 비상대책위원회'는 국가보안법과 송두윳 교수 처벌·추방에 반대하기 위한 이슈 페이지(http://freesong.jinbo.net)를 개통하고, 온라인 1인 시위 배너달기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슈 페이지에 1호 글을 게시하기도 한 김규환 씨는 "국가보안법을 찬성하는 자들과 반대하는 자들이 아니라, 국가보안법을 찬성하는 자들과 인정하는 자들이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형국"이라며, 국가보안법에 의한 상흔을 훈장처럼 내세워 왔던 이들이 송두윳 교수에 대한 색깔 덧씌우기에 반대하면서도 바로 그 국가보안법을 전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어이없는 현실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 씨는 또 송 교수에 대한 관용론에 대해서도 "반공주의 파시즘체제의 유물인 국가보안법을 전제로 송 씨를 비판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고 강조한 뒤, "송 씨의 죄가 국가보안법으로 부터 비롯되고 국가보안법이 악법이라면 그의 죄를 인정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왜 그를 동정하고 관용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김종서 교수(배재대 법학)도 "국가보안법이 없었다면 아무런 죄도 되지 않았을 행위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개혁·진보진영이 그의 조선

노동당 가입 사실에 당혹해하고 정치국 후보위원이라는 '설(說)에 충격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국가보안법이 이 모든 상황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강조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또 "그가 설령 조선노동당에 가입하지 않았고 정치국 후보위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사상검증절차는 똑같이 진행됐을 것"이라며, 지금까지도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의 망령으로부터 벗어나야 함을 강조했다.

장호순 교수(순천향대 신문방송학)는 국가보안법이 악법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면서도 "송 교수의 과거 전력이 지금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것도 아니고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닌데, 왜 소모적인 정치 이데올로기 논쟁을 계속하고 있는가"라며 언론과 정치권의 부풀리기를 질타했다. 또 "진보진영을 포함하여 지금 우리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대상은 이 땅을 찾아온 한 지식인이 아니라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이 땅을 떠나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의 생존권"이라고 덧붙였다.

이제 더 이상 송두윳을 위한 '변명'은 필요치 않다. 문제는 송두윳이 아니라 국가보안법의 망령에 사로잡혀 한 인간의 인격을 송두리째 말살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이다. (배경내)

## "업무 효율 위해 학생 정보인권 희생시키나"

### 네이스공대위, 입학처장협 선언 규탄...교육부 관여 의혹 제기

'네이스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네이스공대위)가 교육부에 네이스로의 통일을 촉구한 서울지역대학 입학처장협의회의 어이없는 행동을 규탄하고 나섰다.

네이스공대위는 9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입학처장협의회의 이번 발표는 자기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학생들의 정보인권을 희생되어도 좋다는 발상에

서 비롯된 것"이라며 "네이스의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여 현재 국무총리 산하 교육정보화위원회에서 네이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입학처장협 의회가 특정한 방식으로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 2면에 계속)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전 국토가 노예특구 될 때까지 침묵할 셈인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제3소위원회(차별진정 담당)가 경제자유구역법의 인권침해에 관한 진정을 끝내 각하시키고 제1소위원회(정책 담당)로 이관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인권위의 사회권 보호 의지를 크게 의심케 하고 있다.

제3소위는 지난 5월 26일 '경제자유구역 폐지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가 경제자유구역법의 인권침해 요소와 관련해 제기한 진정사건에 대해 3개월을 넘긴 지난 9월 1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 더구나 대책위가 각하 결정문을 받은 것은 그로부터 약 3주 뒤.

제3소위는 각하 사유로 입법 영역을 진정 조사대상에서 제외한 인권위법 규정을 들고 있다. 경제자유구역법에 대한 진정은 애초부터 제3소위의 조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 이 해명대로라면 결국 제3소위는 진정이 형식적인 요건을 충족시키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만 무려 3개월을 허비한 셈이다.

그러나 제3소위의 더 큰 잘못은 진정 사건이 중대한 인권침해를 야기하는 법·제도와 관련돼 있을 경우, 법·제도 개선권고를 소관업무로 하는 제1소위로 해당 사안을 이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데 있다.

아까운 시간 허비하고 각하만 결정

경제자유구역법이 무엇인가? △파견노동 확대 △단체행동권 제약 △장애인 의무고용 면제 △영리목적의 외국인 교육기관과 의료기관 설립 자유화 등이 법에 규정된 온갖 독소조항들이 사회권 영역의 돌이킬 수 없는 후퇴를 야기할 것은 너무나도 자명하다.

이 중대한 인권 사안을 제1소위로 이관하지 않은 제3소위의 안일한 태도는 인권위의 사회권 보호 의지가 얼마나 빈약한 수준인지를 여실히 드러낸다. 이에 대해 제3소위 유사촌 상임위원은 "경제자유구역법에 의한 인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정책소위(제1소위)에서 논의할 사항이기도 하다고 생각하긴 했지만 최종적으로 이관 결정을 하지

는 않았다"는 무책임한 답변을 내놓았다. "이 정책이 구체적으로 어떤 인권을 침해하는지도 분명치 않고 이 법이 잘 시행될 것 같지도 않았다"는 게 유상임위원의 궁색한 해명이었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해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는 우울한 인권상황에 정작 눈을 감고 있는 곳은 인권위다. 제3소위가 결국엔 각하시킬 진정 처리에 능장을 부리고 있을 동안,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인천은 초국적 기업에게는 투기의 천국으로, 노동자에게는 언제 실업자로 전락할지 모를 위협 속에서 고통스런 노동조건을 감내해야 할 지옥으로 전락해 가고 있다. 또 최근 정부는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대한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공교육 포기예 팔을 걷어붙였다.

경제자유구역 재앙에 왜 눈감나

경제자유구역법에 대한 인권위의 안일한 대응은 상임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상임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직전, 이 법에 대한 인권위의 의견표명을 구하는 인권사회단체들의 '정책 진정'에 대해 '의견 표명 보류'를 결정한 바 있다.

유 상임위원은 "경제자유구역법의 국회 통과가 여야합의로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의 의견표명으로 그 결과가 뒤집힐 것 같지 않았고, 더구나 노동계에서 강력하게 문제제기하지 않았던 상황이었다"며 당시 상임위원회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결국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 입안·이행 시 인권적 관점에서 해당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야 할 인권위 본연의 권한과 책무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하지만 인권위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저버리기는 아직 이르다. 지난 7월 인권단체들이 경제자유구역법에 대한 '정책 진정'을 제출하자, 인권위 정책국이 이 법의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보고서를 제1소위에 제출하기로 결정한 것. 정책국이 보고서를 제출하면 제1소위가 정책권고를 할지 말지를 결

정하게 되는 만큼, 앞으로 제1소위의 행보가 주목된다.

제1소위의 판단은 인권위의 사회권 보호 의지를 판가름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경제자유구역법뿐 아니라 자본의 세계화 속에서 가난한 약자들의 인권을 버릴 끝으로 내몰고 있는 무역·투자 자유화 경제정책들을 향해 이제 인권위가 입을 열어야 한다. (허혜영)

(41면에서 이어짐) 이에 앞서 44개 대학이 참여하는 입학처장협의회는 7일 회장단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정기모임에서 '대입전형에 필요한 학생부 자료를 네이스로 통일해 줄 것'을 교육부에 요구하는 선언을 채택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입학처장협의회는 의사정족수에도 미달되는 소수의 인원만 모인 가운데 벌어진 일이라 비판과 함께 더욱 큰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네이스공대위도 교육부가 입학처장협의회를 앞세워 네이스를 사실상 강행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만일 그러하다면 교육정보화위는 네이스를 합리화하기 위한 한낱 허수아비에 불과하므로, 공대위 참여단체 소속 위원들은 위원회에서의 철수를 심각하게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입학처장협의회는 발표로 정보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인권·교육단체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고 있는 네이스의 시행이 더욱 탄력을 받지 않을까 우려된다. 게다가 교육부가 최근 대학에 진학하지도 않는 학생까지 포함해 해마다 모든 고3학생들의 생활기록부를 전국 대학에 배포하고, 일부 정보는 개인의 동의 없이 병무청에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스스로 개인정보 유출의 주범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네이스 강행으로 개인정보가 교육부로 집적될 경우 더 큰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네이스공대위 오병일 집행위원장은 "최근 윤성식 감사원장 후보의 생활기록부를 유출하는 등 근본적으로 교육부에 정보인권에 대한 철학이 없음이 드러났다"며 "네이스를 계기로 정보인권에 대한 국민적 인식은 높아지고 있는데 정작 정보인권과 관련해 가장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교육부는 인식의 발전이 없어 아쉽다"고 지적했다. (대홍)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 스트라이커 구속자 12명 집행유예

### 의정부지원, 전원 유죄 인정...이영훈 씨는 실형 선고

지난 8월 7일 전쟁 도발을 위한 미 스트라이커 부대의 군사훈련을 저지하기 위해 영평사격장 진입 시위를 벌이다 구속됐던 학생 12명에게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10일 오전 의정부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형사 1단독 이주현 판사는 군사시설보호법과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전쟁도발을 막기 위한 정당한 행동이었다는 학생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나, 초범이며 파괴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반면 당시 취재 도중 시위 가담 혐의로 구속된 이영훈(민중의 소리 시민기자) 씨에게는 "2002년의 시위로 현재 집행유예 상태이며, 병역기피의 죄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선고공판 직후 의정부지원 근처에서는 이날 풀려난 12명의 학생을 비롯하여 100여명의 시민, 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스트라이커 투쟁 구속자 출소 환영대회 및 완전석방 촉구대회'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권오현 회장은 "전쟁을 막아내고 평화를 지켜내기 위한 투쟁을 폭력적으로 규정하는 사법부의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물으며, 이번 판결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집행유예로 풀려난 학생들은 출소인사와 함께 평화를 위한 투쟁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 결의를 밝히는 등 2개월간의 구속에도 주눅들지 않은 당당한 모습을 보여 주위의 환호를 받았다.

9일 미대사관 앞을 출발해 의정부에 도착한 「파병반대, 구속자 전원석방을 위한 도보순례단」의 김진환 단장

은 미국의 부당한 전투병 파병 압력과 한반도 전쟁 위협을 비난하며, 당당한 주권국가로서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한국 정부를 규탄했다.

2003년 10월 11일(토)  
제 2432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배경내

'구속자석방대책위'도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영훈 씨를 포함한 모든 실형선고자와 구속자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했다.

한편, 스트라이커 투쟁과 관련한 또 다른 구속자 김준협, 김기욱 씨에 대한 재판은 계속 진행 중에 있으며, 이날 실형을 선고받은 이영훈 씨 역시 부당한 형량 선고에 맞서 항소를 준비할 예정이다. (양승훈)

## 〈논평〉 송두율을 국가보안법의 제물로 삼지 말라

송두율이 37년만에 찾아온 고국에서 거물 간첩으로 몰려 곤욕을 치르고 있다. 수사가 진행중임에도 반공주의를 절대적 가치로 신봉하는 한나라당의 정형근 의원을 위시한 보수정객들과 보수언론들에 의해 그는 이미 '해방 이후 최대 거물 간첩'으로 낙인찍혀 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국가보안법 앞에만 서면 최소한의 법적 절차마저도 작동이 정지되는 기이한 현상을 보게 된다. 대한민국의 일반 시민들에서부터 고위급 인사들까지 반국가단체인 북한 땅에 수시로 '잠입·탈출'하고, 그 구성원들과 '회합 통신'하고 있는 이 때, 송두율만은 현재의 행위도 아닌 과거의 '친북적' 행위로 국가보안법의 멍에 걸려들었다.

지금 이 땅은 수십 년 동안 '경계인'으로 스스로를 규정한 한 지식인의 고독과 망명자의 설움을 외면하고 있다. 그가 이 땅의 민주화에 기여했다는 사실도, 그가 온몸으로 일구었던 학문적 성과마저 쉽게 잊혀졌다. 국정원은 그의 삶 전체를 부정하면서 오로지 그의 '친북적' 행적만을 수집해 놓은 거대한 파일을 그 앞에 내놓았을 것이다. 세월이 지나 잊어버린 사실마저 하나둘 들춰지는 상황 앞에서 그는 공포에 짓눌리고, 절망하는 힘없는 개인일 뿐이었다.

그렇게 무너져버린 그 앞에 공안당국과 보수진영은 '전향서'를 강요하고 있다. 검찰은 사상을 검증한다며 그의 저서와 논문들을 뒤지고 있다. 이미 오랜 세월 반인권성이 지적되어 공식 폐지된 사상전향제도가 송두율 앞에 버젓이 살아나고 있다. 준법서약제마저 현 정부에 들어와 폐지된 마당에 다시 '전향'이 강요된다.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전쟁을 비롯한 국가비상 시기에조차 침해할 수 없는 절대적 자유라는 사실은 당연히 무시된다. 오로지 송두율이 북한 편에서 남한 편으로 넘어왔다고 선언하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승리를 확인하려는 듯이 말이다. 이처럼 거대한 국가기구가 한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무참히 짓밟고, 그 개인을 벗어날 수 없는 절망과 치욕에 빠지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국가보안법이 지배하는 야만적인 대한민국의 인권 현실이다.

때문에 우리는 송두율을 처벌하려는 공안당국 앞에, 보수 정객들과 언론들 앞에, 한편에 기죽어 선처를 구걸하는 기회주의자들 앞에 당당하게 국가보안법 폐지의 깃발을 들어야 한다. 이제 송두율의 문제는 아직도 야만의 논리에 짓눌려 있는 우리 사회의 문제로 전화되었다. 그래서 다시 외치자. 그에 대한 사법처리를 중단하라. 그를 국가보안법의 제물로 삼지 말고, 자유롭게 하라.

# 장기수들의 미세한 삶의 결 그렸다 김동원 감독의 <송환>, 장기수들과의 10년 인연 담아

장기수들의 삶을 다룬 김동원 감독(푸른영상 대표)의 영화 <송환>이 완성되었다. 지난 92년 우연히 장기수들과 인연을 맺게 된 김 감독은 그후 10년 동안 이들의 삶을 카메라에 담았고, 그 결실이 <송환>으로 맺어진 것이다.

92년 카메라로 처음 그들을 담을 때만 해도 149분 짜리 장편 다큐멘터리가 탄생할지는 몰랐다. 비전향 장기수들의 존재가 사회에 점차 알려지기 시작한 그 무렵, 북과공작원 출신의 조창손 씨와 그의 동료들은 30여년의 옥살이를 마치고 봉천동에 신집살림을 차리기 시작한다. 김 감독도 마침 봉천동에 살고 있어 김 감독과 장기수들은 너나들이로 지내게 되었다. 그들을 만날 때면 김 감독은 습관적으로 카메라를 들었지만 어떤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한다.

김 감독이 이들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고자 결심한 때는 99년 '송환운동'이 불붙던 시점이다. '송환'을 주제로 분단의 역사를 이야기할 요량이었던 그는 당시 장기수들의 인터뷰를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현실은 한 감독의 문제의식보다 한 걸음 더 빨리 다가왔다. 어려워만 보였던 송환이 2000년 이루어진 것이다. 촬영을 시작한 지 벌써 10년이 다 되어가는 그의 앞에는 500개의 테이프가 그를 재촉하고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2001년 평양취재마저 공안당국의 횡포로 좌절된 김 감독은 작품의 방향을 새로 정할 수밖에 없었다.

<송환>은 장기수들과 김 감독이 맺어온 10년의 세월을 정리한 영상일기 와도 같다. 작품은 92년 처음 조창손 씨 일행을 카메라에 담은 순간부터 송환되어 북에서 살고 있는 장기수들의 모습까지 보여준다. 감독이 직접 나레이터로 등장하는 이 영화는 조창손 씨를 포함한 장기수들이 주인공인 동시에 김 감독 자신도 주인공인 셈이다.

영화가 가장 크게 할애하는 부분은 분단의 벽으로 인해 감독 스스로도 낯설게 느꼈던 이들이 보여주는 '인간미'이다. 감독은 10년의 세월동안 겪은

미세한 감정의 결을 영상으로 그려보려고 애쓰며 정권의 폭력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시한다. 특히 비전향보다도 훨씬 더 모진 인생을 살아야 했던 전향 장기수에 대한 시선도 따뜻하고 부드럽다.

25일부터 열리는 '인디 다크 페스티벌'에 폐막작으로 상영된다. (김정아)

## “영장없이 통신자료 요구 안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청원

대검이 수사비밀 유출 방지 명분으로 출입기자들의 통화내역을 조사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총장이 사과하고 재발방지까지 약속한 가운데, 통화내역 조회시 영장주의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청원이 국회에 제출됐다.

9일 민변,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킹, 참여연대가 제출한 청원은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검사장 승인만으로 통신사실확인자료(아래 통신자

료)를 제출 받을 수 있어 검찰의 자의적인 요청이 가능하던 것을 법원의 영장을 발부반도록 하고 △30일 동안 모든 통화내역이 수사기관에 공개되는 통신제한조치의 허용요건과 기간, 적용대상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며 △그 동안 규제 조항이 없었던 '음성이 녹음되지 않는 촬영'도 규율 대상이 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수사기관이 요구하는 통신자료에는 인터넷 사용자 로그자료, 통신기기 위치 추적자료, 인터넷 접속 위치 추적자료 등 남용될 경우 사생활 침해 소지가 높은 자료가 포함돼 있다. 지난 8월에는 스트라이커 부대 진입시위와 관련해 진행된 현장사진연구회 이용남 소장에게 대한 조사과정에서 단순 통화기록이 아닌 한달 동안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내용까지 이용돼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또 다수 사회단체 홈페이지를 호스팅하고 있는 진보네트워킹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시로 통신자료 제출을 요구받고 있지만, 영장이 없을 경우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진보네트워킹센터 장여경 정책실장은 “지난해 5월 이 법의 위헌성을 묻는 헌법소원을 제출한 바 있다”며 “위헌결정이 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어 개정청원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강성준)

### 클릭! 인권정보자료

## 한 장의 시디롬으로 인권운동 10년을 본다 - 「인권하루소식 시디롬」

만든이: 인권운동사랑방/ 2003년 9월/ 가격 10000원

1993년 8월 4일 준비 1호로부터 출발하여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주5일 발행돼 왔던 <인권하루소식>이 모두 모인 시디롬이 발매됐다. 지금까지 과거 인권하루소식의 기사는 분기별 합본호로 묶여 독자를 만나거나 합본호마저 절판된 경우 다시 제본을 떠야했지만, 이젠 검색기능을 갖춘 한 장의 시디롬으로 옛 기사를 쉽게 찾을 수 있게 되었다.

「인권하루소식 시디롬」에는 준비1호부터 2003년 8월 30일 지령 2408호까지 총 1만2740여건의 기사가 담겨있고, 제목·기사·작성자·주제별 검색 기능까지 갖추고 있다. 시기별·주제별 인권 현황을 한 눈에 꿰뚫어 볼 수 있고, 인권운동 10년의 역사를 깊숙이 살필 수 있기에 자료로서의 소장 가치도 높아 한국 인권운동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다. 기록으로 남겨진 기사 하나 하나는 인권현실을 고발할 뿐 아니라 새로운 인권운동의 의제를 만들기도 한다.

「인권하루소식 시디롬」이 만들어지기까지 기사를 쓰는 손, 편집을 하는 손, 프로그램을 만든 손, 기사를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는 손 등 저지 않은 이들의 손을 거쳤다. 이 아름다운 손들의 힘으로 이제 클릭 한번이면 원하는 기사를 마음껏 찾을 수 있게 되었다. ©문의: 02-741-5363 (최은아)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리안)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2003년 10월 14일(화)

제 2433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배경내

## 방글라데시 대사관 급행료 쟁거

### 웃돈 받고 여권 연장..등록 앞둔 이주노동자들 갈취해

주한 방글라데시 대사관(이하 대사관)이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들의 여권을 연장해주며 터무니없는 액수의 급행료를 받아온 것으로 밝혀져, 이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해의 체류자들, 특히 이주노동자들에게 여권 기간의 연장은 생명줄을 잇는 것과 같다. 그런데 이 대사관의 1등 서기관 몰하누딘 씨 등 직원 2명은 국내 불법체류자들의 등록 시한(10월 31일)이 다가오자, 여권 연장이 시급한 자국 이주노동자들의 처지를 악용해 1건당 50-60만원의 급행료를 받아 챙겼다. 대사관측은 여권 연장 업무에 수수료 23,000원과 15-30일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공시해두었지만, 이것이 급행료를 챙기기 위한 구실로 악용됐던 것.

이에 그 동안 피해자들의 사례를 모아왔던 '방글라데시 공동체'(아래 공동체)는 13일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와 함께 대사관 앞에서 규탄집회를 열고 "부당하게 착복한 급행료를 돌려주고 여권 연장 절차를 간소화하라"고 요구했다. 공동체의 일원인 마하부 씨는 "대사관이 업무량이 많다는 핑계로 기간 연장을 미루다가 다급한 이주노동자들에게 급행료를 챙기고 있다"고 할난하고 "이에 대해 재차 항의하자 대사관 측은 의정부에 있는 2명의 이주노동자들을 불법 체류자로 신고하겠다고 겁까지 줬다"며 불법체류 신분으로 서 당하는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들을 둘러싼 비리의 사슬에서 여권 연장시 발생하는 비리는 하나의 고리에 지나지 않는다. 한국 입국에서부터 취업에 이르기까지 이주노동자들은 브로커와 부패한 관료들

을 수 차례 거쳐야 하며, 그 때마다 갖가지 수수료와 알선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이미 감당하기 힘든 빚더미를 지게 되고, 자연히 한국에서 돈을 벌어서 그 빚을 다 갚아야 한다는 절박감 때문에 체류에 노력을 다할 수밖에 없다. 부패한 관료나

## “해 볼 것 다 해보고 남은 건 노상단식뿐”

### 삼성생명 해고자 85명,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해

“엄마를 포함한 85명은 이제 그 기나긴 싸움을 목숨걸고 끝장내려 한다. 부디 아름다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너의 모습을 보고 싶다, 사랑하는 아들아.” 삼성생명에서 18년 동안 근속하다 해고된 김모 씨는 왜 단식투쟁을 시작했느냐는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품에서 유서를 꺼내 보였다.

13일 오전 10시 '삼성생명해고자 복직투쟁위원회'(아래 해복투)는 남대문 대한상공회의소 앞에서 무기한 노상단식농성을 시작했다. 뜻지리와 담요 한 장에 의지해 농성에 들어간 이들은 대열을 예위한 경찰의 연행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제 자리를 지켰다.

98년 10월 삼성생명은 대부분 근속 10년 이상인 여성노동자 1000여 명을 포함해 1723명을 정리해고했다. 형식은 희망퇴직이었지만, 대상자 명단이 나돌고 사직서 표준 양식까지 만들어지는 등 사실상의 정리해고였다. 여기에는 국제통화기금(IMF)이 불러온 경제위기로 3조4천억의 적자가 예상된다. 사측의 위협이 한몫을 했다. 하지만

브로커들은 다시 이러한 악점을 악용해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갈취를 일삼는다. 심지어는 본국으로의 송금조차 브로커를 통해 할 수밖에 없는 이들도 많다.

'부산외국인노동자인권위화모임' 정귀순 대표는 이와 같은 상황이 생겨난 데에는 "우리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에 책임이 있다"고 진단한다. "애초부터 한국 정부가 이들을 임시 방편의 대체 인력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엄격히 실시했다면 이와 같은 비리의 사슬이 생겨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김정아)

회사는 그 해 956억의 흑자를 냈고, 퇴출기업 삼성자동차 직원들이 대거 전입해 이들의 빈자리를 채웠다.

배신당했음을 깨달은 해고자들은 해복투를 결성해 지금까지 만 5년 동안 복직투쟁을 계속해 왔지만 삼성측의 반응은 냉담했다. 2000년 4월에는 사측이 낸 '업무방해금지 가치분신청'이 받아들여져 회사 앞 항의집회에 대해 1인 1회당 5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게다가 같은 해 3월에는 삼성생명 건물에 열살바드르 대사관이, 6월에는 종로2가 삼성타워에 온두라스 대사관이 들어서 항의집회마저 원천봉쇄 됐다. 외교공간 1백미터 내 집회·시위를 금하는 집시법의 독소조항을 악용한 것. 결국 이들이 마지막으로 선택한 것이 노상단식농성이다.

해복투 이명숙 부위원장은 "서울, 부산 등 전국 5개지역 조직이 해고무효확인소송, 지역집회, 1인시위 등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해봤지만 바뀐 것은 하나도 없다"며 "살아서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심정으로 이번 투쟁을 시작했다"고 절박한 심경을 밝혔다. (강성준)

### ● 최은아의 인권이야기 ● 가난한 이들과 함께 하는 인권운동

20대 종교운동을 시작하면서, 왜 운동을 하느냐는 질문에 내가 할 수 있었던 대답은 '인간에 대한 사랑'이었다. 30대 인권운동을 하고 있는 내게 똑같은 질문을 해온다면 아마 같은 대답을 할 것 같다. 하지만 20대에 내가 가졌던 열정이 지금껏 동일한 무게감으로 다가오지는 않는다. 그 열정이 사라진 자리에 무엇이 남았는지 돌아켜 생각해 보면, '집중과 헌신 그리고 성찰'이라는 단어일 것이다.

의욕만 앞섰던 내게 '어떻게'라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일깨워준 곳은 켈커타의 마더 테레사 하우스였다. 20대를 접고 30대로 진입하는 시기, 켈커타에서 경험했던 자원활동은 인간에 대한 사랑이 '어떻게' 발현되는지 배울 수 있었던 계기였다. 자원활동을 하고 있는 친구들에게서, 또한 자원활동가의 손길이 필요한 인도인들로부터.

내가 켈커타에서 했던 일은 칼리가트(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한 집)나 프렌담(갈 곳 없고 병든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의 바닥을 청소하거나, 옷과 침구류를 빨래하거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었다. 날씨가 따뜻하면 양지에 앉아 인도인과 함께 햇볕을 쬐거나 머리에 살고 있는 이를 잡기도 하였다.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야말로 "넓은 바다의 물 한 방울에 지나지 않는 일"이었다.

그럼에도 단순하기 짝이 없는 그 일에서 나는 '운동의 영성'이란 이런 것이겠구나' 하는 막연한 깨달음에 이르렀다. 가진 것 없어도 그날 그날의 빵에 기도를 올릴 수 있는 사람들, 고된 노동을 하면서도 언제나 해맑게 웃으며 유머를 잃지 않던 자원활동가들, 죽어 가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상처 입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수녀님들, 가족과 사회로부터 배척 당해 외로워하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려는 사람들 속에서 나도 비슷하게 그들과 닮아지려는 내 자신을 발견했다. 그러나 할까? 사회운동이란 자기 자신을 희생해야 하며 박해받는 것이라고만 알아왔던 내게 스스로 좋아서 하는 일이란 기쁘고 즐거움을 체험하는 길임을 알게 했다. 사회적 실천과 개인의 행복이 합일되는 순간의 기쁨이 동시에 느껴졌다.

누구라도 그렇듯 살면서 스스로에게 하는 질문이 있을 것이다. 나의 경우에는 인권운동이 가장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있다. 가난한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활의 기초를 제공하고, 아프면 치료받을 수 있고 적절한 주거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러나 앞서 열거한 것들 못지 않게 나를 잡아끄는 것이 있다. "가난한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난이 무엇인지 알아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들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지 않겠어요?" 라고 반문하는 마더 테레사의 울림이다. 사실, 지금 나는 가난하지 않다. 자발적으로 가난을 선택했던 켈커타에서의 삶은 사회변혁과 개인변혁이라는 것이 뗄 수 없는 함수관계에 놓여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었다. 그래서인지 나는 켈커타에서 보낸 시간이 그립다. 사회적 실천이 동시에 개인의 순수한 행복과 합치되었던 순간의 기쁨이 내 몸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일까?

(최은아 님은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입니다.)

### 주간인권흐름

(2003년 10월 6일 ~ 10월 13일)

1. '아만의 뒷'에 걸려든 송두율  
검찰총장, 국회 법사위 국감서 송교수 사건 "한계없이 수사할 것" 밝혀(10.6) / 검찰, "송교수 불구속 기소 뒤 국외 추방" 적극 검토(10.6) / 송교수 변호인, 의견서 통해 "북한 측으로부터 후보위원급 대우받았지만 공식적으로 임명된 적은 없었다"고 주장(10.6) / 송두율 교수 사건 교수·학술단체 비대위, '추방 반대' 의사 밝혀...전향 전제한 수용 방안'에도 반대(10.7) / 독일 뮌스터대 사회학과 교수들, 주한 독일 대사에 서한 보내 "송교수에 대한 지원과 배려" 요청(10.8) / 송교수 기소될 듯...검찰, "사법처리에 대한 내부 이견 없다"고 밝혀(10.10) / 검찰, 송교수 저서·강연 이적성 조사(10.10) / 북한, "그를 우리와 연결시키는 것은 반공화국 대결의식이 골수에 찬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행위"라고 주장(10.11) / 검찰, 송교수 이번 주 중 기소키로...찬양·교무 혐의와 사기미수 혐의 추가 적용 검토(10.12)

2. 국민 눈과 귀, 함부로 못 속인다  
정부 이라크파병 현지 조사 부실논란...모술지역 조사 불과 45분만에 마쳐...보고서 작성과정에서 미군 쪽 자료만 분석해(10.6) / 파병반대국민행동, 국회 장영달 국방위원장 만나 이라크 현지조사단의 부실조사에 대한 공청회 개최와 민간전문가 중심의 2차 정부조사단 파견 촉구(10.6) / 청와대 관계자들, "이라크조사단 추가 파견 검토"(10.7) / 파병반대 '행동' 본격화...청와대 앞 1인시위, 신학자·재야원로 기자회견 잇달아 열려(10.7) / 청와대 파병 여론수렴 나서...'인간방패' 활동가 등 초청해 면담 가져(10.8) / 국방부 출연연구기관 한국국방연구원, 파병 여론몰이 의혹...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문항 파병찬성 쪽으로 편향되게 구성해 논란 빚어(10.9) / 각 대학 파병 찬반 투표 실시...대학생 70~80% '파병반대'(10.10) / '파병반대' 집회 전국서 열려...미국의 이라크 점령 반대, 전투병 파병 반대 등 외쳐(10.11)

3. 앞으로 가는 '정보인권', 뒤로 가는 '전자정부'  
검찰총장, 대검 출입기자 통화내역 조회 '금지령' 내리고 출입 기자단에 사과...수사정보 유출자 색출 명목으로 출입기자의 휴대폰 통화내역을 수시로 조회한 것에 대해(10.6) / 교육부, 학생정보 병무청에 제공한 사실 드러나...주민등록번호 등 7개 정보 '행정편의' 위해 제공(10.7) / 서울지역 입학처장 11명, 교육부에 NEIS 도입 요청...교육부와 '사전교감' 의혹, 전교조 등 인권·사회단체 반발 일어(10.7) / '영장없이 통신자료 요구 안돼'...인권사회단체, 국회에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청원(10.9) / 교육부 <시도별 학생부 발급 현황>에서 학생부의 '용도 외' 발급이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학생부 철저히 관리 요구돼(10.10) / 행자부, 국감서 최근 3년간 주민정보 19억여건 민간 제공한 것 드러나...정보관리 역량, 대책마련 시급해(10.10)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3년 10월 15일(수)

제 2434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배경내

## “전향 강요·사법처리 중단하라”

인권단체들 공동성명 발표...송두율, “노동당 탈당, 헌법 준수”

결국 국정원과 공안검찰이 송두율 교수를 굴복시켰다.

14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송 교수는 “저로 말미암아 생긴 혼동에 관해 어떤 해명이나 사과 보다는 다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균형감 있는 경계인으로 살기 위해 노동당에서 탈당하고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며 △독일국적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제 학문의 출발점이자 미래인 이 땅이야말로 제가 있어야 할 곳입니다... 이 나라의 민주화와 남북한의 화해 협력의 길에 저도 계속 동참할 수 있기를 간곡히 바랍니다”라며 처벌을 받더라도 이 땅에 남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이번 기자회견은 공안검찰 일각에서 “과거 친북 행적에 대한 반성수위에 따라 사법처리 강도를 결정하겠다”는 ‘경고’가 흘러나오는 와중에 개최된 것이어서 송 교수에 대한 기소 또는 추방 위협이 이 날의 기자회견을 이끌 어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이종희 소장은 “송 교수가 사상전향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결국 남한과 북한 중 한쪽을 선택하라는 압박에 어쩔 수 없이 굴복한 것 아니겠느냐”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또 “보통 사람이라면 굳이 밝히지 않아도 될 ‘헌법준수’라는 준법서약까지 강요됐고, 고향에서 학문 연구에 정진하고 싶어 37년만에 귀국한 사람에게 가해진 국외 추방 위협은 독일국적 포기 결정을 낳은 썸”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21개 인권단체는 14일 낸 공동성명서를 통해 송 교수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변호인

입회가 보장되지 않아 피의자의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고 △입증되지 않은 혐의사실이 국정감사 도중 국회의원을 통해 마치 진실인 양 공개되었으며 △여론재판을 통해 ‘간첩’으로 낙인 찍히는 등 “송 교수의 인권은 존제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인권단체들은 또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가 ‘사상을 검증하고’, ‘어느 편에 속하는지를 확인하고’, 또 ‘그것을 밝히라고 강요하는’ 냉전적, 이분

법적 이데올로기를 뛰어넘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검찰의 전향서와 반성문 제출 강요는 “정부당국이 이미 인권침해를 이유로 폐기한 과거의 전향제도나 준법서약제도를 되살리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인권단체들은 이와 함께 송 교수에 대한 처벌은 물론, 모든 사법절차의 중단을 요구했다.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상임활동가는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해 왔던 지식인들마저도 송 교수 문제에 대해서는 공소보류 등 구속을 피할 수 있는 사법절차를 제시하거나 인도적으로 포용해야 한다는 식의 의견을 냈을 뿐”이라고 아쉬워하면서 “한 개인의 양심의 자유마저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의 존재 자체가 거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성준)

## 경찰, ‘영장 제시’ 요구에 폭력으로 응답

의정부 보안수사대, 불법연행에다 항의 학생까지 폭행

경찰이 한 학생을 불법연행하는 과정에서 이에 항의하던 학생들에게까지 폭력을 휘둘러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1일 밤 10시경 경원대학교 학생(4학년) 이종남 씨는 성남시 소재 경원대 정문 앞 횡단보도 근처에서 의정부 및 수원 보안수사대 소속 사복경찰 10여명에게 사지가 들린 채 불법적으로 연행됐다. 당시 이 씨는 광화문 파병반대 촛불집회에 참가한 후 일행과 함께 귀가하던 중이었다. 당시 사복경찰들은 영장도 제시하지 않은 채 이 씨를 강제 연행했으며, 이 씨를 봉고차에 태운 뒤 뒤늦게 피의사실만 공지만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경찰은 당시 이 씨와 함께 있던 김민아(경원대 1학년), 한지희(강남대 3학년 휴학중) 씨가 영장 제시를 요구하며 불법연행에 항의하자, 도리어 폭행을 가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

했다.

당시 상황에 대한 두 여학생의 진술은 보안수사대가 조직폭력배와 다름없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할 정도다.

김민아 씨는 진술서를 통해 “사복경찰로 보이는 12명의 괴한들이 이종남 선배를 끌고 가는 것을 보고... 경찰이면 영장을 보여달라고 항의하자, 이들 중 한 명이 쇠파이프로 뒤에서 목을 짓눌러 넘어뜨리고, 배를 발로 걷어찼다. 괴한에게 신원을 밝힐 것을 요구하자, 나를 어깨에 들쳐 메어 도로로 집어던졌다. 머리를 도로 바닥에 부딪치면서 출혈이 생겼고, 충격으로 어지럼증과 심한 구토 증세를 느꼈다”고 밝혔다. 김 씨의 병원 진단서에는 뇌진탕, 안면부 좌상, 배부경상 등 당시 경찰의 폭력 흔적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함께 있던 한지희 씨도 “두 명의 사복경찰에 의해 상의가 (2면에 계속)

<기획> 테러와의 전쟁, 피 흘리는 인권 ①

세계를 휩쓴 광기, '테러와의 전쟁'

국정원이 또다시 인권을 불모로 자신의 권한만 강화하는 테러방지법을 추진하고 있다. (인권하루소식)은 전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테러와의 전쟁'의 가공할 위협과 테러방지법안의 문제점을 총4회에 걸쳐 살펴본다. (편집자주)

2001년 9월 21일 이집트 출신 물리학자 아메드 알레나니 씨는 미국 뉴욕 거리에서 경찰에 체포돼, 테러 연루 혐의를 받고 이후 5개월 동안이나 감옥 신세를 지야 했다. 그의 차에 있었던 세계무역센터 사진 2장이 그가 테러용의자로 몰린 이유. 미 수사당국은 그가 테러에 연루했다는 증거를 끝내 제시하지 못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 위치가 밝힌 이 사례는 9·11 이후 '테러와의 전쟁'이 낳은 수많은 인권침해 목록 중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에서 9·11 이후 테러 용의자로 몰려 구금된 사람은 자그마치 1천2백 명 가량에 이른다. 이들 대부분은 중동 혹은 동남아시아 출신 외국인들이었다. 쿠바 관타나모 만 미군 기지에 구금된 650여명의 존재는 '테러와의 전쟁'이란 이름 하에 벌어진 가혹한 인권침해의 대명사로 꼽힌다. 미 정부는 아프간 전쟁 포로 혹은 알 카에다와의 연계 혐의로 갇혀 있는 이들에게 제네바 협정 적용을 거부했을 뿐 아니라, 미국 사법관 할권(혹은 영도) 밖이라는 이유로 미국 법률이 보장하는 공정한 재판에 대한 권리까지 강그리 무시했다.

'테러와의 전쟁'에서 내국인도 자유로울 수 없다. 미 정부가 대테러 명분으로 뚜렷한 혐의도 없는 평화운동가나 시민단체 회원 등의 명단까지 비밀리에 만들어 이들에 대한 공방 보안검색을 더욱 철저하게 하도록 해 왔다는 사실은 그 단적인 예다.

인권탄압의 법제화, 반테러법

이러한 인권침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들은 9·11 이후 쏟아진 각종 반테러 법률과 조치들이다. 미국은 9·11 직후인 2001년 9월 13일 테러퇴치법을 시작으로 10월 25일 페트리어

트법을 통과시켰다. 곧이어 11월 13일 조시 부시 미 대통령은 행정명령으로 테러용의자에 대한 특별 군사법정의 설치를 발표했다. 페트리어트법은 수사 당국이 테러 용의자를 언제든지 압수수색, 구금, 추방할 수 있도록 했고, 은행 기록과 전화 및 인터넷에 대한 감청권까지도 확대시켰다. 나아가 현재 미 정부는 비밀정보기관과 연방 수사기관의 권한을 강화하는 '국내안전강화법안', 이른바 페트리어트 II를 입안해 놓은 상태다.

영국에서도 2001년 12월 새로운 반테러법이 통과된 후, 테러 용의자들은 기소나 재판 없이 구금되었다. 휴먼라이츠 위치는 올해 3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영국 경찰이 9·11 이후 명백한 혐의가 없는데도 특정 인종·민족·종교 공동체를 표적 삼아 그들을 마구잡이로 체포했고, 그 숫자가 3백 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인도에서는 "기존 법으로 충분하고 테러방지법은 불필요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도 무시한 채 2002년 3월 테러방지법이 제정됐고, 내부의 정치적 반대자와 종교적 소수자, 달릿(불가촉천민) 등이 테러방지법의 희생자가 되고 있다고 휴먼라이츠 위치는 말한다.

2003년 3월 발표된 국제인권연맹(FIDH)의 보고서에 따르면, 반테러법이 새로 통과된 다른 나라들에서도 난민과 이민자의 권리 침해, 정보기관의 권한 강화 등 자유권에 심각한 제약이 가해지고 있다.

'테러와의 전쟁' 최대 수혜자=정보기관 각국의 반테러법 혹은 조치들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경향은 △정보기관의 강화 △외국인의 지위 및 권리의 약화 △모든 사람의 자유 축소로 압축된다. 사적이고 내밀한 공간은 전방위적인 감시의 위협 하에 놓이게 됐고, 국가기관의 정보 수집, 조사 활동은 한층 강화됐다. 비밀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의 분리도 점차 사라지고 있다. 각국의 정보기관들은 9·11이 빛어낸 세계적 공안정국을 자신들의 권

한 강화의 계기로 심분 활용한 것이다. 그리고 '테러방지'는 인권침해를 정당화하고 정치적 반대자를 탄압하는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

이에 대해 이계수 교수(울산대 법학)는 "우리가 귀 따갑게 들어온 안보논리가 국가보안법과 연계되면서 정치적 표현과 활동을 제약했듯이, 미국의 안보논리는 '반테러법'과 결합하면서 외국인·정치적 소수자의 인권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주영)

(이면에서 이어짐) 찢어져 상체 일부가 드러나는 수치를 당해야 했고, 맥살이 잡힌 채 끌려 다니며 복부를 구타당하는 등의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도 모자라 두 여학생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해 성남 중부경찰서로 연행, 다음날 아침 7시까지 치료도 받지 못하게 하는 상태에서 조사를 벌였다. 두 사람은 13일 성남 중부경찰서를 상대로 경찰폭력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경기도경찰청 관계자는 "이 씨를 연행 과정에서 몸싸움이 일어나 두 여학생을 밀쳤던 것일 뿐으로 알고 있다"며 폭행사실을 부인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장경욱 변호사에 따르면, 이종남 씨 역시 연행 도중 다리에 찰과상을 입었고, 경찰서로 끌려가는 도중 봉고차 안에서 경찰의 반말과 욕설에 항의하다 따귀를 맞아 입안이 터지는 등 폭행을 당했다. 장 변호사는 "경찰이 이 씨가 묵비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병원치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이 씨는 스트라이크 부대 시위 배후 조종, 이적단체(한총련) 가입 및 이적표현물 소지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으며, 14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이 확정된 상태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경원대 총학생회는 지난 12일 의정부 보안수사대를 항의방문한 데 이어 13일부터는 서울 서대문 경찰청 앞에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2시간 동안 경찰폭력 규탄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의정부 보안수사대는 올해 5월과 7월에도 적법절차를 무시한 채 경원대 학생 3명을 강제 연행한 사례가 있어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양승환)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3년 10월 16일(목)

제 2435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배경내

“요금인상 이전에 사납금제 철폐를”

택시노동자들, 건교부 요금인상 계획 '사기극'이라 맹공

최근 택시업계와 건설교통부가 택시요금 인상 등에 관한 합의 내용을 발표한 가운데, 택시노동자들이 "이는 택시 노동자와 국민에 대한 사기극"이라고 규탄하고 나섰다.

지난 7일 택시사업자 단체와 건설교통부 관계자로 구성된 운송업체도개선협의회는 연간 대당 378만원에 이르는 택시회사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향후 1년간 유류세 인상분을 100% 보조하고 △2004년과 2006년 각각 20%대 요금인상을 단행해 장기적으로 택시를 고급교통수단으로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15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아래 민주택시연맹) 구수영 위원장은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3천여명의 전국 택시노동자들이 모인 가운데 열린 총력투쟁 결의대회에서 "택시요금을 인상하고 사업자에 대한 정부지원을 늘린다고 해도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에는 도움이 안되며 도리어 시민들의 부담만 늘릴 뿐"이라고 주장했다. 과거 택시요금 인상이 이루어질 때마다 사납금이 인상됐고, 유류비의 일부는 노동자가 부담하는데도 유가보조금은 회사가 고스란히 챙겨 노동자들의 부담만 늘어났다는 것. 결국 요금인상으로 서비스를 향상시킨다는 정부의 정책은 노동자와 시민의 주머니를 터는 대신 사업주들의 배만 불러온 셈이다.

이에 대해 민주택시연맹은 사납금제의 완전한 철폐를 위한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아래 운수법)의 전면 개정만이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운수법은 사납금제가 아닌 전액관리제의 시행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시행령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과 감차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의 경

우처럼 택시회사의 95%가 사납금제를 유지하는데도 실제로 처벌되는 경우가 없어 모법에 명확한 금지 규정을 삽입하지는 것. 이에 더해 민주택시연맹은 유류비를 운전자에게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의 신설도 요구했다.

한편, 이번 요금인상 결정의 근거가 된 적자 분석이 조작됐다는 의혹도 민주택시연맹은 제기했다. 지난 8월초 실시된 용역조사가 △그 동안 택시사업조합의 용역을 도맡아온 한국산업경영연구소에 의해 실시돼 공정성이 의심되고 △현장실사도 없이 업체 10%의 재무제

국제엠네스티, "테러방지법 제정 중단" 촉구

비밀정보기관 국정원 권한 강화·외국인 추방권 등에 우려 표명

테러방지법의 재추진이 국내 인권단체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대표적 국제인권단체인 국제엠네스티도 테러방지법의 제정이 인권침해를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입법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제엠네스티 국제사무국은 지난 10일 공개성명을 통해 "한국정부가 가입한 국제인권조약들의 내용에 어긋나는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의 제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지난해 4월에도 비슷한 내용의 성명을 발표해 테러방지법 제정의 위험성을 꼬집은 바 있다.

국제엠네스티는 테러방지법 수정안에도 과거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들에 책임이 있는 비밀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확대시키는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는 점에 주목하면서 "인권침해 소지를 가중시키는 국가정보원 같은 기

표만을 조사했으며 △인간비가 과도하게 산정됐고 △유류비도 회사가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계산됐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렇게 적자를 호소하는 사업주들이 실제로는 1인 1차제나 지입제, 도급제 등을 도입해 이득을 챙기고 있는 현실도 비판대에 올랐다. 1인 1차제는 기존의 1일 2교대 방식과 달리 교대 없이 하루는 사납금, 하루는 도급 입금을 하도록 해 매일 10시간 이상 일해도 노동자의 한달 수입이 150만원에 못 미친다. 또한 택시회사는 도급업자들에게 놓고 있는 차량을 빌려주고 매달 한 대당 약 220만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맹호택시노조 최태하 위원장은 "사업주들이 도급제를 이용해 노조의 처우개선 요구를 피해가면서 안정적으로 수입을 올리는데도 적자 타령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강성준)

관에 확대된 권한을 부여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말 것"을 한국정부에 촉구했다.

국제엠네스티는 또 테러방지법에 따라 산하에 대테러센터 등 국가정보원이 외국인 추방 요구권까지 확보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이 경우, 테러리스트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외국인들이 난민인정심사를 받을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박해의 우려가 있는 곳으로 추방될 위험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국제엠네스티는 "테러방지법을 비롯한 국가안보 관련 입법으로 인하여 외국인의 비호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고, 비호신청인이 공정한 절차에 따라 난민 인정심사를 받지 못한 채 추방당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나아가 국제엠네스티는 '테러와 관련하여 허위신고 및 허위사실 유포 등의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안 13조에 대해서도 "실수나 착오" (2면에 계속)



# 극우언론 '송두울 전향 공세, 갈수록 점입가경' "철저한 전향" 일제 촉구...헌법·국제인권법 깡그리 무시

극우언론들의 야만적인 '사상전향 공세'가 갈수록 도를 더해가고 있다. <조선>, <중앙>, <동아> 등 3대 극우언론과 <세계일보>는 일제히 15일자 사설을 통해 송두울 교수의 지난 14일 기자회견 내용으로는 '성에 차지 않는다'고 거품을 물며, 송 교수의 '철저한 전향'을 촉구했다. 이들은 '전향하지 않은' 송 교수를 '포용'하는 것이 마치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인 양 호들갑을 떨었지만, 사실상 힘으로 개인의 사상을 강제로 변화시키겠다는 것이야말로 우리 헌법이 보장한 사상·양심의 자유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이들의 태도는 극히 이중적이었다.

<조선일보>는 「정부는 '경계인'을 대거 만들 작정인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자신의 친북 활동에 대해 한마디 사죄도 하지 않은" 송 교수를 처벌하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질서는 스스로 와해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엄포를 놓았다. 송 교수에 대한 처벌 수위가 과연 우리 법질서를 좌지우지할 만큼 중대한 사안인지에 대한 의문은 제쳐두더라도, 과거 법질서를 철저히 무시하고 내란·학살을 자행했던 전두환·노태우 씨에 대해서는 그토록 '국민통합을 위한 관용과 사면'을 역설해 왔던 이 신문이 유독 송 교수에 대해서만 법질서를 위해 철저한 반성과 전향을 '선처'의 필수요건으로 주장하는 것은 지극히 일관성을 상실한 것이었다.

또한 <조선일보>는 최근 노무현 대통령이 현실의 변화와 송 교수에 대한 포용 등을 언급한 데 대해 "노 대통령의 이런 발언을 대하는 국민들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어떤 이념적 잣대로 살아야 하는지 혼돈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의 이름'을 빌어 현 정부를 압박했다. 그러나 이는 대통령을 '이념과 정신의 아버지'로서 떠받드는 국가구조, 즉 민주공화국과는 정반대의 국가질서를 추종하는 이 신문의 가부장적·반민주적 사고구조에 대한 고백성사일 뿐이었다.

<중앙일보>와 <세계일보>는 여기에

서 한발 더 나아가 아예 송 교수의 '사상전향'을 직설적으로 촉구하고 나서는 폭력을 서슴지 않았다.

<중앙일보>는 「송두울 씨 전향의사 없나」라는 반인권적 제목의 사설을 통해 송 교수가 노동당 탈당 사유로 '균형감 있는 경계인의 삶'을 짚은 것은 "몸은 한국에 살면서도 생각만큼은 여전히 북과 남을 넘다들겠다는 것"이라며 "송 교수가 이 땅에서 살고 싶다면...우리의 체제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고언(?)을 아끼지 않았다. 철저하게 '남'을 택하지 않는 '경계인'은 받아들여질 수 없음을 경고한 것이었다.

<세계일보>도 송 교수가 "대한민국 헌법 준수를 다짐했다 해서 30년 이상의 반한-친북-이적행위가 간과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노동당 탈당이 곧 사상 전향이 되진 않는다"면서 "전향 없는 그를 과연 포용해야 하는가"라고 되물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세계일보>가 과연 '통일교' 신도들이 다른 종교교로의 전향을 강요당하는 일이 생길 때 입을 닫고 있을지 의문이다.

<동아일보> 역시 "법과 국민이 그의 잘못을 용서하고 포용하기에는 과거 행

적에 대한 인식과 반성이 여전히 미흡하다"며 과거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상전향제도를 이 땅에 도입한 일제에 부역했던 신문답게 오늘날까지 전향제도를 충실히 계승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 헌법 교과서는 양심의 자유에 대해 '어떠한 이유로도 국가가 간섭할 수 없는 영역'이자 '국가와 개인의 대치관계가 발생했을 때 그 개인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벽'이라고 가르친다. 또한 국제인권기준은 '행위'를 처벌할 수는 있어도 개인의 신념을 번복하게 하거나 자신의 신념과 어긋나는 법 준수 의사를 고백하게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말한다. 그러나 송 교수는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겠다는 의사를 고백하도록 '강요'당함으로써 이미 사상·양심의 자유를 침해당했다. 그에게 다시 더 철저한 '전향'을 강요하는 것은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야만적 폭력을 계속 휘두르는 것에 다름 아니다. (배경내)

(☞이면에서 이어짐) 또는 정신질환자가 허위신고를 한 경우 등의 상황에 대한 보호장치가 거의 없고 "시민사회의 모든 통신수단에 대한 정부의 감시·감독을 강화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배경내)

## 만화사랑방

이동수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3년 10월 17일(금)  
제 2436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배경내

## 언론노조, 칼 바람 속 철야농성

### 노조탄압·임산부에 술 강요 등 스포츠조선 사태 해결 촉구

전국언론노동조합(아래 언론노조, 위원장 신학림)이 스포츠조선(사장 하원)내의 성폭력 사건 등과 관련해 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언론노조는 지난 15일 프레스센터 앞에서 최근 스포츠조선 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하사장의 공개사과 △성폭력 사건 책임자문책, 재발방지 대책 수립 △피해자 보상 등을 촉구하며 무기한 철야농성을 전개하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노조측에 따르면, 회식자리에서 사측 고위 간부인 모 국장이 임신 8개월인 조 씨에게 "술은 뱃속에서부터 배워서 나와야 한다"며 계속 술을 강권한 것. 이에 조 씨가 거부했지만 모 국장은 조 씨가 술을 마셨는지까지 확인했다. 조 씨는 진술서를 통해 "모 부장은 회식자리에서 여직원들을 모 국장 옆에 앉으라고 강요를 여러 차례 하였고 술을 거부하는 여직원들에게도 억지로 술을 권하"었다고 증언했다. 또한 회식 후 여직원들에게 노래방에 같이 갈 것을 요구하고, 노래방에서는 여직원들에게 과도한 신체접촉을 하는 등 일상적으로 성폭력을 일삼았다.

사측의 횡포는 계속됐다. 여성 조합원들이 사측의 부당한 행위를 막고자 공개적으로 부서장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려고 하자 이를 문제삼으면서 수차례에 걸쳐 사과와 징계를 요구하는 등 이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해 온 것. 이로 인해 한 여성 조합원은 급성위염과 전신쇠약으로 약 2주간 입원치료를, 임신 중이던 조합원은 병원에서부터 "조기 분만이 있어 절대안정을 요한다"는 진단을 받기에 이르렀다.

이에 언론노조 스포츠조선지부(위원장 이영식)는 하 사장의 사과와 책임자 문책 등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또한 가해자로 지목된 모 국장 역시 "성희롱" 사건 등은 조작된 것"이라며 도리어 스포츠지부가 발표한 성명서 내용을 문제삼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여기에 사측의 계속되는 부당노동행위는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노조측은 지난해 8월 하사장(전 조선일보 간부)이 취임한 이후 150여명에 달했던 조합원은 1백여명으로 줄어들었다고 밝

<기획> 테러와의 전쟁, 피 흘리는 인권 ②

## 테러방지법이 약속하는 '공포사회의 테러'

# 2004년 12월. 이라크에서 장기전의 늪에 빠진 미국은 한국의 전투병 추가파병을 요청하기 위해 럼스펠드 국방장관을 다시 한국에 파견했다. 럼스펠드가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한국인 평화운동가 한 사람이 '이라크 침략과 파병 압력 중단'을 외치며 그를 향해 페인트 풍선을 던졌다. 주요 외국인사의 신체에 위협을 가했다는 이유로 그 평화운동가는 '테러리스트'로 둔갑해 처벌을 받았다. 그로부터 1년 후, 그가 속한 단체는 우연히 국정원 산하 대테러센터가 자신들의 전화와 이메일은 물론 각종 활동까지 사찰하고 있음을 알게 됐다.

#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정책에 맞선 인간방패 활동으로 평화운동의 대명사로 떠오른 '국제연대운동'. 2004년 8월, 이 단체 활동가들은 걸프전과 이라크전에서 맹위를 떨친 미

했다. 사측이 인사와 고용불안을 이유로 노조탈퇴를 종용하고 있으며 조합원을 부당 전환배치하는 등 공공연히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영식 위원장은 "하 사장 뒤엔 거대한 '조선일보'가 있다"며 "조선일보측이 절대 노조에는 질 수 없다는 입장인데다가 사안의 파급력을 우려해 노조를 더욱 옥죄고 있다"고 주장했다. 언론노조가 이번 사태에 대해 방성윤 조선일보 사장에게 직접적인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것도 바로 이 지점 때문이다.

앞으로 언론노조는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철야농성을 계속하는 한편 조선일보 사옥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또한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노동부와 여성부 및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등 투쟁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대홍)

국의 열화우라늄탄이 일본으로 대량 수출된다는 정보를 입수, 일본 근해에서 수송선 주변을 돌며 무기거래 반대 뱃목시위를 벌였다. 이 단체 활동가들이 '2005 서울 국제평화회의' 참석차 한국에 들어오려고 하자, 대테러센터는 테러의 위험이 있다며 이들의 입국을 금지시켰다. 이들의 뱃목시위가 전쟁 억제와 국방이라는 '평화적 목적'의 핵물질 수송을 방해한 테러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으로 유학 온 아흐마드. 그는 요즘 수상한 사람들이 미행을 한다는 느낌을 계속해 받고 있다. 전화기의 감도 떨어졌다. 아시아 정상회담의 서울 개최를 열흘 앞둔 어느 날, 난데없이 강제출국 명령이 떨어졌다. 그가 테러단체로 규정된 '제마 이슬라미야'와 관련이 있다는 알고당도 않은 이유였다. 하지만 (☞2면에 계속)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학원의 돈벌 자유에 외면당한 청소년 인권

0교시 수업, 그리고 정규 수업 이후 야간자율(반강제)학습. 이 모든 학교 수업을 마치고도 집으로 가지 못하고 밤늦게 학원으로 향해야 하는 청소년들의 삶은 고단하기만 하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청소년들의 고단한 삶에 두 눈을 감고 입을 단아버렸다. 국가인권위가 학원교습시간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진정사건에 대해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은 채 각하해 버린 것.

지난해 6월 국무조정실의 규제개혁위원회(아래 규제위)는 "충북, 서울 등 5개 교육청에 학원교습시간을 규제하는 조례 규정은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다"며 이 규정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에 따라 충청북도 교육감은 학원의 교습시간을 오전 5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제한하는 규정(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의교습에관한조례 제4조 제1항)을 삭제한다는 조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하지만 같은 해 10월 교사인 유모 씨가 충청북도의 이 같은 조례 개정이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진정을 인권위에 내면서 인권위의 결정에 눈과 귀가 물렸다.

#### 학원시간 규제 해제는 돈벌이 위한 것

밤늦게까지 행해지는 학원교습을 제한하지 않을 경우 입시위주의 잘못된 교육열 속에서 청소년들에게 돌아올 인권침해는 명약관화한 일. 청소년 단체와 관련 전문가들은 학원 교습시간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여가 시간 뿐 아니라 수면 시간까지 대폭 줄어들게 해 청소년의 건강을 해칠 수 있으며, 늦은 시간에 유해환경이나 범죄에 노출되어 안전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의견을 인권위에 개진했다. 또한 부모가 아이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밤늦은 시간에 학원으로 내몰 가능성이 있고, 학원 운영자가 교육열을 악용해 이익을 챙기겠다는 속셈이 들어있는 상황에서 학원교습시간 제한규정의 삭제는 성인들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 밤늦게 학원 다니는 게 선택?

그러나 지난 13일 전원위원회에 참석한 인권위원들은 청소년 인권에 대한 몰이해, 그 자체였다. 김오섭 비상임 위원장은 "공부할 기회 자체가 인권 침해라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밤늦게 학원을 다니는 것은 "선택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 "(학원시간을 규제하려면) 교육방송도 12시 이후에는 방영되지 말아야 한다"는 궤변을 늘어놓기도 했다. 유현 상임 위원도 "일률적으로 몇 시 이후에 학원교습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

(이면에서 이어짐) 그에겐 해명할 기회도,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도 주어지지 않았다. 아흐마드 씨의 사건을 접수한 한 인권단체는 그가 테러행위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대테러센터의 행위를 인권침해로 비판하는 글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대테러센터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이 인권단체의 대표를 감옥으로 보냈다.

# 대통령 선거와 국제안보연례회의를 동시에 앞둔 2007년 가을, 대테러센터는 테러의 위협이 높으며 정부중립성과 공화, 주요 지하철역 등에 경찰 특수부대를 배치했다. 며칠 후에는 시설보호 인력이 부족하다며 군대까지 동원해 오가는 시민들의 가방을 뒤지고 '수상한 인물'들을 현장에서 마구잡이로 연행하는 등 사실상의 '계엄상태'가 초래됐다. 광화문역에서 대테러센터의 직원에 의해 부당하게 연행돼 영장도 없이 구금된 채 강압적인 수사를 받았던 김종현 씨는 사흘만에야 풀려날 수 있었다. 김 씨는 가해자를 고소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하려고 했지만, 자신을 연행하고 수사한 대테러센터 직원의 이름조차 알 수 없었다. 이들의 신분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상은 최근 국정원이 추진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을 경우,

다. 근로청소년의 경우 그 시간 이후 교육이 가능해야 하지 않은가?"라며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인권위원들의 '주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조미경 비상임 위원장은 "규제위가 조례 삭제를 권고한 마당에 같은 국가기관인 인권위가 조례를 유지하려고 권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할 인권위원의 권한과 책임을 스스로 포기했다. 결국 인권위는 "상위법이 없는 상황에서 조례 개정은 입법사항으로 인권위 사안이 아니다"라며 진정을 각하했다.

회의 시간 어디에도 청소년 인권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국민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자 하는 행보는 찾아볼 수 없었다. (김영원)

우리에게 '약속된 공포사회'의 모습들이다.

현 테러방지법안은 △항공기의불법납치억제를위한협약등 9개 국제협약이 범죄로 규정하고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테러'로 규정하고 △국정원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설치해 각종 대테러활동의 기획·지도·조정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센터의 장인 국정원장이 의심스러운 외국인에 대한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그의 추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군·경 특수부대의 출동과 시설 보호·경비를 위한 군병력의 동원이 가능도록 하며 △센터의 직원들이 테러와 관련한 허위사실의 신고 또는 유포 등을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이 '테러'의 개념을 국제협약으로부터 끌어오고 있기는 하지만, 그 개념이 여전히 포괄적·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아 시민과 민간단체의 정당한 활동마저 '테러행위'로 규정될 위험성이 높다. 또한 국정원에게 전체 사회에 대한 일상적인 감시권과 광범위한 수사권, 외국인 추방 요구권까지 부여함으로써, '공포사회'를 지배하는 빅 브라더가 될 수 있도록 했다.

테러방지법이 제정될 경우, '테러의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전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가 우리 사회에서도 그대로 재현될 수 있다. (배경내)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리안)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2003년 10월 18일(토)

제 2437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배경내

## 어제는 배달호, 오늘은 김주익

###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 '손배·가압류' 굴레에 목매 자살

지난 1월 두산중공업 배달호 씨를 죽음으로 몰고 갔던 손배·가압류가 또 하나의 목숨을 앗아갔다.

17일 오전 9시, 한진중공업노조 김주익 위원장이 129일째 홀로 고공농성 중이던 35미터 높이의 지프크레인에서 목을 맨 채 발견됐다. 현장에서 발견된 9월 9일자 유서에서 김 위원장은 "이번 투쟁에서 우리가 패배한다면, 어차피 나를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나 한사람이 죽어서 많은 동지들을 살릴 수가 있다면 그 길을 택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며 오래 전부터 죽음을 각오했음을 드러냈다.

한진중공업은 지난해 3월부터 '인력체질개선'이라며 전체 노동자 2800명 가운데 25%인 650여 명을 강제사직 시켰고, 이때부터 시작된 2002년 임단협 투쟁은 해를 넘겨 지금까지 계속돼 왔다. 올 6월 노동부 중재로 임금교섭과 해고자 복직, 손배·가압류의 원만한 처리 등이 잠정 합의됐지만, 사측의 불이행으로 물거품이 됐다. 이에 김 위원장이 홀로 크레인 위로 올라가 항의 농성을 시작하자, 7월 22일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은 전면파업으로 화답했다.

하지만 이달 2일 사측의 고소로 노조 간부 6명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사측은 파업으로 인해 300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노조에 대해 150억원 상당의 손배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13일에는 한진중공업 마산특수선지회 조합원 180명에게 가정통신문을 보내 미복귀 조합원 모두에게 개별 손해배상을 문젯다고 으름장을 놔다. 이미 91년부터 2002년까지 6차례에 걸쳐 조합원 113명에게 18억 원의 손배소송이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이다.

배달호 씨 분신 이후 정부는 3월 노동관계 장관회의를 통해 '손배·가압류'를 자제시키고, 법·제도적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신중 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 후에도 운송하역노조, 군모닝한주, 인천지하철 등에서 새로 손배·가압류가 진행됐고, 철도파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75억의 손배소송을 내 지탄을 받았다. 10월 현재 민주노총 산하 48개 사업장이 1727억원의 손해배상과 가압류의 굴레에 묶여 있다. (강성준)

### 〈논평〉 유엔안보리 결의안과 이라크 점령군 파병

오는 20일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 앞서 노무현 대통령이 '한국군 파병'이라는 선물을 미국에 안겨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세계 각국에 미국의 이라크 재건 부담을 분담시키기 위한 결의안이 극적으로 통과됐다. 곧이어 안보리 결의안까지 채택된 마당에 파병 결정을 미룰 명분이 없다는 등 파병 여부의 조기 결정을 압박하는 발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18일 오전 대통령 주재로 이라크 결의안 채택과 관련한 정부의 대응방향을 논의하게 될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에 온 국민의 눈과 귀가 쏠리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는 이번 이라크 결의안이 세계 각국에 미국이 파병 압력의 수위를 높이는 구실로도, 우리 정부가 추가 파병을 정당화하는 명분으로도 결코 사용될 수 없음을 거듭 분명히 하고자 한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통과되었다고 해서 '침략전쟁'이 갑자기 '정의로운 전쟁'이 되는 것도 아니요, 이라크에 파병될 한국군이 '침략군'에서 '해방군'으로 탈바꿈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더구나 이번 결의안은 미국의 일정한 양보(?)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침략전쟁을 추진해 준 것이라는 점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결의안에 따라 구성될 다국적군은 여전히 침략군인 미군이 이끌게 된다. 이라크의 주권을 언제 제 주인에게 돌려줄 것인지, 다국적군의 군정 종식이 언제까지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결의안은 침묵하고 있다. 유엔의 역할을 강화한다지만 구체적 계획을 찾아볼 수 없다. 이번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지지는 않았지만 러시아와 프랑스, 독일이 파병과 재정지원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한 것도 '이라크 전쟁의 원죄'를 의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처럼 대규모 파병 압박을 받아온 파키스탄이 결의안 통과 직후 미국의 점령은 계속해서 폭력을 불러올 것이라며 파병 거부 의사를 확실히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우리는 "미국을 도우러 온 군대도 점령군"이라는 이라크인들의 정당한 분노에 주목해야 한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미군의 무차별 총격과 마구잡이 연행, 식량과 의약품 부족으로 울부짖고 있는 이라크인들의 얼굴을 기억해야 한다. 이라크에 군대를 더 보낼 것이 아니라 이라크에서 미군을 철수시켜야 한다.

# 검찰의 '핸드폰 문자메시지' 불법 감청 재확인 인권단체들, "압수수색영장으로 메시지 취득은 범 위반"

검찰이 '통신제한조치 허가 영장'도 없이 압수수색검증영장만으로 피의자의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불법 감청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17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7개 인권사회단체는 이 같은 검찰의 행위를 강력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불법적 관행의 즉각적 개선을 촉구했다.

인권사회단체들은 지난 14일에도 스트라이크 부대 진입시위와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불법 감청이 자행됐음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은 '영장을 갖춘 정당한 집행'이었다며 도리어 단체들에게 강력 항의했다. 그러나 단체들이 재확인한 결과, 수사관은 압수수색검증영장으로 피의자 이영훈 씨

(민중의 소리 시민기자)의 핸드폰을 압수한 뒤, 통신회사를 찾아가 그의 문자메시지 내용을 출력해줄 것을 요구해 이를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인권사회단체들은 이날 반박성명서를 발표하고 "검찰이 발부 받은 영장은 '압수수색검증영장'이었고, 이것은 피의자의 핸드폰을 압수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것일 뿐,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에 해당하는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취득하는 데는 사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당사자 동의 없이 감청설비를 이용해 통신의 문언과 부호를 얻으려면 통신제한조치의 종류와 대상, 범위, 기간, 방법 등을 기재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체들은 △핸드폰 압수 시 문자메시지나 통화내역 열람은 불법인 만큼 압수 시 핸드폰의 배터리를 분리 보관하는 내부지침의 마련 △수사기관에 의해 남용되고 있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출요청을 법원의 영장에 의하도록 하는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 △해당 검사의 사과와 불법 관행의 근절 등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 고발도 검토 중에 있다. (고근예)

## "어린이·청소년 집회 막는 아동복지법 개정 안돼"

정부의 아동복지법 개정 계획이 어린이·청소년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마련된 것일 뿐이라는 비난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지난 8일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마련,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이달 안으로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18세 이하의 청소년을 금지된 집회 또는 시위 등에 강제로 참가시키거나 참가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21세기 청소년공동체 희망'을 비롯한 10개 청소년단체들은 17일 공동성명을 발표, 정부의 이번 개정안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들은 "강제적 동원과 자발적인 참여를 가능하는 기준은 무엇이든 누가 정하는 것인가"라고 되물으며, 결국 "이번 개정안은 청소년의 자유로운 집회 참가를 억압하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부안군 반핵대책위에서 활동중인 이정준(18) 씨는 "청소년들은 스스로 자기의 생각을 펼치고 관철시킬 수 있는 의지와 자유가 있다"며, "일방적인 잣대로 청소년들의 자율적인 생각이나 의지를 규정하고 제한하려는 정부의 태도는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 비난했다.

이날 13개 인권사회단체들도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번 개정안이 "모든 아동이 결사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충분히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규정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며 개정안의 즉각적 철회를 촉구했다. (양승훈)

## '폭력의 감옥'에 갇힌 장애여성의 삶 장애여성 옥죄는 유·무형의 폭력 짚어보는 토론회 열려

장애여성들이 처한 폭력의 현실을 진단하는 토론회가 16일 열렸다. 이날부터 열린 장애여성공감의 '난장 2003 숲'의 첫 번째 프로그램이었던 이 토론회는 장애여성을 가두고 있는 유·무형의 폭력을 조목조목 짚어 보는 자리였다.

장애여성들을 후려치는 가장 큰 폭력은 무엇보다 빈곤이다. 빈곤문제연구소 류정순 소장은 "장애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뿔뿔하게 일하고 소득을 보장받기란 하늘의 별 따기"라며 그들이 집안의 천덕꾸러기로 학대당하고 버림받는 것도 구조적 폭력의 하나라고 주장했다. 류 소장은 특히 2001년 세상을 등진 최옥란 씨를 떠올리며 "뇌성마비 1급장애인, 여성, 어머니, 노점상, 수급권자 등 장애여성의 열악한 상황을 두루 갖추었던" 최 씨의 죽음은 '사회적 타살'이라고 주장했다. 우리 사회에는 아직 절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최옥란'이 있음을 경고하며 이들에 대한 사회복지 대책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민중복지연대 유의선 사무국장은 최 씨의 죽음의 원인에는 '장애여성의 양육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야만성'도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유 국장은 그녀의 양육권 주장에 대해 '제 한 몸 돌보기도 힘든데 양육권을 주장하는 건 무리'라는 냉담한 주위의 반응으로 최 씨는 절망했다고 털어놓았다.

장애여성이 한 가족이라는 걸 수치스러워하며 이들을 '학교에도 보내지 않고 무시와 폭언을 일삼는' 가족들의 태도 역시 장애여성을 명들게 하는 일상적 폭력이라고 장애여성공감의 박영희 대표는 지적했다. 무엇보다도 어려운 것은 자신들이 당하는 폭력을 드러내는 것조차 아직 힘들어한다는 것. 특히 시설이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성폭력에 대해 '참고 사는' 장애여성들이 대부분인데, 이는 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성폭력으로도 인정하지 않는 사회인식과 함께 오갈 데 없는 이들의 처지 때문에 더욱 그렇다는 것이다.

이번 행사는 18일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장애여성이 경험하는 가정폭력 드러내기'라는 문화제로 끝을 맺는다. (김정아)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3년 10월 21일(화)  
제 2438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배경내

## <현장> 김주익 지회장 떠나보낸 한진중공업 '보람과 미래 대신 죽음 내몬 탄압만'

"보람과 미래가 있는 한진중공업" 부산 영도 한진중공업 정문 앞 육교에 걸려 있는 거대한 선전판. 선전판 너머에는 지난 17일 급속노조 한진중공업 김주익 지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85호기 크레인이 우뚝 솟아 묘한 대비를 이루고 있었다. '보람과 미래가 있다'는 한진중공업에서 김 지회장은 왜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었던 걸까?

"협상 하자 말이가 말잔 말이가"

"임단협-임"금은 동결이고 '단'협은 퇴보요 '협'상 하자 말이가 말잔 말이가?" 직원 식당 외벽에 휘갈겨진 삼행시는 사측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임금을 동결하겠다고 완강하게 버티 2002년 임단협이 아직도 마무리되지 못한 한진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농성천막 안에서 만난 한진중공업 노조 도진해 조직부장은 "사측은 김 지회장이 크레인에서 내려와야 협상하겠다는 급속노조 위원장이 대신 참여한 자리도 거부해 왔다"며 사측의 불성실한 협상태도를 질타했다. 지난 6월 노동부 관계자가 배석한 가운데 임금상과 손배·가압류의 원만한 처리 등에 대해 잠정합의한 것도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이 조합 측의 주장이다.

이러면서도 사측의 탄압은 줄기차게 이어졌다. 알려진 대로 사측은 지난 91년 이후 작년까지 조합원 113명에게 18억 원의 손배소송을 제기했고, 이번 달에도 파업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150억 원 손배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지난 2일에는 업무방해를 이유로 한 사측의 고소로 김 지회장을 포함한 지도부 6명에게 체포영장이 발

부되기도 했다. 13일에는 해군과 해경 물량을 수수하는 특수선지회 조합원 180명에게 개별 손배소 위협도 가해졌다. 특수선지회 이봉희 산업안전부장은 "최초 파업 참가율이 97%에 이를 정도로 강고하게 단결했던 특수선지회 노동자들이 방위산업체라서 파업이 금지된다는 이유로 회사의 집중적인 협박 목표가 되었다"고 말했다.

21년 경력의 특수선지회 노동자 박래영 씨는 "사측은 조합이 주도하는 농성에만 참여하지 않으면 집에만 있어도 임금의 70%를 주겠다"고 회유했다고 말했다. 또 박 씨는 "지난 5월 말 특수선 사업부가 마산에서 부산으로 옮겨왔는데 임단협 협상 지연으로 사측이 약속했던 전세자금 대출이 되지 않아 가족들과 생이별한 상태"라며 "마산에서 부산까지 출퇴근하는 조합원도 있다"고 힘든 사정을 털어놓았다.

"농성에만 참여 안하면 임금 70% 준다"

탄압이 극심해지면서 조합원들의 파업 대오 이탈도 가속화됐다. 특히 김 지회장이 죽음을 결단한 직접적인 계기는 문제 해결 전까지는 진수시키지 않겠다고 조합원들이 지키고 있던 배를 사측에서 빼냈던 사건으로 보인다.

85호기 크레인 바로 옆 도크에서 경계를 섰던 한진중공업 울산지회 노동자는 "사측을 협상 자리에 나오게 하기 위한 마지막 희망이었는데 14일 새벽 2시 갑자기 밀고 들어온 관리자들이 순식간에 배를 움직였다"며 "희망이 사라지자 대오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파업 이후 700명에 달했던 농성 참가자들이 150여 명으로 줄어든

것도 그 즈음이었다. 이 조합원은 "우리가 그 배를 지켰다면 지회장 목숨은 구할 수 있었을 텐데..."라며 눈물지었다. 농성장 주변 벽에 남겨진 '참석 안한 조합원들 양심이 안 쥘리나'는 낙서는 마지막까지 남은 조합원들의 절박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 배 지켰다면 지회장 구했을 텐데"

크레인 밑에 마련된 빈소 안에서 해고자 박성호 씨를 만났다. 그는 91년 박창수 집행부 체제에서 교육선전부장으로 일했고, 당시 김 지회장은 문화체육부장을 맡고 있었다. 28년 한진 여공노조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90년 위원장으로 당선된 박창수 씨는 이듬해 안기부로부터 집중적인 전노협 탈퇴공작을 받다 구속되고 병원에서 의문의 변사체로 발견됐다. 결과적으로 박 씨 입장은 10년 전 같이 싸웠던 '삼총사' 중 두 명이 모두 곁을 떠난 셈이다. 박 씨는 "그 사람, 위원장 되고 나니까 원칙적이고 실천적으로 변했어. 말 한마디 쉽게 내뱉지 않았어. 농성 조합원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것을 보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했는지...?"라며 끝내 눈시울을 적셨다.

탈출구는 없다

이렇게 손배·가압류를 이용한 노조탄압이 배달호 씨에 이어 김주익 씨마저 죽음으로 몰고 갔지만, 탄압을 '원천봉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딱히 보이지 않는다. 배달호 씨 분신 63일 만인 지난 3월 10일, 두산중공업 노사는 조합원에 대한 손배·가압류는 완전 취하하고 조합비 가압류는 40%만 적용하는 데 합의해 부족하지만 다른 사업장에도 문제 해결의 희망을 던져줬다. 하지만 10월 현재 민주노총 산하 48개 사업장이 1727억원의 손배·가압류에 묶여 있는 등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지난 3월 5일에는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민변이 노동자 (3면에 계속)

# 경찰 "공무원 노동3권 보장" 의사표현에도 족쇄 조합원들 마구잡이 연행에 집회장까지 침탈

지난 6월말 노동부에 의해 입법예고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아래 공무원노동조합법안)이 공무원의 단체행동권과 임금교섭을 불허하고 있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아래 공무원노조, 위원장 노명우)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법안의 국회 통과를 지지하기 위한 공무원노조 활동에 대한 경찰의 탄압이 갈수록 도를 더해 가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

공무원 노조는 지난 6일부터 공무원 노동조합안 저지를 위한 '전국 대행진', '100만인 서명운동' 등을 진행해 왔으며, 18일에는 '전국 대행진'을 마무리 정리하는 자리로서 '공무원노조 간부 결의대회'를 종묘공원에서 열었다.

이날 집회는 집회신고까지 낸 합법 집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공무원의 집단행동은 불법"이라며 오후 1시 집회가 시작되자마자 집회 참가자들을 에워싸고 폭행을 가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사회자를 비롯한 무대 위의 연사들까지 폭행하며 무대 아래로 끌어내렸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노조 김일수 함양지부장이 경찰의 방패에 맞아 실신해 호흡곤란증세를 보이는 등 경찰폭력에 의한 피해가 속출해 경찰의 폭력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경찰의 무자비한 폭력성과 반인권적인 공권력 남용은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극에 달했다"며 경찰의 폭력성을 비판했다.

이에 앞서 18일 오전 평택경찰서는 대회에 참여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평택시지부 사무국장을 영장도 없이 수갑을 채운 채 연행하여 1시간 30분 동안 구금했다. 또한 17일 오전 영등포구청에서 선전전을 진행한 공무원 38명이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옥내에서 '집단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연행되는가 하면, 같은 날 오후 선전전을 벌인 후 지하철을 타기 위해 종각역에 모인 조합원 14명도 연행돼 집회가 끝난 18일 밤에서야 풀려났다.

공무원노조 김정수 대변인은 이와 같

은 정부의 과도한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 "생색만 내려고 했던 노무현 정권이 처음부터 갖고 있던 입장이 적나라하게 표출된 것일 뿐"이라며 "과도한 공권력 행사는 오히려 조합원들의 투쟁의지를 더욱 더 활성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권두섭 변호사는 "공무원노동자들의 노동3권이 하루 속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한 뒤, "노동3권의 보장을 요구하는 의사를 표현하는

것까지 '공무원 집단행동 금지'를 확대 적용해 경찰의 물리력으로 탄압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앞으로 과도한 탄압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경찰청장, 행정자치부 장관 등 정부 책임자에 대한 고소·고발 및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는 한편, 국가인권위 진정, 국제노동기구인 ILO에 한국정부를 제소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을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16일에도 15일까지 연행 당한 100여명 조합원들의 진정서를 모아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한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낸 바 있다. (대홍)

## 테러방지법안 28일 국회 정보위 상정 인권단체들, 정보위원장 만나 "테러방지법 안된다" 못박아

오는 28일 테러방지법 수정안이 국회 정보위원회(아래 정보위)에 상정될 예정이어서, 인권단체들을 비롯해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한 대응이 요청된다. 이 같은 사실은 20일 '테러방지법제정반대공동행동' 대표단이 김덕규 국회 정보위원장(통합신당)을 만난 자리에서 확인됐다. 또한 김 위원장은 "이 정도 법안이면 통과시켜도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했다"고 말해,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단체들이 줄곧 테러방지법에 대해 반대해 온 이유의 핵심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음을 드러냈다.

이날 면담자리에서 위원장 대신해 설명에 나선 정보위 강영소 수석 전문위원은 "지금의 민주당안은 테러 개념을 국제협약에 준하는 것으로 바꾸고 테러의 예방 및 방지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법안의 성격을 바꾸었다"며 수정안에 대한 비판을 미리 봉쇄하려 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장유식 협동 사무처장은 "수정안이 기존 정부 원안에 비해 나아졌지만, 개혁해야 할 국정원의 권한을 더욱 강화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우려할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장주영 변호사도 "국정원이 정보 수집 업무를 넘어 대테러센터를 만들고 다른 정부 기관들을 지휘 조정하도록 하는 것은 정보기관 본연의 업무를 넘은 것이며, 대테러 업무는 기존 기구들로 충분하다"며 "우리는 기본적으로 테러방지법의 제정을 반대한다"고 못박았다.

김 위원장은 또 "테러 정보의 국제 교류를 위해 다른 기관들의 정보 업무를 총괄·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국정원이 요청해 왔다"며 테러방지법 제정 추진의 배후에 국정원이 있음을 공공연히 드러냈다. 이어 강 전문위원은 "고영구 국정원장이 들어오면서, 국내 보안업무를 겸·경에 많이 넘기고 내부 개혁을 했다"며 국정원이라는 호랑이의 발톱을 예써 감추려 했다. 이에 장 변호사는 "고영구 원장 체제는 영원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법률은 한번 만들어지면 영원히 남는다. 내부 개혁만으로는 안 된다. (국정원에 대한) 제도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또한 "국정원이 대테러 활동을 기획·지도·조정하고 다른 기관의 정보 업무까지 총괄해야 한다는 논리를 쫓아가다 보면 과거 중앙정보부, 안기부처럼 하지는 이야기가 된다"며 "그렇게 하지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한편, 오는 22일 열릴 국가인권위원회 제1소위에서 테러방지법안이 논의될 예정이어서 국가인권위의 대응 방향이 주목된다. (이주영)

## 올 가을 완성된 인권영화 4편을 만난다 25일 개막되는 인디다큐페스티벌에서

독립다큐멘터리 감독들이 직접 만든 다큐멘터리 축제 '인디다큐페스티벌 2003'이 오는 25일부터 6일간 서울아트시네마에서 열린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인디다큐페스티벌'의 가장 큰 매력은 그 해 만들어진 국내 독립다큐멘터리들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는 것. 상영될 작품 중에는 올 가을 제작이 완성된 신작 '인권영화'들이 포함되어 있다.

<주민등록증을 찢어라>의 감독 이마리오 씨가 만든 신작 <미친 시간>은 베트남전쟁 때 한국군이 저지른 민간인 학살 문제를 다루고 있다. 미군을 대신해 토벌작전에 동원되었던 한국군은 5천명이 넘는 민간인을 학살했다고 한다. 학살의 피비린내를 기억하고 있는 베트남 사람들의 증언이 중심인 이 작품은 조용히 드러나고 있는 살아남은 사람들의 분노를 통해 전쟁의 비극은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다고 전한다.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이훈규 감독)는 지난 1월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에서 개최되었던 '세계사회포럼'을 취재한 영화. 현장을 스케치하면서 세계사회포럼이 제기한 이슈들에 관한 다양한 인터뷰를 곁들인 이 작품은 "현장 보도, 그리고 이 포럼에 참여했던 노암 촘스키와 같은 석학들의 말을 인용하는 보도 다큐멘터리의 감각을 지닌 작품"이라고 영화제 프로그래머 오정훈 씨는 평하고 있다.

노동자뉴스제작단이 만든 두 편의 신작 영화도 상영목록에 들어있다.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자들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다룬 <이중의 적>(이지영 감독)과 <노동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한국조폐공사노동조합사 2부>(태준식 감독)가 그것. 2000년 말부터 시작된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자들의 피 말리는 싸움을 기록한 <이중의 적>은 517일 간의 싸움에도 불구하고 패배로 끝나버린 계약직 노동자들의 고통스런 투쟁을 담고 있다. <노동자들은...>은 역시 1998년 공공부문의 구조조정 이후 지난 5년간, 조폐공사 노동자들이 펼쳐온 민영화 반대 투쟁을 독특한 카메라 워크로 담아낸다.

이번 페스티벌에서는 인권운동사랑방이 제작 지원하고 7회 인권영화제를 통해 관객들과 만난 바 있는 <여정>도 국내 신작전에서 상영된다(www.sidof.org). (김정아)

(이면에서 이어짐) 개인과 조합에 대한 손해·가압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노동법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국회에 제출되기도 못했다. 당시 이를 추진했던 민주노동당 인권위 김정진 변호사는 "이 안이 통과됐다면 손해·가압류 문제 해결에 큰 역할을 했을 텐데 다른 사안과는 달리 소개의원조차 구하지 못했다"며 국회의원들의 무관심을 질타했다.

한편 21일 오후 2시 한진중공업 김정훈 사장과 김창한 금속노조 위원장이 참석하는 교섭이 재개될 예정이다. 하지만 사측은 "경영안정 및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개인 가압류는 해제하더라도 조합에 대한 가압류는 해제할 수 없다"고 밝혀 김 지회장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해결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강성준)

## 주간인권흐름

(2003년 10월 13일 ~ 10월 20일)

1. 공개적으로 '전향' 강요하는 '민주공화국'

노 대통령, "(송 교수에 대한) 엄격한 법적 처벌도 중요하지만 한국사회의 폭과 여유와 포용력을 세계에 보여주는 것도 의미"(10.13)/ 21개 인권단체, 송 교수에 대한 모든 사법절차 중단 촉구...각계위로 56명, "분단 상처 입은 귀향자 끌어안는 것이 민주적 역량 보여주는 것"(10.14)/ 송 교수, "균형감 있는 경계인으로 살기 위해 노동당 탈당·헌법 준수·독일국적 포기"(10.14)/ <조선일보> 등 보수언론, '사과' 미흡하다며 '철저 전향' 촉구(10.15)/ 송 교수, '경계인' 포기·친북행위 사과 등 내용 담은 글 검찰에 제출...검찰, "참회 강도 셀수록 처벌 수위도 내려갈 것"(10.17)/ 대학교수 25명, "검찰이 송교수 저서의 친북·이적성 여부 따지는 것은 학문과 사상의 자유 침해"(10.17)/ "주요 혐의 점에 대한 반성 없다"며 검찰이 송 교수 '사과문'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데 대해, 송 교수측 "후보위원급 대우받은 처신에 문제 있었다"는 글 추가 제출키로(10.19)/ 검찰 관계자, "이번 주말쯤 사법처리 방침 결론짓게 될 것"(10.20)

2. 대통령 국어사전엔 '신중하게=조심모사'?

노 대통령, (파병 여부) "여러 가지 사정 충분히 고려해... 신중 결정할 것"(10.13)/ 콘돌리자 라이스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강력한 동맹관계에 기초해 한국이 우리의 이라크 정책을 계속 지지해줄 것으로 확신한다"며 노골적으로 파병 압력(10.14)/ '이라크 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 안보리 결의안 통과와 관련 "미군 중심의 다국적군은 점령군 확대 불과"...'이라크 파병저지 전국학생대책위원회'도 파병 결정 시 동맹휴학 등 집단행동 나서기로(10.17)/ 노 대통령, 시민사회단체·종교계 인사들과 만나 "18일부터 본격 논의의 시작하겠다"(10.17)/ 대통령 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 추가 파병 전격 결정...이라크 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 "파병 결정은 참여정부의 자기 부정이자 대미 굴종의 고백"이라며 "대통령 재신임 문제와 파병 결정 연계할 것"(10.19)

3. '제국' 횡포에 짓눌린 세계

미 <유에스에이투데이>, 지난 7개월간 이라크 주둔 미 병사 14명 자살해 다른 주둔지 평균 자살률보다 2배쯤 높다고 보도(10.13)/ 바그다드 중심가 터키 대사관 입구에서 자살폭탄 공격 발생...터키 의회가 1만명 규모 이라크 파병 동의안 통과시킨 지 일주일만에(10.14)/ 일 정부, 내년 이라크에 15억달러 무상 지원하고 연내에 육상지원대 선발대 150여명 파견하기로(10.15)/ 미군이 이끄는 다국적군 구성 승인 이라크 결의안 유엔 안보리 통과...러·프·독은 파병과 재정지원 동참 거부, 파키스탄은 파병 불가 뜻 밝혀(10.16)/ 터키 총리, 이라크 과도통치위가 터키 파병 반대하자 최종 결정 미국에 맡겨(10.18)/ 빈 라덴, 육성 테이프서 "이라크에 군대 보내는 나라들도 공격하겠다"(10.18)

● 오늘 <인권이야기> 쉽니다.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 ‘뫼인 송두울’에 사전구속영장

### 검찰 “증거인멸·도주 우려”...인권단체들, 즉각 석방 촉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온 송두울 교수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전격 청구돼 변호인들과 인권사회단체들의 항의가 거세다.

21일 서울지검 공안1부(부장 오세현)는 송 교수에 대해 △반국가단체인 조선노동당에 가입해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활동한 혐의(반국가단체 가입) △73년부터 올해 초까지 북한의 지령을 받고 20여 차례 입북한 혐의(특수탈출) △북한 관계자와 접촉하고 노동당 창립 기념일에 축전을 보낸 혐의(회합통신)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송 교수가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으며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송 교수는 서초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고, 22일 영장실질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영장청구 소식이 알려지자 김형태, 이돈명, 최병모 변호사 등 송 교수의 변호인 18명은 보도자료를 내고 “수사를 마친 검찰이 송 교수를 새삼스레 구속시키려는 것은 송 교수와 관계없는 후보위원 부분을 억지로 인정시키려는 의도”라며 “송 교수가 체포 또는 구속을 무릅쓰고 귀국했으며 10여 차례가 넘는 소환에 한 번도 거부한 적 없이 자진출두” 했는데도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구속제도를 남용한 부당한 처사”라고 항의했다. 이들은 공동 변호인단을 추가로 확대 구성할 예정이며, 22일 밤 현재 참여하기로 한 변호인의 수는 50여 명으로 불어났다.

민가협도 22일 발표한 논평을 통해 영장청구는 “강도 높은 전향과 북에

대한 고급정보 제공’을 강제하기 위한 조치”라며 “인신구속이라는 물리력을 통해 전향을 강제하려는 반 인권적 처사”라고 규정했다.

인권운동사랑방도 21일 낸 긴급 논평에서 “국정원과 검찰이 한달 가량의 수사를 했는데도 간첩행위를 입증하지 못한 채 송교수를 구속까지 하려는 것은 압박과 자백을 받아내려는 것”이며 “증거는 검찰에서 이미 확보하고 있고 출국금지 상태에 있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는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또 “사상전향제도와 준법서약제

## 민주노총, “노동탄압 계속되면 불신임 조직할 것” 민주노동당 한진중 진상조사단, “정부와 국회도 책임”

한진중공업 측의 부당한 손해배상·가압류 조치에 따른 압박으로 129일의 고공농성 끝에 결국 자살한 고 김주익 지회장 사건에 대한 노동계의 본격 대응이 시작됐다.

21일 오후 2시 한진중공업 노·사가 7월말 파업 이후 처음으로 임금단체 협상을 진행하기로 한 가운데, 같은 날 오전 10시 30분 민주노총은 ‘한진중공업 김주익 지회장 자살 이후 노동정국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상황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한진중공업에 “△노동탄압 사과 △2002년과 2003년 임단협 체결 △손해배상 가압류 철회 △징계와 해고 원상회복 등 노조의 소박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한진제벌 응징을 위한 전국투쟁으로 나아가 것”이라

는 개인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강제적으로 그 사상과 양심을 바꾸도록 한다는 면에서 반인권적 제도로 규정돼 이미 폐지됐다”며 “검찰 당국이 송 교수에게 구체적으로 반성하고 전향할 것을 강요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인권 수준을 독재정권 시절로 되돌리려는 반인권적, 반역사적 행위”라고 규탄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이와 함께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 철회와 법원의 영장청구 기각도 촉구했다. (강성준)

◆ 함께 지켜봅시다 ◆  
**송두울 교수 영장실질심사**  
 · 때 : 22일(수) 오후 2시  
 · 곳 : 서울지법 319호 법정

며 투쟁 의지를 분명히 전달했다. 민주노총은 또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를 이루겠다는 노무현 정부의 기만성을 비판하며 “손배가압류, 노동자 대량구속 등 친사용자적 노동탄압을 중지하지 않는다면 오는 22일과 29일, 11월 5일 대규모 부산집회에 이어 11월 9일에는 서울에서 10만이 결집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어 강력한 대정부투쟁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은 “이번 사건을 재신임 정국과 연관해서 대응할 것”이라며 “개혁실종, 노동탄압에 대한 조치 없이 재신임 받겠다고 하면 우리는 불신임을 목표로 조직적으로 활동할 것”을 밝혔다.

민주노총의 이와 같은 ‘대정부투쟁’의 배경에는 참여정부에 (2면에 계속)

## “자살자 속출하는데 미국에 돈·목숨까지 대주나” 330일째 타오른 촛불, ‘파병반대’ 엄원 담아

21일 ‘이라크 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이 모든 국회의원들에게 파병 찬반 여부에 관한 질의서를 발송하고 청와대 앞 파병반대 1인 시위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날로 330회를 맞은 광화문 촛불집회에서도 “파병반대”의 목소리가 연이어 쏟아져 나왔다. 갑자기 푹 떨어진 기운으로 쌀쌀해진 가을 밤 추위에도 불구하고 ‘제2, 제3의 효순이, 미선이’가 이라크에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밝혀진 40여 개의 파병반대 촛불은 뜨겁게 타올랐다.

시청 앞 사무실에서 막 퇴근한 회사원을 비롯해 청년단체 회원까지 참가자들 모두는 지난 18일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파병 결정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촛불집회에 꾸준히 참석해왔다는 시민 유모 씨는 “이 땅에서 먹고살기 힘들어 자살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는데도 미국에 돈 대주고 목숨까지 대주냐”며 침략전쟁의 뒤치다꺼리를 하기 위해 파병을 결정한 정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동부지역 일하는 청년회” 소속의 한 청년은 “터키도 파병을 유보하고,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마저 파병을 거부하는 시점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먼저 파병을 결정하는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여 너무 안타깝다”며 “평화를 위한 나라, 평화를 위한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그러나 전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미군에 의한 희생을 줄이고 그 과정에 한국이 동참하지 않기를 바라는 참석자들의 엄원은 경찰을 예민하게 자극한 듯하다. 이날 종로경찰서 소속 경찰들은 “촛불집회에서는 예도와 목념과 같은 순수 추모만이 허락될 뿐이므로 여

러 명이 모여 파병반대와 같은 주의주장을 펼치는 집회는 사전신고를 한 다음에 하라”며 주최측을 압박했다. 경찰은 지난 19일에도 같은 주장을 펴며 촛불집회 현장에 난입해 참가자들을 에워싸고 폭력을 행사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병반대를 위한 시민사회의 목소리는 앞으로 계속 커져나갈 전망이다. 오는 24일에는 2차 비상시국회의가 개최돼 파병반대를 촉구하는 사회단체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나감과 동시에 그 이튿날에는 ‘파병반대 제2차 범국민 행동의 날’ 행사가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릴 예정이다. (임국현)

열두 번째 반딧불이  
**<감춰진 전쟁>**  
 Hidden War of Desert Storm  
 - 미국 걸프전의 감춰진 음모  
 · 때 : 10월 22, 23일 늦은 7시 30분  
 · 곳 : 광화문 아트큐브

(비면에서 이어짐) 대한 깊은 실망이 깔려있다.

민주노총 집계에 따르면, ‘대화’와 ‘타협’을 강조하던 참여정부에서 출범 8개월을 맞은 10월 20일 현재 무려 132명의 노동자가 구속됐다. 뿐만 아니라 두산중공업 배달호 씨 분신 이후 손해배상·가압류 남용 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손해배상·가압류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이른바 ‘노사관계선진화방안’을 내놓기까지 했다. 10월 20일 현재 민주노총 산하 46개 사업장이 1300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가압류에 묶여있고, 심지어 지난 6월 철도과업에 대해서는 정부 스스로 75억의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기도 했다.

구속노동자 132명에 손배·가압류 방지 한편 이날 오전 11시 민주노동당도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8일부터 진행한 ‘한진중공업 김주익 지회장 사망사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민주노동당은 김주익 지회장의 자살 원인으로 먼저 한진중공업 사측의 압류와 손해배상 소송, 극심한 부당노동행위를 통한 노조탄압과 노동자를 과도하게 착취하는 경영방식 등을 지적했다. 민주노동당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진중공업은 지난 2000년부터 꾸준히 흑자경영을 해왔지만 21년 동안 근

속한 김주익 지회장의 기본급이 고작 105만원에 불과한 것을 비롯해 노동자들의 평균임금이 동종업종에 비해 41~97만원 가량 적은 수준이다. 또한 사측은 2000년 당기 순이익의 2.1배, 2001년에는 1.5배를 조남호 회장을 비롯한 친인척에게 배당하고서는 2002년에는 배당을 늘리기 위해 ‘인력체질 개선’이란 명목으로 노동자 650여명을 정리해고했다

민주노동당은 또 “민주노총, 민변, 민주노동당이 가압류와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추진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으며 국회는 법률개정을 하지 않았다”며 정부와 국회의 직무유기도 김 지회장을 자살로 내몬 원인에 포함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국회의 직무유기에도 책임”

한편 21일 2시 노사교섭에 앞서 노조측은 사측이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한 교섭은 무의미하다고 판단, 지난 7월 18~19일 교섭결렬의 책임소재 등 사측 책임에 관한 진상규명을 선행할 것을 사측에 요구했다. 그러나 이날 교섭 자리에서 “한진중공업 김정훈 사장은 사측의 구체적 책임은 인정하지 않은 채 ‘이렇게 된 이상 모두 내 책임이다’라는 애매한 사과의사만 표명했다”고 민주노총 부산본부 박진현 교섭국장은 밝혔다. 사측은 7월 교섭 결렬의 책임소재에 대해서도 그 동안 주장했던 ‘노조측의 교섭 결렬 선언이 사실과 다르다는 부분만 인정했을 뿐 더 이상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은 상태다.

또한 사측은 문제가 되고 있는 손해배상·가압류와 관련, 현재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는 철화한 상태이지만 조합비에 대한 40%의 가압류는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해고자 복직에 대해서도 수용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해서는 법률적 판단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한진중, 조합비 40% 가압류 고수

다음 교섭 일정은 유족에 대한 사측의 사과를 전제로 노사 실무간사단 협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이날 사측은 김 지회장의 빈소에 조문을 가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해 일단 노사교섭은 계속 진행될 전망이다. (대홍)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 국가보안법 괴물, 송두울 삼키다

### 송 교수 구속 확정...국보법 폐지 요구 높아져

송두울 교수가 결국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전날 공안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이 사법부에 의해 서라도 제지되리라는 자그마한 희망은 여지없이 배신당했다. 이에 따라 송 교수는 서울구치소로 수감됐다.

22일 오후 2시 서울지법 319호에서 비공개로 열린 영장실질심사(최완주 전담 판사 주재)에서 송 교수는 "73년 노동당 입당 등 북한에 치우친 행적이 있었음을 인정한다"고 밝히면서도 "북한에서 후보위원급 대우를 받았지만 후보위원으로 정식 선임되거나 통보를 받은 적은 없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변호인들은 "송 교수는 체포영장이 발부됐는데도 자진 귀국했고 소환조사에도 충실히 응해 구속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끝내 외면했다.

이에 대해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총무 전종훈 신부는 "37년만에 고국을 찾은 노학자에게 최소한의 예의도 갖추지 못하는 한반도의 비참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줬다"며 "철학자의 신념을 여론이나 법적 잣대로 재판한다는 것 자체가 가당치 않은 일"이라고 비판했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김성란 사무총장도 "근 한 달간의 조사에도 송 교수가 정치국 후보위원임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했으면서도 유추와 정황판단만으로 구속했다"며 "이는 과거 공안검찰이 민주통일인사를 탄압할 때 써먹던 수법을 재탕한 것"이라며 어이없어했다.

이처럼 송 교수를 몰고 늘어져 자신들의 존재의의를 부각시키려는 공안세력의 의도와는 반대로 국보법 폐지 요구와 공안세력 규탄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천주교인권위원회 안주리 사무국장은 "국정원이 유포한 허

위사실이 언론에 의해 기정사실화 되어 송 교수를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더니 결국 구속에 이르렀다"고 개탄하면

2003년 10월 23일(목)

제 2440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배경내

서 "국보법이라는 괴물이 다시 고개를 쳐드는 상황에서 뜻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국보법 폐지를 위해 다시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동안 송 교수 사법처리 반대입장을 밝힌 온갖 단체들과 원로들도 23일 오후 3시 기독교회관 2층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송 교수 구속을 규탄하고 국보법 폐지를 요구할 예정이다. (김성준)

## <현장> 10일째 맞은 삼성생명 해고자 단식농성장 "이번에는 길고 긴 투쟁의 끝을 봐야지요"

'삼성생명해고자 복귀투쟁위원회' 노동자들의 단식농성이 10일째 이어지고 있다. 연 이틀 새벽비가 다녀간 뒤 비닐천막 틈새로 싸늘한 바람이 새어 들어오고 있었지만, 22일 농성장에서 만난 이들의 투쟁 의지는 여전히 강고했다.

98년 IMF 위기로 인해 엄청난 적자가 예상된다는 사측의 거짓말에 속아 십년 넘게 몸바쳐 일해온 직장에서 쫓겨난 분노 때문이었을까. 단식으로 인해 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면서도 이들은 아침 7시부터 시작되는 힘겨운 일정을 지켜내고 있었다. 성시에 대외협력국장은 "매일 출근시간 삼성생명 본사 근처에서 선전전을 진행하고 이견회 회장 자택 부근에서도 항의시위를 계속하고 있다"며 "힘들더라도 되도록 더 많은 곳에서 삼성의 부당한 처사를 규탄할 수 있도록 활동반경을 넓혀갈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이들의 강고한 의지와는 달리 건강상태는 나날이 나빠지고 있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단식자들 대부분이 40세 이상의 여성들이고, 심지어 질병이 있으면서도 단식을 결행한 사람도 있어 단식 중 병원으로 실려 가는 이들이 줄을 잇고 있다. 성 대외협력국장은 "현재 9명이 입원해 있고 5명이 요양중이며 건강상 이유로 중단한 사람들도 생겼다"고 전했다. 그러나 여전히 50여 명은 유서를 품에 간직한 채 농성장을 지키고 있었다.

이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농성에 돌입하면서 사랑하는 가족과 생이별해야 했던 것. 한 해고자는 자식 돌잔치가 코앞에 다가왔는데도 농성장을 떠나지 않고 있었다. 이명숙 부위원장도 "아들이 다음달 6일에 입대하는데 엄마 노릇도 제대로 못해 미안하다"며 눈물지었다.

그럼에도 삼성측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 심지어 농성장 주위에 차량을 여러 대 주차시켜 놓고 단식자들을 감시하기도 해 이들의 분노를 사고 있었다. 성 대외협력국장은 "가는 곳곳을 미행하면서 농성지원 때문에 단식에 참여하지 않는 간부나 단식을 중단한 사람들이 끼니를 때우는 장면을 촬영하는 등 단식투쟁에 흠집을 가하려는 온갖 치졸한 짓을 다하고 있다"며 몹서리쳤다.

이 부위원장은 "언론조차 외면하는 상황에서도 끊이지 않는 지지의 발걸음이 해고자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면서 "이번에는 지난 5년간 길었던 투쟁을 끝맺음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연대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이날로 원적 복지를 위한 이들의 투쟁은 어느새 1611일을 넘어가고 있었다. (임국현)

<기획> 테러와의 전쟁, 피 흘리는 인권 ③

## 통제받지 않는 비밀정보기관, 새 날개 단다

"모든 권력은 부패한다. 절대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독재권력의 위험성을 꼬집는 이 말이 '음지에서 일하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국민의 일상 곳곳에 감시의 촉수를 들이댈 수 있는 이들 비밀정보기관이 '국민이 아닌 정권과 조직의 안보'를 위해 권한을 남용해 온 일은 줄곧 있어왔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 통제받지 않는 비밀정보기관이 수사권까지 갖고 있을 때의 위험성이란 가공할 만하다.

수사권을 가진 정보기관의 몇 안 되는 역사적 사례로는 나치-독일의 게슈타포, 구 소련의 KGB, 구 동독의 슈타지가 흔히 꼽힌다. 이들 악명높은 '공포정치'의 주인공 가운데 대표주자적인 게슈타포는 '초법적 예비검속'으로 수많은 지식인과 유대인, 노동운동가들을 강제수용소로 보냈다. 엄청난 밀고자를 주된 가운데 심어놓은 것으로 유명했던 슈타지 역시 둘째가라면 서럽다. 아직도 부모들이 아기 울음을 그치게 하기 위해 "슈타지 온다"고 말할 만큼, 구 동독에서 암약했던 이 정보수사기관이 가져온 일상적 공포는 위력적이었다.

정보수사기관, 공포정치의 엔진

바로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국가들은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의 분리 원칙을 채택해 특정 정보기관에 권한이 집중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이러한 교훈과는 거리가 먼 국정원이라는 거대 권력기관이 딱 하니 자리잡고 있다.

'국정원-고문수사', '국정원-공작정치'라는 등식이 아직도 자연스레 받아들여질 만큼, 이 정보수사기관은 우리 현대사에서 수많은 조작사건과 권력형 비리사건의 제조기 노릇을 해 왔다. 70년대 최종길 교수 의문사 사건과 인혁당재건위 사건, 87년 '수지김 사건'을 비롯한 각종 용공조작사건은 물론, 안기부 예산을 특정 정당의 선거자금으로 유용했던 '안풍' 사건과 각종 '권력형 게이트' 뒤에도 어김없이 이 기관이 등장했다. 이 모든 일은 중앙정보부에서 안기부

를 거쳐 오늘날의 국정원으로 문패를 바꿔 달면서도 비밀의 장막 뒤에 몸을 숨긴 채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비밀수사를 전개할 수 있는 알짜배기 권한만은 내놓지 않았기에 가능했다. 더구나 대통령 직속의 국정원은 다른 행정부처는 물론 국회의 견제조차 거의 받지 않는다. 예산과 조직, 구성원을 비밀에 부친 채, 법원의 허가도 받지 않고 광범위한 감청을 행할 수 있는 권한을 누려왔다. 불법구금, 고문, 불법 도청 등에 대한 의혹이 일 때마다 국정원은 법이 보장한 '비밀주의'라는 엄호막 뒤로 숨어버리곤 했다.

비밀의 장막 뒤 초법적 권한 누리

물론 현 고영구 국정원장 체제하에서 일정한 내부개혁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다. 최근 국정원은 탈권력화와 탈정치화를 기치로 '조직 내 노른자위'로 불리는 2차장 산하 대공정책실을 축소·개편하고, 국내 보안사범에 대한 수사권도 검·경에 이관했다. 사찰성 정보수집 업무와 정부·언론 등에 대한 상시 출입 관행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사권 자체와 과도한 비밀주의에는 전혀 손대지 않았다. 언제 후퇴할

지 모르는 내부개혁만 단행했을 뿐, 권력 행사의 투명화를 강제할 제도적 통제 장치는 전혀 마련되지 않은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인권단체들이 "국정원의 권한 강화를 위한 법일 뿐"이라고 비판하는 테러방지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국정원은 새로운 권한들을 대거 챙길 수 있게 된다. 대테러활동을 빌미로 다른 국가기구들을 지휘·조정할 수 있는 권한은 물론, 특수부대나 군병력 출동 요청권, 외국인 추방 요구권까지 갖게 되는 것이다.

국정원에 새 날개 달아주는 테러방지법

무엇보다 국정원이 테러방지를 빌미로 영장도 없이 광범위한 감청과 사찰을 일상화할 위험이 농후하다. 9·11 테러 이후 미국에서도 일련의 반테러 법률과 조치에 따라 무분별한 감청과 비밀수사를 통한 사회통제가 강화되고 있다. 이계수 교수(울산대 법학)는 "테러방지법이 먼저 시행된 외국에서 실제 이 법에 따라 기소되고 재판을 받은 테러혐의자는 소수에 불과하다"며 "실제로 이 법은 테러방지보다 전국민을 상대로 한 정보수집과 사회통제의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말한다.

과거 '반공과 국가보안법'에 기대 공포를 주입해왔던 국정원이 이제는 '반테러리즘과 테러방지법'이라는 날개를 달고 그들만의 자유를 계속 보장받게 될 위험성이 짙어진 것이다. (배경내)

## 만화사랑방

이동수



한진 중공업 등등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 국가인권위, "테러방지법 반대" "테러방지, 기존체제로도 부족함 없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테러방지법 입법 재추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국가인권위는 22일 제1소위원회를 열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28일 상정될 예정인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제정 반대의 의견을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국회 정보위원회가 국가인권위의 이러한 의견을 수용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제1소위의 한 위원은 "테러방지는 필요한 일이지만, 기존의 법과 체계로 테러에 대응하는 데 특별히 부족함이 없다"며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의 이유를 설명했다.

외국인의 권리침해는 원인보다 더 개악 나아가 이 위원은 "이번 수정안은 오히려 기존 안보다 개악된 부분도 있다"며 "예를 들자면, 테러를 할 우려만 있어도 입국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국제인권기준에 전혀 맞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8조 외국인 출입국 규제 등에 관한 조항은 대테러센터의 장, 곧 국정원장이 테러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외국인에 대하여 법무부 장관에게 출입국규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제엠네스티도 앞서 10일 발표한 성명에서 테러방지법안이 테러리스트로 의심되는 비시민(외국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 위원은 "이미 국가인권위는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명했고, 이번에 결정된 의견은 그것을 재확인하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해 2월 20일 채택한 의견서에서 "현행법과 제도가 ... 테러행위의 예방과 진압, 수사과 처벌을 위해 다양한 국가기관에 전문적 기

능을 부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중대한 테러 사태에 대비해 ... 통합적인 체제를 구축하고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반면, "테러행위를 예방, 진

## 열악한 노동현실이 부르는 하청노동자들의 죽음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두달 사이 산재로 5명 사망

최근 현대중공업 사내 하청노동자의 산재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살인적인 노동강도'라는 말이 체감될 만큼 노동자들이 생명이 무참히 짓밟히고 있는 것이다.

21일 울산 현대중공업 하청업체인 무진기업의 노동자들이 선박 엔진룸 세척작업 도중 유독성 가스에 의해 질식사되어 사망 및 부상당한 일이 발생했다. 가장 기본적인 환기장치인 팬조차 설치되지 않은 밀폐된 공간에서, 독극물로 분류되는 '아리노'라는 화학제를 사용해 세척 작업을 진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였다.

사고를 당한 두 명 중 조주현(51)씨는 현장에서 사망했고, 또 다른 한 명은 의식불명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간신히 목숨만은 건질 수 있었다. 이들은 현장에 방치돼 있다가 저녁 6시 퇴근시간을 앞두고 이들을 찾아나선 동료들에 의해 발견됐다. 당시 작업장 내부는 이들을 찾으러 들어간 노동자 두 명 중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한 명이 실신할 만큼 유독가스로 가득차 있었다.

또한 지난 13일에는 과로로 인한 '급성심근경색'으로 강성구(43)씨가 세상을 떠났다. 강 씨는 9일 오전부터 다음날 오전까지 24시간 동안 철야근

압 및 처벌하기 위한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인권을 보호하고 침해된 인권을 구제하기 위한 국내법과 제도는 전반적으로 국제인권법이 정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당시 국가인권위는 몇몇 독소조항의 삭제 혹은 부분적인 개정이 아니라, 테러방지법안의 제정 자체를 반대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이주영)

무를 한 상태에서, 10일과 11일 밤에도 연이어 12시간씩의 야간 노동을 강행해야 했다. 결국 강 씨는 13일 오전 출근 후 근무를 서던 중 가슴의 통증을 호소하며 탈의실에 쉬러 갔고, 40분이 지난 뒤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과도한 노동강도가 또 한 노동자의 생명을 집어삼킨 것이다.

이 두 사건 외에도 현대중공업에서는 지난 두 달 남짓한 사이 산업재해로 인해 하청노동자 세 명의 생명이 사라져 갔다. 8월 26일 압착사고로 고광수(52)씨가 유명을 달리했으며, 9월 8일과 10월 1일에는 작업 중 추락 사고로 인해 강동원(42)씨와 임제원(54)씨가 세상을 하직했다.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동조합의 조성웅 위원장은 "하청노동자들은 아무리 위험하고, 어려운 일을 시켜도 사측의 지시를 거부하지 못한다. 회사에서 팔리지 않으려면 꺾소리 없이 그냥 시키는 대로 일할 수밖에 없다"며 하청노동자들이 처한 열악한 노동조건에 울분을 토했다.

울산산업재해추방운동연합의 현미향 사무국장 역시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들은 팔 한쪽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해도 눈밖에 날까봐 산재신청조차 내지 않는다. 견딜 만하다 싶 (2면에 계속)

## 계속되는 국가보안법의 망령

건대생 김용찬 씨도 유죄판결

노무현 정부 첫 국가보안법 사건의 주인공으로 관심을 모았던 건국대학교 김용찬 씨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지난 7월 14일 구속되었다 국가보안법 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9월 3일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아왔다.

23일 서울지법 425호실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형사1단독, 재판장 박종택)는 국가보안법 7조 1항(반국가단체 찬양·고무)과 5항(이적표현물 제작·배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위반을 인정해 유죄판결을 내렸다. 다만 "표현·사상의 자유를 고려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김 씨 측이 국가보안법 7조 1항과 5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과와 대법원의 판례를 들어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그 동안 사회진보

연대 등 진보단체 사이트로부터 내려 받은 여러 가지 자료를 합성·제작해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자료를 소지하고 다닌 것이 국가보안법 7조 5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이런 것마저 이적표현물 게시, 배포라고 하면 수많은 진보사회단체 사이트도 검열해야 법의 형평성에 맞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소원 등 투쟁 멈추지 않을 것

조영선 담당 변호사는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보석신청까지 수용한 터라 위헌법률심판제청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예상했고 판결에도 기대를 한 것이 사실"이라며 재판 결과에 실망감을 표시했다. 조 변호사는 "앞으로 항소장을 제출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우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건국대 대책위원회 유한상 위원장도

클릭! 인권정보자료

### 『전쟁을 반대하는 여성들』

역은이: 전쟁을 반대하는 여성연대 / 2003년 10월 / 199쪽 / 5,000원

9.11 이후 세계를 휩쓴 전쟁의 광풍이 여성을 비롯한 아동, 장애인 등 소수자에게 어떤 모습으로 각인돼 왔는지를 기록한 자료집이 나왔다. 이 자료집은 전쟁 한복판에 놓인 사람들의 언어로 전쟁의 참상을 고발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증언하는 아픔이 반전운동과 어떻게 만나면서 평화를 위한 연대를 만들어 낼 수 있는지 영감을 제시한다. 『전쟁을 반대하는 여성연대』는 전쟁의 피해자로 오랫동안 잊혀져온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반전운동을 해온 개인 및 단체들의 모임으로 최근 2-3년간 논의와 활동의 성과를 자료집으로 펴냈다.

이 책은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은 여성으로서 전쟁을 반대하는 것의 의미를 짚었고, 2장은 주류 언론에서 전쟁의 진실이 왜곡되어온 점을 지적하면서 전쟁을 직접 경험한 이들의 글을 담고 있다. 3장은 국가와 민족 안에서 배제된 여성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했고, 4장은 소수자의 시선으로 전쟁을 반대하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5장은 세계 여러 나라 여성들의 반전운동을 소개하고 있으며, 6장은 전쟁을 반대하는 여성연대 활동을 정리해 놓았다.

그 동안 여성, 장애인, 아동은 전쟁의 일차적 피해자였음에도 전쟁에 대해 말할 권리를 박탈당했다. 이 자료에 실린 글들은 강요되었던 침묵을 깨고 전쟁에 관한 모든 허구·군사주의, 인권과 평화를 명분으로 내세우는 전쟁 등을 무너뜨리려 한다. 또한 일상에서 경험하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 결국 전쟁에서 자행되는 소수자에 대한 폭력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증명한다. (최은아)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공간기관과 사법부 등 민중을 탄압하는 연결고리들을 끊어내는 투쟁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한편 김용찬 씨와 함께 구속되었던 같은 학교 김종곤 씨는 지난 9월 26일 국가보안법 7조 1항과 5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화염병 사용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재판부(형사 1단독, 재판장 노재관)로부터 징역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대홍)

===== (이면에서 이어짐) 으면 참고 이해버리는 노동자들이 부지기수다"며 "이들은 근로기준법으로부터 철저히 소외돼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울산지방노동사무소 산업안전과의 전성준 씨는 "하청노동자들의 근무조건이 열악하다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7명에 불과한 산업안전감독관이 울산지역의 그 많은 사업장의 작업환경을 일일이 감독한다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하다"며 "결국 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조치는 사업주와 노동자가 함께 해결해 나가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150개 하청업체 중 노조 있는 곳 거의 없어

조성웅 위원장은 "과도한 노동강도와 기본적 안전마저 지키기 힘든 열악한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하청노동자들의 단결된 힘이 필요한데, 이마저도 업체의 해고 위협 앞에서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이 말을 증명하듯 지난 8월 30일 노조설립필증을 교부받은 '현대중공업사내하청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은 업체의 위장폐업과 부당징계라는 상황에 직면해야만 했다. 현재 150여 곳이 넘는 현대중공업 사내 하청업체 중 제대로 된 개별 노동조합이 있는 곳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노사협'이란 말은 공허하기만 할 뿐이다.

하청노동자들이 처한 열악한 노동조건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산재로 인한 노동자들의 장례행렬은 결코 멈출 수 없을 것이다. (양승훈)

◎ 24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전국 인권활동가 대회 관계로 다음 <인권하루소식>은 28일자로 찾아갑니다.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 “잇단 죽음, 직절과 고통 끝 항거”

### 근로복지공단 이용석 씨 분신...비정규직 차별 철폐 요구

“손해배상 가압류를 앞세운 노동탄압과 비정규직 차별 정책에 대한 절망과 고통이 참으로 견디기 어렵다 하더라도,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하나뿐인 생명을 던지는 극단의 선택만은 말아 주십시오. 기필코 살아서 민주노총과 함께 투쟁합니다.”

17일 금속노조 김주익 한진중공업 지회장이 크레인 위에서 목을 매고, 23일 대구 세원테크 이혜남 지부장이 분신한 데 이어 26일 서울에서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 노조(아래 근로복지노조) 이용석 광주전남본부장이 집회 도중 분신하자, 민주노총은 2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호소했다. 민주노총은 또 “잇단 자살 항거를 부른 것은 노무현 정권의 손해가압류·노동탄압정책과 비정규직 차별정책”이라며 대정부 총력투쟁을 선언했다.

“기필코 살아서 함께 투쟁합니다”

이에 앞서 26일 오후 종묘공원에서 열린 비정규직노동자대회 도중 근로복지노조 이용석 광주전남본부장은 온몸에 신나를 끼얹고 “비정규직 차별 철폐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분신했다. 한강성심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진 이 본부장은 3도 85% 화상으로 내부 기도화상이 심해 매우 위독한 상황이다. 이 본부장은 유서에서 “노예문서 같은 비정규직 관리세칙을 파기하고 고용안정을 외치는 우리의 요구는 당연한 것이며 마땅히 쟁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참여하지 않은 조합원, 깨어나지 않은 조합원에게 죽음으로써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며 비정규직 철폐와 조합원들의 단결을 호소했다.

지난 4월 신고필증을 받은 근로복지노조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험, 고용보험 업무를 처리하는 계약직, 일용직 노동자들로 구성돼 5월 이후 사측과 10여 차례 협상을 벌여 왔다. 이들은 △임금 15~20% 인상 △1년 이상 근무자 정규직으로 전환 △복리후생제도 정규직과 동등 적용 등을 요구해 왔다.

27일 근로복지공단 앞에서 열린 파업 출정식에 참여한 조합원들은 한결같이 이 본부장의 죽음과 비정규직 차별에 분노했다. 대구의 한 조합원은 “경력 4년인데도 기본급이 70만원 안팎이고 상여금을 받아봐야 100만원이 조금 넘어 정규직의 60%에 불과하다”며 “정규직은 다 받는 식대나 출퇴근 교통비도 받지 못해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 조합원은 “같은 업무를 하는 데도 부서 회의 때 부르지 않고 손님 오면 커피를 타는 것에서 사무실 갈래질까지 비정규직의 몫”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근로복지노조 박성구 양산지부장은 “정규직은 최고 90일까지 받을 수 있는 병가가 비정규직에게는 해당되지 않아 아파서 병원에 가려면 임금 삭감을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력4년 기본급 70만원에 잔심부름까지

또 이 본부장이 유서에서 파기를 주장한 공단 ‘비정규직 관리세칙’은 △계약직 업무구분 중 하나로 “정규직 업무 대체 수행”을 명시하고 있고 △매년 2회 정기적으로 ‘근무성적평정’(아래 평정)을 실시해 점수 순으로 ‘서열명부’를 작성하며 △명부 상 연속 2회 또는 총 3회 이상 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 재계약을 금지하고 있다. 게다가 각 부

2003년 10월 28일(화)

제 2442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배경내

서 부장이 평정 담당자이고 “인사관리상 필요한 경우” 언제든 ‘특별평정’을 실시할 수 있으며 평정 항목도 매우 추상적이어서 담당자 임의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인천의 한 조합원은 “출산휴가를 마치고 복귀한 동료도 있었는데 관리자가 갑자기 근평을 작성해 ‘너는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한 적도 있다”며 “근평을 작성한 관리자는 그 동료의 얼굴과 이름을 연결시키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근평을 작성했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 조합원은 “그 분이 ‘내가 안 나가면 누군가 나가야 할 테니 대신 나가겠다’고 말해 부동켜 울었다”고 기억했다. 또 “관리자들이 ‘6~7년된 계약직들은 알아서 나가야 하는 것 아니냐’며 공공연하게 자진사직을 강요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관리세칙, 비정규직 평가·해고 맘대로

이에 대해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김혜진 집행위원장은 “성적미달”을 핑계로 언제든 일정한 인원을 지속적으로 ‘해고’해 비용을 낮추고 평점을 이용해 노동자들 사이에 끝 모를 내부경쟁을 부추기는 제도”라고 규정했다. 또 “노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공약해 왔는데 오히려 정부산하기관에서 정규직 업무를 대체하는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이후 △28일 지도부 시국농성 △29일 서울·부산·대구 총력 규탄대회 △11월 5일 4시간 총파업과 전국 동시다발 집회 △11월 9일 전국노동자대회 등 강력한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전국민중연대, 민주노동당 등 각계 대표자들도 27일 긴급간담회를 열고 ‘(가칭)손해가압류·노동탄압 분쇄,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범국민대책위’를 구성해 29일부터 서울역에서 농성에 돌입하고 노동자대회를 범국민대회로 확대 개최할 것을 결의했다. (강성준)

<기획> 테러와의 전쟁, 피 흘리는 인권 ④ <끝>

## 테러로부터의 안전, 평등과 평화로부터 온다

3년 제 테러방지법 제정에 집착하는 국정원에 대해 절로 생기는 의문이 있다. 테러방지법이 없으면 테러를 예방하거나 진압할 수 없는가.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2월 내놓은 의견서에서 ‘현행법과 제도가 테러 행위에 관한 정보수집과 예방, 진압과 처벌을 위해 다양한 국가기관에 전문적 기능을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 법무부, 경찰, 국정원은 물론이요 군대와 건설교통부, 관세청까지 대테러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돼 있다는 것.

그렇다면 통합적인 대응 체제가 없어서 문제인가? 장주영 변호사는 “재난관리법이 국정원에 내놓는 테러방지법보다 더 효율적”이라며 “재난관리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체제를 효과적으로 꾸릴 수 있다”고 말한다. 자연재해가 아닌 재난에는 테러로 인한 피해도 당연히 포함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정원은 “다른 기관들이 관련 업무를 한다 해도 해외와 정보 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국정원이 국내에 분산된 정보들을 총괄해야 한다”며 테러방지법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한다. 이에 대해 이계수 교수는 “해외와의 정보교류협력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특정한 목적을 위해 수집된 정보는 그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돼야 한다’는 프라이버시 보호의 중요 원칙을 회피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분산된 정보들을 함부로 총괄하려는 국정원의 구상을 비판한다. 장 변호사 역시 “국정원 식대로라면 중앙정보부 때가 가장 효율적이었을 것이며, 이는 곧 권한을 남용하겠다는 의미”라고 꼬집는다. 문제는 민주적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비밀정보기관 간의 정보교류이고,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줄이라고 요구해야 할 상황인 것이다.

이제는 국정원의 논리를 쫓다 곧잘 잊어버리게 되는 본질적인 질문을 다시 던져야 한다. 이른바 ‘테러’는 왜 발생하는가? 이계수 교수는 오늘날의 테러를 “신자유주의의 세계화가 폭력적으로 관찰되며 미국에 의한 일국 지배체제가 공고화되고 있는 시대상황의

필연적 결과물”이라고 본다. 소수의 나라, 소수의 사람들 손에 권력과 부가 집중되는 상황에서 주변화된 나라 사람들의 절망적인 몸부림의 한 형태가

‘테러’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테러’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가? 국가기관의 물리력을 강화하는 것이 그 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초강력 통제국가, 이스라엘의 사례가 보여주고 있다. 결국 진정 안전을 원한다면, 나라간 사람들간의 빈부 격차를 줄이고 평화를 증진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이주영)

## 전국 인권활동가들, ‘서로’와 ‘우리’를 만나다

### 인권운동 내부의 차이 속 연대 모색...다양한 현안 열띤 토론

인권운동 진영의 상호 소통과 연대를 위한 두 번째 ‘전국인권활동가대회’가 지난 24일부터 2박 3일간 경기도 용인에서 열렸다. 21개 단체로 구성된 준비모임이 10개월간의 교류와 논의를 거쳐 마련한 이번 대회에는 전국 34개 단체, 100여 명의 인권활동가들이 참석해 의견을 나누고 상호유대를 다졌다.

첫날 “인권운동의 오늘과 내일을 이야기한다”를 주제로 열린 연대마당에서는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노동자 인권, 부안 반핵투쟁 등 총 10개 분야의 인권현안을 중심으로 올해 인권운동의 흐름과 과제를 짚어봤다. 방송사 비정규직 노조 주봉희 위원장은 힘들게 조합을 일궈 세워도 번번이 조합원들이 잘려나가 조합이 와해되어 온 가슴아픈 역사를 되짚었고, 한국동성애자연합 이평씨는 자신의 존재조차 드러내기 힘든 현실에서 여러 가지 인권문제를 풀어나가야 하는 동성애자 인권운동의 열악한 위치를 고백했다. 최근 송두울 교수 사건을 통해 전향제도가 다시 부활하고 운동사회 내부에서조차 ‘국가보안법’에 따른 자기검열’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었음에도 인권운동 진영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뼈아픈 자기 반성도 이어졌다.

이튿날에는 ‘반세계화와 인권’, ‘평화와 인권’ 등 총 12가지 주제별 워크숍이 열렸다. 발제와 토론을 중심으로 깊이있는 전략논의를 펼친 워크숍이 있었는가 하면, 역할극을 통해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폭력을 직접 체험해보고 대안을 모색해보는 실험적 형식의 워크숍도 진행됐다. 1회 대회의 결실로 꾸려진 ‘인권교육네트워크’는 장애인과 성소수자들의 특성을 배려하여 함께 즐기고 호흡할 수 있는 공동체놀이를 진행해 참가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특히 이번 대회는 인권단체들 간의 상호 이해와 연대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충실한 준비과정을 거쳤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준비모임에 결합했던 평화인권연대 손상열 상임활동가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연대를 모색한다는 원칙에 충실하고자 노력했던 준비과정이 의미 있었다”며 “특히 전쟁과 인권을 주제로 열린 3월포럼을 거쳐 인권단체들의 ‘평화권모임’이 결성됐고 6월포럼에서는 새만금 투쟁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등 인권운동의 관심과 활동 영역을 넓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던 것이 커다란 성과였다”고 회고했다. 손 활동가는 또 “2박3일 동안의 나눔의 자리가 향후 연대에 좋은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내년에는 더 많이 상호점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나갔으면 한다”고 소망을 밝혔다.

한편, 27일에는 이번 대회에서 공유된 바를 바탕으로 ‘이라크 파병, 단 한 명도 안 된다!’라는 성명서가 참가자 전원의 이름으로 발표됐다. 참가자 일동은 성명에서 최근 정부가 ‘전투병’ 대신 ‘치안유지군’이라는 말을 사용하며 전투병 파병의 불가피성을 역설하고 있는 기만적 행위에 분노하면서 “파괴와 학살전쟁에 노무현 정부는 과연 누구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 파병을 하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치안유지군’으로 포장된 단 한 명의 파병도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배경내)





# 집회 참석 이주노동자 '표적 연행' 시비

## 이주노동자 2명 강제출국 위기...경찰 가혹행위 주장

집회 뒤 이어진 행진 도중 집시법 위반 혐의로 연행됐던 이주노동자 2명이 강제출국 위기에 몰렸다.

지난 26일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 비두, 라산 씨는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 행진 도중 진압경찰에 의해 구로경찰서로 연행됐다. 목동출입국관리사무소를 거쳐 28일 화성외국인보호소로 이송됐다. 한국 체류기간이 3년 이상인 이들은 이에 따라 강제출국 대기상태에 놓이게 됐다. 게다가 두 사람 중 서울경인지역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아래 이주지부) 투쟁국장인 비두 씨는 지난해 9월 초 출입국관리소의 '표적단속'에 걸려 보호소에 수용됐다가 21일간의 단식농성과 국가인권위 진정을 거쳐 석달만에 일시 보호해제 조치로 풀려난 바 있어 우려를 더하고 있다.

이주지부는 두 사람이 웃옷이 찢기고 수갑을 뒤로 채인 채 종로에서 구로서까지 연행됐으며, 경찰이 수갑을 찬 채로 물을 먹도록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구로서에서 목동출입국관리소로 이송되는 과정에서는 경찰 8명이 "산에 가서 물어버리겠다"며 웃옷으로 얼굴을 감싼 채 집단폭행하기도 했다는 것이 이주지부의 주장이다. 선전국장 쏘냐 씨는 "경찰의 과잉대응과 관련해 종로서를 상대로 27일 국가인권위에 진정했고, 29일에는 구로서를 상대로 진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28일 화성 외국인보호소가 강제출국을 위한 사전조치로 방글라데시 대사관에 여권을 신청하려 했으나, 이들은 여권신청서 서명을 거부했다. 이들은 두 차례 면회한 민주노총 법률원 서상범 변호사는 "같이 연행됐던 한국인 1명이 다음 날 풀려난 것을 보면 시위에 단순 가담했다고 볼 수 있는데, 재입국을 금지하는 강제출국 조치는 이들 이주노동자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지적했다.

이주지부 사별 타과 지부장은 "똑같은 집회에서 연행됐는데도 한국인은 풀어주고 두 동지는 강제추방 하려는 것은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운동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위협하는 것"이라며 즉

각 석방을 요구했다. 이주지부는 당일 집회 전에 같은 장소에서 '이주노동자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고용허가제 폐지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노

동3권 보장 등을 요구했으며, 지난 7월 31일 고용허가제 통과 직후부터 지금까지 안산, 의정부, 일산 등지에서 잇달아 집회를 열어왔다.

민주노총도 29일 성명서를 내어 온갖 험한 일을 하며 한국경제를 지탱시키고 있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표적 연행과 강제추방을 규탄하고 이들의 즉각 석방을 요구할 계획이다. (강성준)

### <요약> 테러방지법 수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 의견서(2003.10.22)

기존 테러방지법안과 현재의 수정안을 대비 검토한 결과, 현재의 수정안이 기존 법안의 일부 조항을 삭제하는 등 형식적으로는 상당 부분 축소 조정됐지만, 내용상으로는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악된 부분이 많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상당수 독소 조항이 그대로 남아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위원회는 '테러방지법안' 수정안의 입법에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한다.

□ 수정안이 기존 테러방지법안보다 더 개악된 부분

▶ 수정안 제12조는 원안에서 그나마 규정했던 군 병력의 활동범위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출동한 군 병력의 자의적 업무 집행 소지를 남기고 있으며 그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우려된다.

▶ 수정안은 '대테러활동'과 테러방지법의 제정 목적의 범위가 광범위해져 자의적인 법 집행의 우려가 더 커졌다.

▶ 자의적 적용 가능성이 있는 테러의 범주를 통신비밀보호법의 적용대상에 포함시켜 국민의 통신의 자유와 비밀을 광범위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 원안은 '국내에 있는' 외국인의 '출국조치'로 한정되어 있으나, 수정안은 '국외에 있는' 테러단체 구성원의 '출입국 규제'로 그 범위가 확대되어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소지가 더 강화된 반면, 이러한 기본권 제한 시에 국제법상 지켜야 할 '난민인정 심사' 등 절차법적인 내용이 빠져있다.

□ 지난해 2월 인권위 의견 중 이번 수정안에 전혀 수렴이 되지 않은 부분

▶ 법안은 대테러정책의 수립과 집행 등을 위하여 국가조직체계와 기능을 재편성하고 있다. 그 주요한 내용은 첫째, 대통령 소속 하에 대테러대책회의를 두고 이를 정점으로 하여 국가기관을 일련의 조직체로 편성하고, 둘째, 테러의 진압 등을 위하여 특수부대와 군 병력 등이 계엄을 통하지 않는 방법으로 치안유지활동에 동원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 이러한 국가체계 재편성의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이 핵심적인 기능을 차지하고 나아가 군 특수부대와 군 병력에 대한 통제권까지 장악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있어 국가정보원 법에서 규정한 기능과 권한을 크게 확대하고 있고, 이는 국가정보원의 개혁 방향에도 역행한다.

위원회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법과 제도로 테러방지대책이 가능하기에 별도의 입법 추진은 근거가 부족하다. 둘째, 군 특수부대인 대통령에 대한 건의나 국회 통보조차 없이 대테러센터의 장인 국가정보원장의 판단에 의해 군의 특수부대 출동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우려된다. 셋째,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이 군대는 물론 일반 국가기관의 행정까지 개입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국정원의 권한이 크게 강화될 수 있고 이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될 소지가 많아졌다. 넷째, 상당수 조항에 현행법과 국제인권법 위반 소지가 여전히 남아있는 점 등 문제점을 전면 제거하지 않는 한 이 법안을 제정해서는 안된다.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3년 10월 30일(목)  
제 2444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배경내

## "노동자와 함께 끝까지 간다"

### 각계각층 연대투쟁 선언...정부대책, 미봉책도 안돼

노조간부들의 잇따른 자살 및 분신과 관련해 영등포 경찰서장의 '기획분신' 발언과 경총의 '배후조종설' 주장이 사회적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각계각층이 강력한 연대투쟁을 선언하고 나섰다.

57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29일 오전 10시 서울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탄압 중단 △노동 3권 행사에 대한 손배·가압류 철회 △비정규직 차별 철폐 △민중생존권 보장을 촉구했다. 범대위는 "정치권과 재벌 등의 잘못 때문에 오늘의 참혹한 이 현실이 초래되었는데 왜 애꿎은 노동자만 죽어야 하나?"며 "죽음을 부르는 노동탄압정책을 당장 중단하고,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범대위는 기자회견 직후 비상시국농성에 돌입하는 한편 오는 11월 1일에는 범국민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사회단체들의 기자회견에 이어 인권단체들 역시 같은 날 같은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노동기본권 탄압 중단과 이라크 파병 결정 철회,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를 촉구했다. 다산인권센터 등 29개 인권단체들은 "더 이상 노동자, 민중이 죽어가는 현실을 지켜보고만 있을 순 없다"며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현시기 노동자 민중의 투쟁에 적극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자들의 투쟁도 계속됐다. 29일 오후 2시 서울과 부산, 대구에서는 '손배가압류 철폐! 노동탄압 분쇄! 비정규차별 철폐! 파병 반대! 노무현정권 규탄 전국노동자대회'가 동시에 개최됐다. 종묘공원에서 개최된 서울대 회에는 약 2천여명의 노동자, 시민,

학생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파업 백15일제를 맞고 있는 한국 네슬레 노조의 전택수 위원장은 "사측은 조합과 성실교섭을 약속하고서도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조합간부들에 대한 민형사상 고소와 부당징계, 해고를 자행했으며, 조합 간부 8명에게 2억원을 가압류했다"며 노동탄압의 현실을 고발했다.

#### "정부부터 가압류 취하해라!"

현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강도 높은 비난이 잇따르자 정부는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갖고 합동 담화문을 발표했다. 담화문의 주요골자는 "손배가압류 남용을 억제하고,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법을 조속히 마련

하겠다"는 것.

이에 대해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은 이날 집회 대회사를 통해 정부의 대책을 강하게 비난했다. 단 위원장은 "정부가 법적으로 가압류의 상한선을 책정해 남용을 억제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모든 현장에서 언제든 손배가압류가 가능할 수 있게끔 만들 뿐이며, 비정규직 차별 해소라고 내놓은 정책 역시 비정규직을 전 업종으로 확대 허용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올바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정부기관부터 먼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고, 정부산하기관 5곳에서 노조에 가한 4백억에 이르는 가압류부터 취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탑골공원까지 행진을 하려했으나 경찰이 행진을 가로막으면서 참가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해 집회장에는 한때 팽팽한 긴장이 감돌았다. 이 과정에서 집회참가자 6명이 연행됐으며, 참가자들은 오후 7시 30분까지 연행자 석방과 평화시위 보장을 요구하며 집회를 계속했다. (양승훈)

## 만화사랑방

이동수



# 반인권 국가범죄에 소멸시효도 배제해야

## 인권단체들, '수지김' 사건 법적 의미 분석 토론회 열어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처벌을 가로막아온 공소시효와 함께 민사상의 소멸시효도 재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반인도적국가범죄공소시효배제운동사 회단체협의회'(이하 공소시효배제협의 체)는 28일 참여연대 강당에서 "수지 김 사건" 판결로 본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의 제문제"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지난 8월 14일 서울지방법원은 이 사건에 대한 국가 책임을 물어 수지김의 유족들에게 48억을 배상하 라고 판결한 바 있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전해철 변호사는 "국가 기관의 불법행위가 명백히

밝혀지더라도 민사상 소멸시효제도 때문에 피해자들의 권리구제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법원이 '수지 김 사건'에 대해 사건 발생시점이 아닌 인지시점부터 소멸시효를 적용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국가의 사건 은폐 조작 행위가 사건 발생 시점인 1987년에만이 아니라 2001년 11월까지 지속되었던 인정하였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전 변호사는 "개별 사건별로 법원 판결로 권리구제를 받기는 어렵기 때문에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소시효 문제를 발제한 민주노동당 인권위원회의 김석연 변호사는 반

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서는 아예 공소시효를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개인의 범죄행위와 국가 기관의 범죄행위는 엄연히 차원이 다르다"며 "국가범죄와 함께 국가기관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거나 진실을 규명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는 국가와 국민간의 신뢰측면에서 공소시효를 배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은폐·조작사건도 공소시효 배제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김희수 의원 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은 "국가 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국가가 소멸시효 주장을 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내용의 입법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신설하는 방법"을 새롭게 제시해 참가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생명 침해에 관한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은폐·조작 등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입법 과정에서 공소시효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인권위원장 이주영 의원은 "11월 법무부가 국제형사재판소 로마 규정 이행에 관한 법률안(이하 이행입법)을 국회에 제출하게 되면, 이 법률 제정을 둘러싸고 국회 법사위에서 공소시효 문제가 다루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앞으로 반인권적 범죄에 대해서 이 이행법률로 해결하고, 과거의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에 대해서는 개별 사건마다 특별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사견임을 전제로 의견을 밝혔다.

공소시효배제협의체는 이날 토론회에 이어 오는 11월 법무부의 이행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이 법률에 반인권적 범죄도 포함시키고, 민사소멸시효도 배제되는 등의 안을 마련,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한편 '수지 김' 사건과 관련해 서울지 법은 이들 유족에 대한 위자료지급과 관련해 국가가 구상권 행사 대상으로 잠정 결정된 이해구 전 안기부 1차장과 이학봉 전 2차장, 김씨 살인죄로 복역중인 윤태식 씨의 부동산에 대해 국가의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임국현·박래균)

## "죽음의 일터를 건강한 노동의 장으로"

### 24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창립

"놀랍게도 산업 현장에서 생기는 질병을 분석해 보면 개인적인 원인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직종별 특성, 노동 환경 등이 대부분의 원인인데, 갑작스런 작업환경 변화로 인한 노동강도 강화는 산재로 인한 사망,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개소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소장 이훈구, 이하 연구소) 사무처장 배영희 씨는 직업병과 산업재해의 원인을 이와 같이 분석한다.

연구소는 2002년 9월, 노동현장에서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근골격계 대응을 위해 모인 '근골격계직업병공동연구단'이 모태가 되어 올해 3월부터 본격적인 준비위원회를 꾸린 후 노동자들의 몸을 갉아먹는 직업병과 산업재해의 근절을 위해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질병이나 산재가 발생한 다음 요양 승인을 받는 소극적인 대처를 넘어서 그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구조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건강한 노동 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이 가장 우선되는 목적이라고 연구소 측은 창립 취지를 설명한다. 준비기간동안의 연구 결과 IMF이후로 급격히 증가한 산업재해의 원인은 무리한 인원감축으로 인한 작업량의 증가, 비정규직에 대한 살인적인 노동 조건에서 비롯된 것임이 밝혀졌다. 연구소가 매달 접하는 사망 사고가 2건이 넘는다는 통계는 현재 노동 현장이 죽음의 일터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배 사무처장은 지적한다.

현재 두원정공, 풀무원 춘천공장, 삼호중공업, 서울도시철도공사 등에서 살인적인 노동 환경에 맞서 투쟁 중이며 연구소는 교육과 개선책을 제시하는 등 노동자들과 함께 싸우고 있다. 반가운 소식은 두원정공에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1인 중심으로 굽어 있던 라인이 투쟁을 통해 정상화되기 시작했다는 것. 노동자의 자주적 참여로 질병과 죽음을 이겨낼 수 있다고 확신하는 연구소 측은 현장연구원을 수시로 모집하고 있으며 노동보건잡지 창간 준비호 <일터>를 4번째 발행했다. 전국 설립을 목표로 현재 부산에서 설립 준비중이다. (www.kilsh.or.kr) (김정아)

# 인권하루소식

##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3년 10월 31일(금)

제 2445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배경내

## 인권위 "경찰, 피의자 물고문 의심"

### 관련자 8명 수사의뢰...자백강요 고문수사 여전 우려

경찰이 물고문과 폭행으로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고 볼 만한 유력한 증거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해 포착돼 아직도 일선 수사과정에서 고문이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30일 인권위는 신용카드 절도 혐의로 체포돼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구타와 욕설, 물고문을 당했다며 김모 씨가 지난해 6월 부산진 경찰서 경찰관들을 상대로 낸 진정사건을 조사한 뒤, 수사관련자 8명을 검찰총장에게 수사의뢰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5월 27일 부산진경찰서는 짬짬방에서 신용카드를 훔쳐 사용한 혐의로 김모 씨를 공모자들과 함께 긴급 체포해 조사를 시작했다. 김모 씨가 인권위에 진정한 내용에 따르면, 같은 날 이모 경위와 김모 경사 등이 수사 과정에서 △손과 나무 빗자루 등으로 구타하고 △얼굴에 침을 뱉고 △팔다리를 포승으로 묶은 채 얼굴에 3차례 물을 붓는 등 고문을 가하며 끼고 있던 반지의 출처를 추궁해 훔친 것이라고 거짓자백을 했다는 것.

이후 김모 씨는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와 상고 이유서에서 연이어 "가혹행위로 거짓자백 했다"고 호소했으나,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경찰 진술과 동일하고 신빙성이 없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판부에 의해 기각돼 현재 복역 중이다. 하지만 반지를 도난 당했다는 피해자는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진정인이 건강한 상태에서 체포됐고 수사과정에서 반항, 자해하지 않았는데도 경찰 조사 후 유치장 입감 직후부터 타박상 등으로 고통을 호소하며 식사를 하지 못한 채 누워있

었던 점 △조사장소가 강력반 사무실이 아니라 폐쇄된 사무실이었고 단독 조사였던 점 △수사 참고인과 유치장 신체검사 담당자 등이 "조사 받고 나온 직후 머리카락과 상의가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조사 받던 사무실에서 경찰관이 양동이의 수건을 들고 나왔다", "조사 직후 진정인의 손목 부위에 빨강색 묶인 흔적이 있었다"고 진술한 점을 근거로 "경찰관들이 반지의 출처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구타와 물

## "대사관 1백미터 내 집회 전면 금지 위헌"

### 현재, '예외적 허용 규정 뒤야'...집시법 대폭 개정 필요

앞으로는 미 대사관 앞 집회나 외국 대사관이 들어서 있는 기업빌딩 앞 집회와 행진이 가능하게 됐다.

30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희 재판관)는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 기관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백미터 이내의 장소에서의 옥외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집회및시위에 관한법률 제11조 1호 중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재판관 7: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조항은 이날 법률로서의 효력을 상실했다.

재판부는 이 조항의 보호법익으로 '외교기관에의 자유로운 출입, 원활한 업무 보장, 외교관의 신체적 안전'을 제시하면서 △외교기관에 대한 집회가 아니라 우연히 금지장소 내에 위치한 다른 항의대상에 대한 집회의 경우 △평화적 피켓시위와 같은 소규모 집회의 경우 △예정된 집회가 업무가 없는 휴일에 행해지는 경우 등 '보호법익에

고문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서울지검 물고문 치사 사건 이후 '인권보호 수사 준칙'을 '법무장관 훈령'으로 제정해 올해부터 시행해 왔다. 수사준칙은 고문 등 가혹행위를 통해 확보한 자백과 진술거부권을 알려주지 않거나 변호인 접견을 제한하고 얻어낸 자백을 유죄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4월 친구의 허위자백에 의해 살인범으로 몰려 구속된 안모 씨가 18일 동안 구치소에 갇혀 있다 진범이 밝혀짐에 따라 무혐의로 풀려나기도 하는 등 일선에서는 과학적인 수사기법보다는 '고문을 통한 손쉬운 자백 받아내기'가 활개를 치고 있다. (강성준)

대한 위험이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집회를 허용하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2000년 2월 미 대사관과 일본대사관으로부터 1백미터 이내라는 이유로 광화문 시민열린마당 내 집회를 금지당한 전국연합과 같은 해 4월 외국 대사관이 있다는 이유로 삼성본관과 삼성생명빌딩 앞 행진을 금지당한 '삼성그룹 해고자 원직복직 투쟁위원회'(아래 삼성해복투)가 그해 8월과 11월 각각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현재 결정에 대해 민주노동당 법원의 권두섭 변호사는 "당연한 결정이 너무 늦게 나왔다"고 잘라 말했다. 현재가 무려 3년 가량이나 결정을 미루고 있는 사이 이 독소조항으로 인해 집회·시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당하거나 집시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당한 피해자들이 대거 양산돼 왔다는 것이다.

또 이번 현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집회·시위의 자유의 앞날이(=2면에 계속)

# 용화여고 학생들과 함께 권 '학생인권' 쟁점 네이스 반대 촛불문화제, 학생인권 투쟁 현장 찾아가

'NO NEIS와 정보인권수호를 위한 촛불문화제'가 29일 서울 용화여고 근처 창동 문화마당에서 열렸다. 학생들의 정보인권을 침해하는 네이스 반대를 위해 지난 8월 27일부터 매주 수요일 열리고 있는 촛불문화제는 서울 곳곳을 순회하며 어느덧 9회를 맞이했다.

이날 촛불문화제에는 용화여고 학생 80여명과 전교조 조합원 등 200여명이 참석해 네이스 반대와 파면된 용화여고 진응용 교사의 복직을 촉구하는 촛불을 불태웠다.

용화여고는 지난해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 학교 비판글을 올린 허성혜 학생을 퇴학시켜 물의를 빚은 데 이어 지난 9일에는 학생의 인권을 옹호하고 재단비리를 비판해 온 진응용 국어담당 교사를 '수업시간에 자는 학생을 깨우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파면시켜 '보

복성 인사조치'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진 교사가 파면된 이래 이 학교 학생들은 아침, 점심, 저녁으로 1백여명이 참여하는 교내집회를 열며 싸우고 있다. 이처럼 반인권적 행정을 일삼고 있는 용화여고 측에 항의하기 위해 이날 촛불문화제도 마련됐다.

무대에 오른 용화여고 최재욱 학생회장은 "모든 학생들이 편하고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생회장 자리에 임했는데, 정작 선생님이 쫓겨나고 다른 친구들이 이에 항의하는 상황에서는 혼자만의 생각 뒤에 숨어있었다"며 "앞으로는 선생님이 복귀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해 학생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네이스 반대와 청소년의 권리를 주제로 한 '청소년이 주인이다'와 '현실'이란 두 곡을 경쾌한 랩으로 풀어낸 청소년

랩퍼 박훈식 씨의 공연에 이어 용화여고 사태를 다룬 영상물도 상영됐다. 학생들은 학교 관계자가 나올 때는 야유를 보냈고, 진 교사가 나올 때면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자신의 존재를 잊지 않고 함께 싸우고 있는 제자들에게 감사하다는 진 교사는 "학생인권을 주장하고 학교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잘못일 수는 없다. 반드시 학교로 돌아갈 것이다"며 결의를 다졌다. 이에 학생들은 "선생님 사랑해요"를 외치며 진 교사를 응원했다. (임국현)

(이면에서 이어짐) 밝지만은 않다.

권 변호사는 "현행 집시법에는 11조뿐 아니라 5조 등 경찰의 자의적 법 해석을 가능케 하는 여러 가지 독소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얼마든지 특정 단체나 특정 주제의 집회를 통제할 수 있다"면서 "이번 결정을 계기로 대폭적인 집시법 개정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위장 집회신고를 통해 집회를 원천봉쇄하는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장치가 개정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당장 삼성해복투가 이날 현재 결정이 나오자마자 삼성본관과 삼성생명 건물 앞 집회신고를 내려고 했을 때, 이미 삼성직원 명의로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캠페인'이 같은 장소에서 향후 1년간 신고돼 있어 집회를 또다시 봉쇄당했다.

집회 원천봉쇄 위한 위장신고 판철 등 헌법재판소가 이번 결정에서 "집회장소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만 집회의 자유가 비로소 효과적으로 보장된다"고 하면서도 1백미터 제한 규정에 대해서는 "필요 최소한의 것으로 허용된다"고 밝힌 점도 향후 넘어야 할 장벽이다.

이와 함께 집회·시위의 자유 수준을 현행보다 더욱 후퇴시키려는 갖가지 법 개악 움직임도 저지해야 한다. 현재 국회에는 △집회금지 장소에 '종묘공원'을 추가하는 집시법 개정안 △집회금지구역 1백미터에서 3백미터로 확대하는 집시법 개정안 △초·중·고교와 대학 부근의 집회·시위를 금지·제한할 수 있는 집시법 개정안 △집회·시위에서 8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발생할 시 이를 처벌하도록 하는 소음및진동규제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배경내)

# 인권하루소식

2003년 11월

(제 2446호 ~ 제 2466호)

## "국정원에 더 포악한 무기 들려줘서는 안돼"

민기협 목요집회, 테러방지법 반대 목소리 터져 나와

현재 국회 정보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30일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아래 민기협) 목요 집회에 모인 인권사회단체들은 "국가정보원(아래 국정원)의 권력만을 강화해 주는 테러방지법 제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국회와 정부에 강력 촉구했다.

민기협 회원 서경순 씨는 "국정원이 2001년에는 월드컵을 핑계삼아 졸속으로 입법하려 했다가 국민적 저항으로 무산되었던 테러방지법 제정을 최근 파병정국을 틈타 다시 밀어붙이고 있다"고 힐난하고 "국가보안법도 폐지되지 않은 마당에 국민을 억압하는 또 다른 악법이 필요하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특히 정형근 의원과 같이 정보기관에서 인권유린을 일삼던 이가 대테러를 발미로 국정원의 권한강화를 주장하는 것은 천만부당한 짓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정원이 민주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내지 않고 스티슬쩍 이 법을 통과시키려 한다고 비판한 인권운동사랑방 이주영 상임활동가는 "군대출동, 국가대테러대책회의 설립 등 지나치게 많은 권한이 국정원에 집중되어 있는 테러방지법은 국가 안전이라는 미명 아래 오히려 공포 사회를 만드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는 "테러가 과연 무엇이며 왜 일어나는가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스라엘 등 중동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테러의 양상을 보면 테러가 '강대국에 대한 약소국의 절망적 항거'임을 일깨워 준다며 "국가기관의 물리적 강화가 결코 테러로부터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국회가 이러한 국민의 우려와 분노에 주목할지, 아니면 국정원에 더 포악한 무기를 들려주는 길을 선택할지 주목된다. (김정아)